

창립 30주년 기념 총서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

이해정 · 이용화 외



발 간 사

2016년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주변국들 간 이해관계의 상충은 한반도에 新냉전구도를 형성시켜 동북아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도 상존합니다.

최근 북한은 시장화 노력 등을 통해 사경제화(私經濟化)가 급속히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경협 중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對中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對北 정책 무게 중심도 중장기 차원의 통일준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통일과 남북관계 관련 연구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한 눈에 이해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일소하는 한편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연구총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총서는 남북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최초의 민간 전문연구기관인 통일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해 온 본 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 간 쌓아 온 관련 연구 역량을 집중시켜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서가 이 분야의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남북 및 통일에 대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총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통일연구센터는 물론 관련 연구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6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강인수

주요 목차

제1부 북한 경제의 변화

1

제1장 북한의 대내 경제 / 3

- 최근 북한 경제 현황 / 5
- 최근 북한의 대내 경제 정책 변화 / 17
- 북한의 사경제화(私經濟化) 진전 현황 / 25

제2장 북한의 대외 경제 / 39

-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 변화 / 41
-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 / 51
- 북중 경협 현황 / 61

제2부 남북 교류 실태

73

제1장 남북 간 경제 교류 / 75

- 남북 경협 28년 현황 / 77
- 부문별 남북 경협 현황 / 85
- 다자협력 추진 현황 / 103

제2장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 119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 121
- 주요 부문별 사회문화 교류 현황 / 133
- 남한의 對북 인도적 지원 추이 / 145

제1장 통일경제의 현주소 / 159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161
-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 169
-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 / 179

제2장 통일경제의 미래 / 191

-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 모색 / 193
- 통일경제의 미래상 / 201
- 통일한국의 유망 산업 / 215

제1부

북한 경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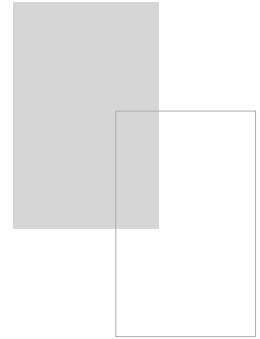
제1장 북한의 대내 경제

제2장 북한의 대외 경제

제1장

북한의 대내 경제

- 최근 북한 경제 현황
- 최근 북한의 대내 경제 정책 변화
- 북한의 사경제화(私經濟化) 진전 현황



최근 북한 경제 현황¹⁾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보건지표와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
-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상을 파악하는 일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북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며, 향후 남북통일 경제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임
- 북한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남한과 격차가 감소한다면 향후 통일비용 감소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북한 경제력의 급격한 쇠퇴로 정치적인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남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1)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2016.9.28.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2010년부터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국가의 경제성장과 보건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²⁾
 - 2011년에는 기존의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의 설명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곡물생산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개선³⁾
 - 자료가 제한적인 북한의 특성상 국가의 경제력과 상관관계가 높고 자료 입수가 용이한 영아사망률,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산출
 -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은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위생 악화, 영양섭취 부족, 의료혜택 감소, 그리고 보건환경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북한 소득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하고자 함

2.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1) 2015년 북한 경제의 현황

- (대내) 2015년 북한 경제는 악화된 기상 여건으로 식량 작황이 줄어들었고,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
 - 농업 생산량 개선 : 2015년은 상반기 동안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음
 -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5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77.8만 톤으로 2014년 534.7만 톤보다 10.7% 줄어든 것으로 추정
 - 쌀 생산량은 194.6만 톤으로 2014년 262.6만 톤보다 25.9% 감소, 옥수수 생산량은 2014년 234.9만 톤보다 2.6% 감소한 228.8만 톤을 기록

2) 현대경제연구원, “보건 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 추정 - 북한 경제,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2011 . 8. 5.

3) 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2012 . 2. 24.

- 물가 비교적 안정 : 북한의 물가를 나타내는 대리변수 중 하나인 북한 쌀 가격은 2015년에 과거와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
 - 화폐개혁 이후 불안정하였던 북한 물가는 2013년 이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의 쌀 가격은 2015년 월평균 kg당 5,200원으로 2014년 4,925원에 비해 5.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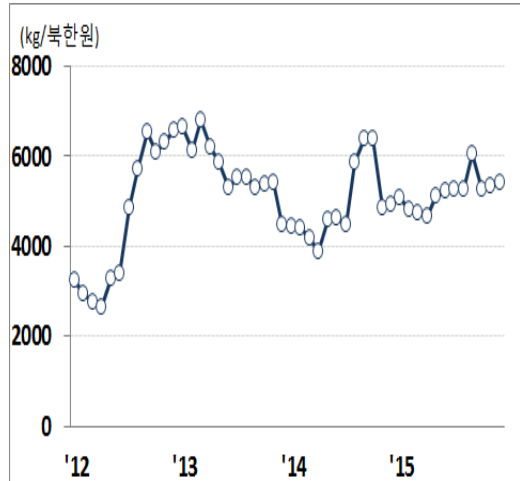
〈 북한 곡물 생산량 〉

(단위 : 1,000톤, %)

	2014	2015	증가율
곡물 생산량	5,347	4,778	-10.6
쌀	2,626	1,946	-25.9
옥수수	2,349	2,288	-2.6
감자	158	168	6.8
대두	160	220	37.2
기타 곡물	54	156	190.9

자료 :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주 : 곡물 생산량은 주 작물 기준.

〈 북한 쌀 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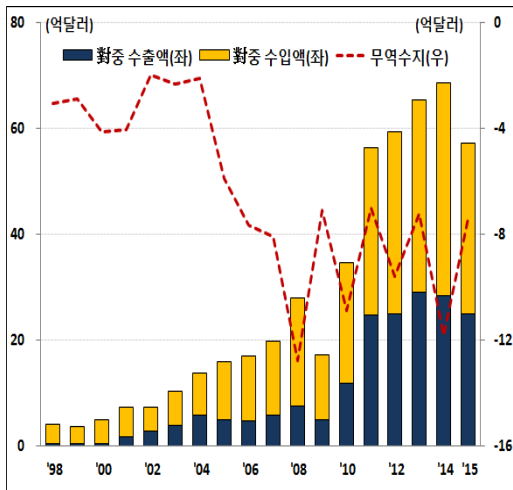


자료 : 데일리 NK
 주 : 평양, 신의주, 해산 지역 평균.

- (대외) 대외적으로는 북중 교역은 감소하였고, 남북 교역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소폭 증가
- 북중 교역 축소 : 북중 교역은 지하자원 수출이 줄어든 데 기인하여 전년 대비 감소
 - 2015년 북중 교역액은 57.1억 달러를 달성해 2014년 68.6억 달러 대비 16.8% 감소함
 -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은 2014년 28.4억 달러 대비 12.6% 감소한 24.8억 달러를 기록, 수입액은 2012년 40.2억 달러 대비 12.6% 줄어든 32.3억 달러를 기록
 -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여 2014년도 11.8억 달러 적자에서 2015년도 7.4억 달러 적자로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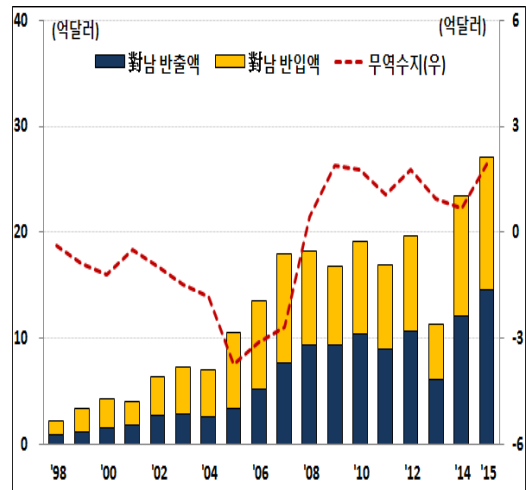
- 남북 교역 소폭 증가 : 2014년 이후 정상화되었던 개성공단의 영향으로 2015년 남북 교역은 양적으로 증가⁴⁾
 - 2015년 남북 교역액은 전년대비 15.7% 늘어난 27.1억 달러를 기록하며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 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출액은 14.5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12.1억 달러보다 20.4% 증가, 반입액은 12.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11.4억 달러보다 10.7% 늘어남

〈 북한의 對중국 교역규모 〉



자료 : 무역협회.

〈 북한의 對남한 교역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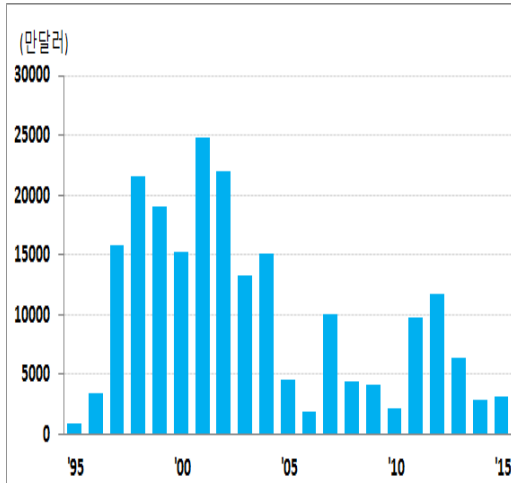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국제사회 지원 소폭 증가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5년에도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며 소폭 증가에 그침
 - 2015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3,187만 달러로 2014년 2,835만 달러에 비해 다소 늘어났지만 2011년(9,771만 달러), 2012년(11,748달러)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함
 - 분야별 지원액은 식량·인도적지원이 1,812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물·위생·보건에 관련된 지원이 317만 달러, 금융 148만 달러, 보건 61만 달러, 농업 30만 달러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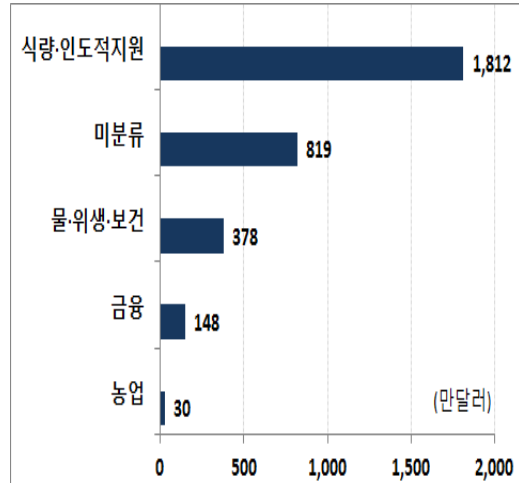
4)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다시 폐쇄.

〈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 2015년 분야별 지원액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2)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 전세계 198개국의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 후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GDP를 추정

- 회귀식 : 종속변수에 1인당 GDP를 독립변수에는 영아사망률을 이용하여 패널 분석(Panel Analysis) 중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시행
 - 영아사망률에 log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child mortality와 UN의 자료
 - 1인당 GDP에 log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IMF에서 발표한 자료

$$(분석모형) \quad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i =국가, t =연도

- 북한 영아사망률에 북한 곡물 생산량⁵⁾을 추가적으로 고려⁶⁾
 - 5년 간격의 북한 영아 사망률에 곡물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1년 간격의 영아사망률을 산출

-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급격히 감소한 이후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식량농업기구가 매년 말에 실시하는 북한 작황조사에서 발표한 생산량을 사용
 -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고난의 행군 기간인 1990년대 중반 급격히 감소
 - 곡물 생산량은 1990년대 후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2000년대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0년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최근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⁷⁾ 시절 급격히 증가한 이후 최근 서서히 감소세를 보임

- (추정 결과) 회귀분석 결과⁸⁾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013달러로, 2014년의 930달러보다 83달러 증가⁹⁾

- 북한 경제의 추이 : 북한 GDP를 추정된 결과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014년의 930달러보다 83달러 증가한 1,013달러로 추정됨
 - 최근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854달러, 2014년 930달러, 2015년 1,013달러로 경제력이 소폭 개선

5)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곡물생산량의 상관관계는 -0.6 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

6)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으나 여전히 급격한 경제 변동 설명에는 한계를 가짐.

7) 1990년대 중, 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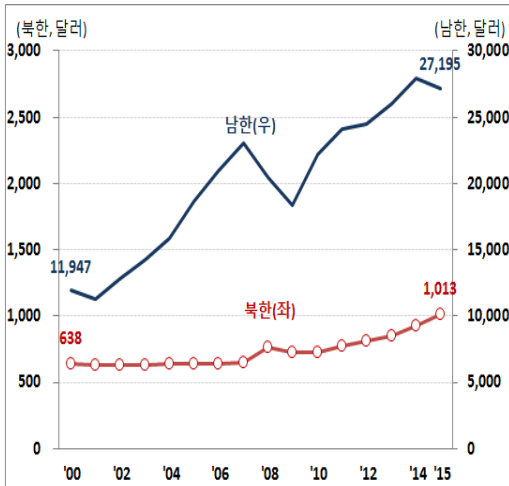
8) 회귀분석 결과 α 값은 11.13, β 값은 -0.69 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유의수준 1% 안에서 유의함.

영아사망률의 log값이 1단위 변할 때 1인당 GDP의 log값이 -0.69 만큼 감소함을 의미.

9) 1인당 GDP는 명목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실질 성장률을 의미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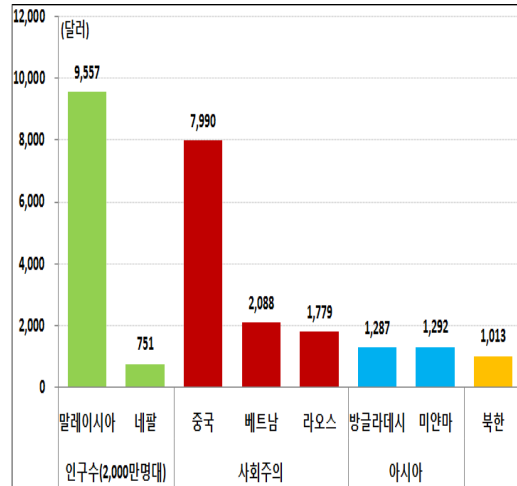
- 국가 간 비교 :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며 남한의 약 3% 수준에 불과
-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7,990달러), 베트남(2,088달러), 라오스(1,779달러) 보다 낮은 수준
-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아시아 국가로는 방글라데시(1,287달러), 미얀마(1,292달러) 등임
- 2015년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인 2만 7,195달러에 비해 약 3.7% 수준에 불과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IMF

〈 국가 간 1인당 GDP 비교 〉



주 : 2015년 기준이며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나머지 국가는 IMF 추정치

〈 부록 1 〉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결과

(단위: 달러)

년도	남한	북한				
		HRI	한국은행	UN	김병연	북한공식발표
1970	275	636	-	384	587	-
1971	298	661	-	413	598	-
1972	318	686	-	443	606	-
1973	397	704	-	477	617	-
1974	543	724	-	515	639	-
1975	599	747	-	558	641	-
1976	807	772	-	571	653	-
1977	1,018	802	-	587	626	-
1978	1,354	819	-	604	700	-
1979	1,708	837	-	622	654	-
1980	1,711	856	-	639	721	-
1981	1,870	878	-	653	760	-
1982	1,978	897	-	808	744	-
1983	2,181	912	-	794	768	-
1984	2,391	929	-	745	738	-
1985	2,458	946	-	722	738	-
1986	2,803	965	-	805	732	-
1987	3,511	986	-	836	744	-
1988	4,686	920	-	764	765	-
1989	5,736	863	-	811	786	-
1990	6,513	815	1,139	735	720	-
1991	7,523	757	1,115	663	683	-
1992	8,002	710	1,013	593	599	990
1993	8,741	687	970	503	554	991
1994	10,207	670	989	384	562	722
1995	12,340	662	1,026	222	549	587
1996	13,137	656	975	479	489	482
1997	12,133	650	794	462	472	464
1998	8,083	645	564	456	412	458
1999	10,410	641	701	452	426	454
2000	11,947	638	739	462	466	464
2001	11,259	634	686	476	433	478
2002	12,789	630	739	468	465	490
2003	14,220	633	792	471	476	524
2004	15,922	637	887	473	478	546
2005	18,658	640	1,027	548	497	-
2006	20,922	644	1,078	575	496	-
2007	23,102	647	1,120	597	471	-
2008	20,475	761	1,036	551	-	-
2009	18,339	728	932	494	-	-
2010	22,151	724	1,074	570	-	-
2011	24,156	770	1,204	638	-	-
2012	24,454	815	1,217	643	-	-
2013	25,998	854	1,259	666	-	-
2014	27,970	930	1,318	696	-	-
2015	27,195	1,013	1,231	-	-	-

〈 부록 2 〉 2015년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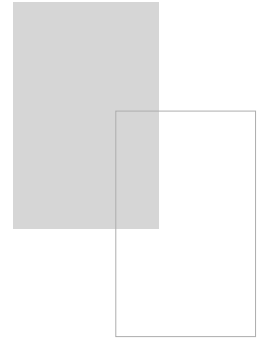
(단위 : 달러)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	룩셈부르크	101,994	41	세인트키츠네비스	16,110
2	스위스	80,675	42	팔라우	16,070
3	카타르	76,576	43	슬로바키아	15,992
4	노르웨이	74,822	44	바베이도스	15,774
5	미국	55,805	45	우루과이	15,748
6	싱가폴	52,888	46	오만	15,233
7	덴마크	52,114	47	세이셸	14,941
8	아일랜드	51,351	48	앤티카바부다	14,414
9	호주	50,962	49	리투아니아	14,210
10	아이슬란드	50,855	50	라트비아	13,619
11	스웨덴	49,866	51	아르헨티나	13,589
12	산마리노	49,847	52	칠레	13,341
13	영국	43,771	53	파나마	13,013
14	오스트리아	43,724	54	폴란드	12,495
15	네덜란드	43,603	55	헝가리	12,240
16	캐나다	43,332	56	적도기니	11,762
17	핀란드	41,974	57	크로아티아	11,573
18	독일	40,997	58	네바논	11,237
19	벨기에	40,107	59	코스타리카	10,936
20	프랑스	37,675	60	카자흐스탄	9,796
21	뉴질랜드	37,045	61	말레이시아	9,557
22	아랍에미리트	36,060	62	터키	9,437
23	이스라엘	35,343	63	수리남	9,306
24	일본	32,486	64	모리셔스	9,218
25	이탈리아	29,867	65	러시아	9,055
26	쿠웨이트	29,363	66	멕시코	9,009
27	브루나이	28,237	67	몰디브	9,000
28	한국	27,195	68	그레나다	8,937
29	스페인	25,865	69	루마니아	8,906
30	바하마	23,903	70	브라질	8,670
31	바레인	23,510	71	세인트루시아	8,192
32	몰타	22,829	72	중국	7,990
33	사이프러스	22,587	73	베네주엘라	7,745
34	사우디아라비아	20,813	74	가봉	7,736
35	슬로베니아	20,732	75	도미니카	7,030
36	포르투갈	19,122	7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6,882
37	트리니다드토바고	18,086	77	불가리아	6,832
38	그리스	18,064	78	도미니카공화국	6,756
39	에스토니아	17,288	79	투르크메니스탄	6,622
40	체코	17,257	80	몬테네그로	6,489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81	콜롬비아	6,084	121	투발루	3,015
82	에콰도르	6,071	122	볼리비아	2,886
83	리비아	6,059	123	필리핀	2,858
84	보츠와나	6,041	124	바누아투	2,847
85	페루	6,021	125	부탄	2,843
86	나미비아	5,777	126	나이지리아	2,743
87	벨라루시	5,749	127	온두라스	2,407
88	태국	5,742	128	동티모르	2,244
89	아제르바이잔	5,739	129	수단	2,175
90	남아프리카	5,695	130	우즈베키스탄	2,121
91	요르단	5,513	131	베트남	2,088
92	피지	5,374	132	파푸아뉴기니	2,085
93	세르비아	5,120	133	콩고	2,032
94	자메이카	4,948	134	우크라이나	2,005
95	이란	4,877	135	솔로몬	1,952
96	벨리즈	4,842	136	니카라과	1,949
97	이라크	4,819	137	몰도바	1,805
98	마케도니아	4,787	138	지부티	1,788
99	사모아	4,334	139	라오스	1,779
100	알제리	4,318	140	인도	1,617
101	가이아나	4,125	141	상투메 프린시페	1,569
102	앙골라	4,100	142	파키스탄	1,450
103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4,088	143	키리바티	1,428
104	엘살바도르	4,040	144	케냐	1,388
105	파라과이	4,010	145	잠비아	1,350
106	알바니아	3,995	146	가나	1,340
107	통가	3,973	147	코트디부아르	1,315
108	몽골	3,952	148	예멘	1,303
109	과테말라	3,929	149	미얀마	1,292
110	튀니지	3,923	150	방글라데시	1,287
111	스리랑카	3,889	151	모리타니아	1,282
112	조지아	3,789	152	카메룬	1,232
113	이집트	3,740	153	캄보디아	1,168
114	아르메니아	3,535	154	키르기스탄	1,113
115	인도네시아	3,362	155	짐바브웨	1,064
116	마셜군도	3,356	156	레소토	1,052
117	스왓질란드	3,140	157	차드	943
118	모로코	3,079	158	탄자니아	942
119	미크로네시아	3,073	159	타지키스탄	922
120	카보베르데	3,039	160	세네갈	913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61	아이티	805
162	말리	802
163	베냉	780
164	네팔	751
165	코모로	736
166	르완다	732
167	에리트레아	695
168	에티오피아	687
169	시에라리온	659
170	우간다	620
171	부르키나파소	615
172	아프가니스탄	600
173	기니비사우	595
174	토고	569
175	기니	542
176	모잠비크	535
177	콩고민주공화국	476
178	라이베리아	474
179	감비아	451
180	니제르	405
181	마다가스카르	402
182	말라위	354
18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35
184	부룬디	306
185	남수단	221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최근 북한의 대내 경제 정책 변화

1. 개요

-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 기조로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통해 시장 기능의 부분적 활용을 모색
 -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 김일성 시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 →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 노선' → 김정은 시대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변화
 -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채택한 이후에도 시장 친화적 조치와 시장 통제적 조치를 번갈아가면서 추진

- 2002년 북한은 가격·임금·환율의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조치를 전격 시행, 7.1조치는 본격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책으로 평가
 -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시장 기능의 부분적 활용을 모색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자유화, 사유화, 법률·제도 개혁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체제이행을 위한 경제개혁 과제는 거시경제 안정화 (macro-economic stabilization), 경제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 구조 조정 및 사유화(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법제도적 개혁(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등으로 지적
 - 본 연구에서는 안정화와 관련한 요소는 법률·제도개혁과 함께 다루고자 함

〈 분석틀 〉

구분	부문별 주요 내용
자유화 (Liber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시스템 해체 관련 - 가격 자유화 관련 - 무역 자유화 관련
사유화 (Privat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개혁 관련 - 국유 기업 사유화 관련 - 사적 경제 활동 관련
법률제도 개혁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경제 법제 구축 관련 - 재정 개혁 관련 - 금융 개혁 관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2.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① 자유화(Liberalization)

- 김정은 정권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기존 7.1 조치를 통해 시도했던 계획의 분권화 노력을 지속

- 계획 시스템 해체 : 7.1 조치를 계기로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단위에 계획 기능의 분권화가 일부 진행
 -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계획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각 경제 단위로 계획의 분권화가 부분적으로 진행
 - 김정은 시대 들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
- 가격 자유화 : 시장 기능의 부분적 활용을 위해 7.1 조치를 통한 국정가격의 시장가격 수준으로의 현실화를 모색
 -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려하였으나 실패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따라 계획을 초과한 생산분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폭넓게 인정
- 무역 자유화 :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에 무역 및 합영·합작권을 인정
 -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지방 정부 및 기업소가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자유화 관련 정책 변화 〉

부문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7.1 조치(2001년)	후속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계획 시스템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계획대상 축소 - 하부 단위에 세부계획 위임 - 배급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지표 축소, 금액지표 확대 - 기업 자체 계획지표 확대 - 국가배급제 부활 시도(2005) - 인민경제계획법 개정(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도입 - 독립채산제 및 경영 분권화 조치 확대
가격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가격의 현실화 - 변동국정가격제 시행 - 성과임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등 가격제정방식 다양화 - 시장 통제(2006) - 화폐개혁 : 시장 가격 철폐 시도(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기업 간 시장가격 기준 거래 허용 - 임금 인상조치
무역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리체제 분권화 - 기업의 수출입권 부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주공업단지개성특구 지정(2002) - 황금평위화도특구(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구법 제정 - 기업에 대한 무역 및 합영합작권 부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진한 글씨는 시장 통제 조치.

② 사유화(Privatization)

- 농업 및 기업 부문의 초과 생산물 처분 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개인 투자를 허용
 - 농업개혁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농업 부문 생산물의 현물분배, 초과 생산물 대한 처분권 인정 및 포전담당제 도입
 - 국가와 협동농장 간 7:3의 비율로 생산량을 현물분배하는 한편, 협동농장의 생산 단위인 분조(10~25명)를 다시 나누어 3~5명이 1개 포전의 생산을 책임 지도록 함
 - 국유기업 사유화 : 기업 이윤 및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율 처분권 강화
 -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 처분시 가격 책정 등에 관한 기업의 자율권 강화하여 시장가격 기준의 거래 인정
 - 사적경제활동 : 지방의 소규모 상점, 식당 등에 대한 개인 투자 및 경영 허용
 - 소규모 상점에 대해 개인 투자가 허용되며, 해당 상점은 국가가 개인에 임대 하는 형식으로 운영¹⁰⁾

〈 사유화 관련 정책 변화 〉

부문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7.1 조치(2001년)	후속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농업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수매가 인상(50배) - 국가수매량 축소 - 농장의 경영자율성 확대 - 토지사용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조관리제 시범 실시 (2004) - 기업소 부업농제(2004) - 국가양곡전매제(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조관리제 시범 실시 및 확대 - 포전담당제 도입
국유 기업 사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채산제 본격 실시 - 지배인 권한 강화 - 경영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기업소 운영 개선안 시행(2004) - 개선안 철회(2005) - 기업소법 제정(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처분 권한 강화 - 기업 유보 이익의 활용 자율성 확대
사적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상점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시장 개설(2003) - 소규모 자영업 허용(2003) - 소규모 자영업 통제(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상점, 식당, 운송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경영 가능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진한 글씨는 시장 통제 조치.

10) 민준규·정승호,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14. p. 4. 참고.

③ 법률제도 개혁(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시장 친화적 법제 구축에는 미치지 못함
 - 시장경제 법제 구축 : 1990년 민법이 제정되었지만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법으로 간주되고 있어 시장경제 법제 구축과는 거리가 멀
 - 외국인 투자 법제는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금강산관광지구법 채택 이후 점차 진화되고 있으며,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
 - 재정개혁 : 2003년 시장사용료, 2005년 부동산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재정확충을 꾀하고 있음
 - 북한은 1974년 소득세를 폐지했으나, 42년만에 돈주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과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짐¹¹⁾
 - 금융개혁 : 2006년 상업은행법이 제정, 실질적 의미의 상업은행은 설립되지 못함
 - 일종의 변동환율제인 협동화폐제를 실시해 각 개인과 기관이 외화계좌를 개설·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래 시 시장환율을 적용하도록 함¹²⁾

〈 법률제도 개혁 관련 정책 변화 〉

부문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7.1 조치(2001년)	후속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장 경제 법제 구축	- 외국인투자기업 파산법 제정(2000년) - 개성공업지구법·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2002년)	-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강조 (2010년 개정 헌법) -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등 개정(2011)	- 경제개발구법 제정(2013)
재정 개혁	-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추진 - 국가기업이득금 도입	- 회계법 제정(2003) - 인민생활공채 발행(2003) - 시장사용료(2003), 부동산사용료 도입(2005)	- 개인소득세 부활 움직임(2016)
금융 개혁	- 환율 현실화(70배 인상)	- 중앙은행법 제정(2004) - 상업은행법 제정(2006)	- 협동화폐제 도입(2013) - 기업소 자체의 현금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허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진한 글씨는 시장 통제 조치.

11) “돈줄 마른 북한, 장마당·돈주에 소득세 징수 나서”, 중앙일보 2016. 3. 15 보도.

12) 임수호 외,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63.

3.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현황 평가

- 북한은 제도만 갖춰져 있으며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조치들이 많고, 그나마 채택된 변화 조치의 수준도 아직은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
- 북한은 중국·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개혁에서 逆개혁으로, 또 다시 개혁으로 지그재그식의 변화를 추진, 추세적으로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들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시장 기능의 부분적 활용을 모색
 - 김정은 시대 들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대폭 개선 등 계획의 분권화 노력 지속
 - 농업 및 기업 부문의 초과 생산물 처분 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개인 투자 및 경영 허용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 시장친화적 법제 구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함

〈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현황 평가 〉

부문		내용
자유화	계획 시스템 해체	-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도입 - 독립채산제 및 경영 분권화 조치 확대
	가격 자유화	-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기업 간 시장가격 기준 거래 허용 - 임금 인상 조치
	무역 자유화	- 기업에 대한 무역 및 합영합작권 부여
사유화	농업 개혁	- 분조관리제 시범 실시 확대 - 포전담장제 도입
	국유 기업 사유화	- 초과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처분 권한 강화 - 기업 유보 이익의 활용 자율성 확대
	사적 경제 활동	- 개인이 상점, 식당, 운송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경영 가능
법률제도 개혁	시장경제 법제 구축	- 경제개발구법 제정
	재정 개혁	- 돈주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세 부활 움직임
	금융 개혁	- 협동화폐제 도입 - 기업소 자체의 현금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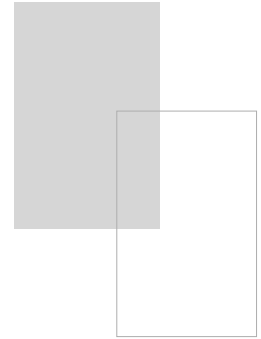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참고 〉 중국베트남북한의 변화조치 비교

〈 중국베트남북한의 변화 진전도 비교 〉

부문		중국	베트남	북한
자유화	계획 시스템 해체	- 탈계획화, 계획분권화 - 사회주의시장경제 (2004년 개정헌법 제 15조)	- 계획지표 폐지 -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질서(2001년 헌법 제15조)	- 중앙계획대상 축소 -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 강조 (2010년 헌법 제19조)
	가격 자유화	- 점진적 가격 자유화 - 식량배급제 폐지(1993년)	- 급진적 가격 자유화 - 식량배급제 폐지(1989년)	- 시장가격, 국가지도 가격, 합의제가격 등 다양화 시도
	무역 자유화	- 무역 분권화 완료 - WTO 가입(2001년)	- 무역 분권화 - WTO 가입(2007년)	- 무역관리체계의 분권화 - 특구 개발 추진
사유화	농업 개혁	- 농가생산도급책임제 - 토지사용권 인정, 농지 매매 불가	- 농가계약제 - 토지사용권 인정, 농지 매매 불가	- 분조관리제 시범 실시 - 토지사용권 불인정
	국유 기업 사유화	- 국유기업 경영도급제 - 대규모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 파산법(1986년), 회사법(1993년) 제정	- 국유기업 보조금 철폐 (1989년) - 주식회사화 추진 - 회사법(1990년), 파산법(1993년) 제정	- 독립채산제 강화 - 일부 이윤유보 허용 - 계획외 생산물 시장 판매 허용
	사적 경제 활동	- 사영기업의 성장 - 주택 소유 인정(1998년) - 토지 소유 불인정	- 사영기업의 발달 - 주택 소유 인정(2005년) - 토지 소유 불인정	- 일부 서비스, 유통 부문 개인영업 허용
법률 제도 개혁	시장 경제 법제 구축	- 민법 제정(1986년) - 사유재산 불가침 명문화(2004년 개정헌법) - 외국인 투자 개방 영역 대폭 확대	- 생산수단 사적 소유 인정(1992년 헌법) - 민법 제정(1995년) - 외국인 투자 대상 범위 확대	- 민법 제정(1990년) -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정비
	재정 개혁	-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법 제정(1994년) - 내외자 통일 기업소득 세법 제정(2007년)	- 개인소득세법 제정 (1991년), 부가가치 세법 제정, 기업소득 세 도입(1997년) - 내외국회사 동일세율 (2004년)	- 국가기업이득금, 시장 사용료, 부동산사용료 등 부과 -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
	금융 개혁	- 은행 이원화(1984년) - 외환유보 및 이중환율 제도 폐지→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1994년) - 경상계정 자유태환 (1996년)	- 은행 이원화(1988년) -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1999년) - 경상거래 자유태환 (2005년)	- 상업은행법 제정 (2006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북한의 사경제화(私經濟化) 진전 현황

1. 개요

- (연구 목적) 북한 사경제 확산은 북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일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북한 사경제 진전)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사경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현재에 이르러 북한 사경제는 사실상 북한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북한의 계획경제 및 배급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시장(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경제화가 급속히 진행

- 특히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6.28 농업개혁 조치¹³⁾, 5.30 조치¹⁴⁾ 등으로 경제적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경제 활성화 토대가 강화
- (북한 사경제 정의) 북한의 사경제는 계획경제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가장 큰 특징은 시장화의 진전과 신흥부유층의 발생으로 구분
 - 사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사법인이 영위하는 경제로, 사유 재산제와 자유경쟁을 전제로 주체가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북한의 사경제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 한편 북한 사경제의 특징은 크게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화’와 시장의 확대에 따라 발생한 ‘신흥부유층’(돈주)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북한 사경제 의미) 북한 사경제 확산은 북한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도 존재
 -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사실상 붕괴한 상황에 장마당 확산에 따른 사경제 활성화는 북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북한의 사경제 확대는 통일 과정에 있어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인 경제체도의 간극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경제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부문별 사경제화 추진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방법) 북한 사경제화의 양대 축인 시장화와 신흥부유층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비롯해, 사경제화의 부문별 5대 특징을 분석
 - 우선 북한 사경제의 두 축인 시장화와 돈주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
 - 북한 시장화 활성화 배경 및 역사를 알아보고, 장마당의 세부적 현황을 분석
 - 북한의 신흥부유층 발생 배경을 비롯해 장마당 내 신흥부유층의 역할을 분석

13) 2012년 6.28조치는 협동농장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분조관리제 개선과 수확물의 자율처분권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14) 2014년 5.30조치는 2015년부터 모든 협동농장과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경영제를 본격 도입하고, 협동농장의 분조단위를 없애고 가족단위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음.

- 다음으로 북한 사경제화의 부문별 분석은 다음의 5개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
 - 첫째,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는 산업별 사유화 비중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
 - 둘째, 토지이용권은 농민들의 소토지 경작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
 - 셋째,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 거래 유형 변화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
 - 넷째, 운수업 및 통신업은 개인 운수업 및 휴대전화 사용률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
 - 다섯째, 금융업에 있어서는 사금융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
- 북한 사경제화 분석 방법은 문헌연구를 비롯해 인터넷 자료를 활용
 - 북한 사경제화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기존 연구자들의 문헌분석과 對북 소식통의 장마당 동향 조사 결과를 활용

〈 북한 사경제화 진전 현황 분석 방법 〉

구분	주요 분석 내용
北 사경제화 역사적 변천	- 장마당 : 역사적 변천 과정, 판매 물품, 최근 장마당 동향 등 - 신흥부유층(돈주) : 장마당 내 신흥부유층의 역할 분석
北 사경제화 부문별 분석	①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 산업별 사유화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 ② 토지이용권 - 농민들의 소토지 경작을 중심으로 분석 ③ 주택시장 - 주택 거래 유형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④ 운수업 및 통신업 - 개인 운수업 및 휴대전화 사용률을 중심으로 분석 ⑤ 금융업 - 사금융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	- 북한 사경제화(장마당, 사금융 등) 관련 기존 문헌 분석 - 북한 시장화 동향과 관련한 Daily NK 등 인터넷 자료 분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2. 북한 사경제의 역사적 변천

① 장마당

- 북한 장마당은 시장화 확산에 따라 질적·양적으로 급성장
 - 북한 장마당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본격 형성
 - 1990년대 자연재해 및 공산권 붕괴에 따라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 시장이 점차 확대
 -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비공식 시장이 종합시장으로 합법화되기 시작했지만, 2009년 화폐개혁 등의 조치로 정부의 통제가 강화
 - 하지만 통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 발생으로 2010년 이후 강경 정책을 철회
 - 북한의 공식(종합시장) 및 비공식 장마당 모두 급속 증가 추세
 - 2015년 커티스 델빈(美 존스홉킨스大)이 북한 전역을 구글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약 400여개의 공식 장마당이 존재한다고 밝힘(2010년 200여개 수준)
 - 또한 메뚜기 장(이동식 장마당), 중고집(중고품 매장) 등 비합법적 장마당을 합치면 북한 전역에는 800개 이상의 장마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
 - 북한 장마당 확대로 신흥부유층(돈주) 등 다양한 계층 탄생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은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터전일 뿐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한 통로로도 활용
 - 북한 계획 경제 붕괴 이후 중국과의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신흥 부유층'(중국 식 붉은 자본가), 장마당에서 매점매석으로 자산을 형성한 '중산층'도 등장
 - 한편 장마당 상인들은 주로 40~50대이며, 성별로는 90% 이상이 여성으로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지속 향상되는 추세(20대 여성 상인 제한)

〈 북한 장마당 변천사 〉

시기	주요 내용
1958	- 농촌시장 폐지, 농민시장으로 개설
1984	- 농민시장 외 일일시장 개설(시군별 3~4개)
1987~1992	- 매일장 폐지 시도했으나 실패
1999	- 장마당 폐지 시도, 장마당 관리 기관 사회안전성→보위부로 이관
2001	- 장마당, 북한 전역에 300~350개 추정(군 단위 1~2개, 시 단위 3~5개)
2003	- 2002.7.1조치 이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곡물 및 공산품 판매 공식 허용)
2010	- 2009년 화폐개혁 실패로 장마당 통제, 억제 정책 크게 감소
2011	- 사회주의 계획가격체계에서 시장가격체계로 전환
2012~현재	- 2014.5.30조치(인센티브 인정) 이후 장마당 규모 급속히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 북한 장마당은 소비재, 생산재, 금융, 노동시장¹⁵⁾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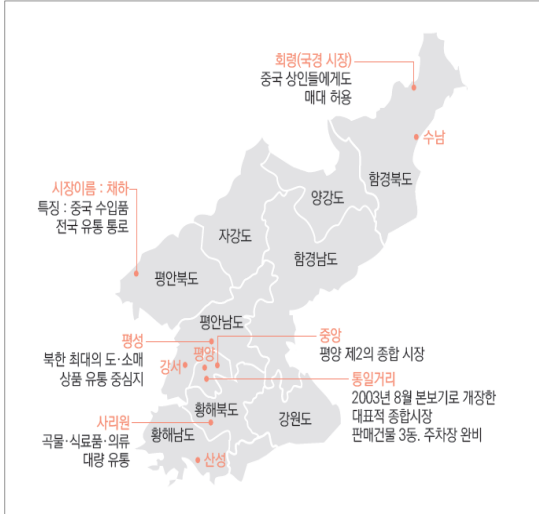
- 북한 장마당은 하루 9시간 운영 중이며,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음
 - 북한 장마당은 전력난으로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모내기철, 김매기철, 가을걷이 기간에는 시장 개장 시간을 2시간 단축
 - 공식품목(곡물, 공업품, 상업품 등)을 비롯해 금속(금, 은, 동), 골동품, 한국제품(CD, USB, 의류, 화장품 등), 마약류(필로폰) 등 비합법적 품목도 판매 중

- 세부적으로는 소비재, 생산재, 금융, 노동시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소비재 시장 :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소비재는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며, 주로 의류와 신발, 잡화 등 일상 용품이 판매되고 있음
 - 생산재 시장 :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소의 자율권을 부여한 기업책임관리제(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허용)를 도입한 후 기업소 생산재가 장마당에서 판매
 - 금융 시장 : 신흥부유층이 주체가 되어 고리대금업 등 사금융 시장이 확산
 - 노동 시장 : 신흥부유층이 운영 중인 기업소에 노동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사적 고용이 발생, 특히 최근에는 가정부, 가정교사 등 인력 시장도 형성

15) 북한의 장마당에 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거래대상에 따라 생산재, 소비재, 자본·금융, 노동시장으로 구분한 바 있음.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2010, pp.22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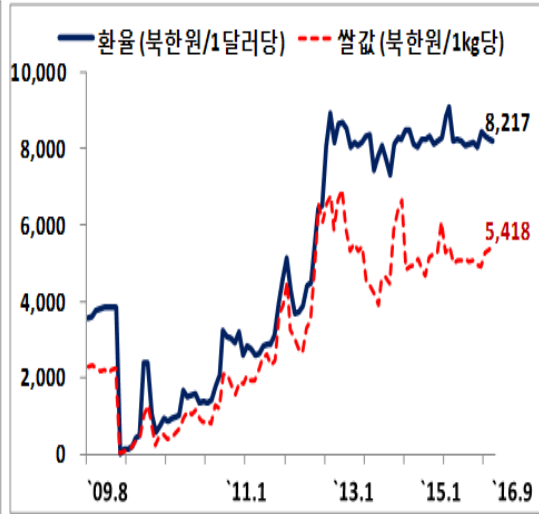
- 한편, 장마당 물가는 북한 정부의 시장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
 - 장마당 물가 변화는 주로 계절적 요인(춘궁기 등), 자연재해(가뭄 및 수해), 중국과의 교역 수준 변화,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 수준 등에 기인

〈 북한의 대표적인 장마당 현황 〉



자료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이해'.

〈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



자료 : Daily NK.

② 신흥부유층

- 북한 장마당 확산으로 신흥부유층이 급속히 성장했고, 주로 사금융의 주체임
 - '신흥부유층'으로 알려진 돈주들이 시장화회의 주체로 부상, 막강한 현금 동원능력으로 북한의 사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견인
 - 출신 성분 : 대체로 여윳돈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집단으로, 재일교포, 화교를 비롯해 무역 및 외화벌이 간부, 밀수꾼 등 출신성분과 직업이 다양함
 - 경제적 역할 : 단순한 대부자 뿐 아니라 투자자, 경영자, 자본가의 역할까지 수행(국정원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5~1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24만 명으로 추정)
 - 투자 범위 : 개인 대부업을 비롯해 주택거래, 기업소 명의 무역회사 개설, 석탄 기지 사영화, 중국 접경지역 정보망을 활용한 환차익 등으로 이익을 실현 중

- 신흥부유층은 주로 북한 사금융의 주체로 활약 중임
 - 기존 북한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기업소나 단체는 가능하였음
 -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재정 파탄 및 은행 기능 마비로 주민 간의 금전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2007년 민법 수정, 금융거래는 허용하나 이자는 불허)
 - 공적금융기능상실 : 1995~2002년 고난의 행군에 따른 재정규모 축소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사실상 중단, 이에 기업소 등은 생존을 위해 사금융에 의존
 -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강화 : 2002년 7.1조치 이후 외화벌이 일꾼을 중심으로 돈주계층 형성, 이에 따라 개인 간 고리대금업 본격 성행(2012.6.28조치로 확산)
 - ※ 북한 당국은 사금융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
 - ※ 김정은 시대 들어 제한적으로 사금융을 공적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확대, 전자상거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

- 신흥부유층 발생에 따른 북한 사금융 진전은 정보유통 확대의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빈부격차의 부정적 효과도 초래
 - 긍정적 : 사금융 발달과 시장화로 휴대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돈주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정보유통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부정적 : 사금융 발달과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돈주를 중심으로 부의 집중 및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

3. 부문별 사경제화 추진 현황

①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현상이 진행 중

- 배경 : 1990년대 경제위기로 국가의 배급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8.3 노동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비공식경제활동 참여율도 80%에 달함
 - 1990년대 공장가동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8.3 임금¹⁶⁾을 통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사경제활동에 열중하는 8.3 노동자들이 나타나게 됨
 -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가구경제활동(Household Economic Activity)' 참가율은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¹⁷⁾
 - 이처럼 높은 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은 소규모 기업 창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음¹⁸⁾
- 현황 : 2000년대 들어 지방공장, 기업소, 식당, 서비스업 등 중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이 임대·운영하는 자발적 사유화 현상이 증가
 - 앞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같이 북한에서도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상점과 서비스업의 사유화 비중은 50%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¹⁹⁾

16) 8.3 임금이란 근로자가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적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8.3제품(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자투리로 만든 생활필수품, 8.3 인민소비품운동에서 유래)의 명목으로 자신의 공장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 김영희, "7.1 조치 전후 북한 공장의 관리운영실태", 『글로벌 지역연구』, 2008. p. 118.

17)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p. 205. 주요 가구경제활동은 '채소 및 과일 등을 위한 텃밭 경영', '어업, 축산, 가금 등의 경제활동', '떨감 확보', '용수 확보', '기타 가구경제활동'으로 이는 비공식 경제활동 구분과 유사하여 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로 이해할 수 있음. 이석,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2012. p. 113.

18) 김병연,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2012. pp. 121~122.

19) 2005년 12월, 2002~2005년 탈북자 121명을 대상으로, 2009년 4~8월, 2007~2009년 탈북자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2012. pp. 123~125.

- 또한, '돈주'로 불리는 사적 자본이 국유기업의 설비나 운영 자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기업의 이윤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²⁰⁾

② 소토지 경작

○ 식량난 지속으로 농민들의 자가 소비 및 시장 판매 목적의 소토지 경작 확대

- 배경 : 식량난의 지속으로 농민들은 자가소비용 식량을 스스로 확보해야 할 필요, 또한 생필품 배급이 중단되자 생필품 구매용 농산물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협동농장 농장원의 소토지 농사가 확대²¹⁾
- 현황 : 공식 개인 부업지, 비공식 개인 부업지, 집단 부업지, 공장기업소 부업지 등에서 소토지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장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개인 부업지는 텃밭, 소채전, 산림이용반 소토지농사, 농장 소토지농사가 등임²²⁾
 - 비공식 개인부업지에 무자격자의 산림이용반 소토지, 허용규모를 초과하는 산림이용반 소토지 등임
 - 집단 부업지는 일명 '비배관리지'라고 불리며, 작업반별로 '공동경작지'와는 별도로 '비배관리지'를 지정해 개별 작업반원들에게 할당
 - 공장기업소의 부업지는 '6월 농지'와 '원료기지' 등임

20) 이석기, "남북통합과 북한 경제의 사유화 정책",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2012, p. 104.

21) 김영훈 외, 『북한 농업·농촌 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2009, p. 71.

22) 북한 당국은 사경지의 확대를 금지 또는 억압하는 대신 제도화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 2002년 7월에 나온 당의 '53호 문헌'으로 불리는 '토지사용료납부규정'은 국가 토지를 가지고 생산한 농업 생산물의 일부를 사용료 형식으로 국가에 의무 납부하도록 할 것(제1조), 농업생산물의 일부를 현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할 것(제2조), 토지를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군부대,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제3조) 등을 규정. 이 규정에 적용되는 토지에는 개인이 경작하는 텃밭 등도 포함. 단, 농민세대의 30평까지의 텃밭, 농민세대를 제외한 세대의 주택 주변에 있는 10평의 텃밭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 한해서 토지사용료를 부과. 김영훈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1996~2012)』, 2013, pp. 102~103.

〈 북한 소토지 농사의 구분과 관리 〉

구분	종류	자재조달	토지사용료
공식 개인 부업지	텃밭, 소채전, 산림 소토지, 농장 소토지	개인	공식적 납부
비공식 개인 부업지	무자격자의 산림이용반 소토지 허용 규모를 초과하는 산림이용반 소토지	개인	비공식적 납부
집단 부업지	비배관리지	작업반	수확물 상환
공장기업소 부업지	6월 농지, 원료기지	단체	수확물 상환 현금

자료: 김영훈 외, 『북한 농업·농촌 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2009.

주: 6월 농지는 농장 인근의 공장기업소가 농장의 경지를 작물의 재배기간 동안(6개월 정도) 빌려 경작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부업농지(집단적 이용과 분배)를 의미. 원료기지는 공장기업소의 원료농산물 생산 목적의 토지이나 집단부업지로도 활용.

③ 주택시장

○ 기존 주택이용권의 단순 거래에서 신규 주택 건설로 확대

- 배경 : 1980년대부터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웃돈을 주는 방식으로 '주택 교환'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비공식적 주택 거래가 활성화
 - 국가계획만으로 주택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북한 당국은 1980년대에 각 기관·기업소에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북한에서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형법, 부동산관리법, 살림집법 등에서도 주택 거래를 금지
- 현황 : 기존 주택이용권의 단순 거래에서 돈주들에 의한 신규 주택 건설로 확대
 - 주택의 거래는 '살림집이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이름을 구입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짐²³⁾

23)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사용권 이전으로 문서를 만들기 위해 일종의 부동산중개인을 찾게 되며, 이들에게 거래가의 10% 가량의 거간 수수료를 지급. 허강무, "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6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p. 9.

- 기존 주택에 대한 증축 및 개축에서 신규 주택 및 아파트 건설로 확대, 돈주들은 주택 건설 권한을 가진 기관에 명의를 빌리고 주택을 건설하여 그 대가로 해당 기관에 주택을 일부 제공하는 형식으로 아파트 건설에 투자
- 최근에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철거’ 형식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짐²⁴⁾

〈 남북한 주택제도 비교 〉

구분	남한	북한
주택 소유	- 주택의 사적소유	- 주택의 국공유화 ·무상분배와 저임대료에 기초한 배급제 형식의 주택공급 정책
주택 등급	- 없음	- 특호4~1급(5등급) ·사회적 계급에 따라 배정
주택 보급률	- 주택보급률: 101.9%(2010년 기준) ·가구수: 1,734만 가구(일반가구) ·주택수: 1,767만 호 ·평균 가구원 수: 2.69명	- 주택보급률: 약 75% 수준(2008년 기준) ·가구수: 589만 호 ·주택수: 422~457만 호(추정) ·평균 가구원 수: 4.08명
거처 유형	- 아파트 47.1%, 단독주택 39.6%, 연립다세대 주택 10.1%(2010년 기준)	- 연립주택 43.9%, 단독주택 33.8%, 아파트 21.4%(2008년 기준)
주택 공부	- 부동산등기제도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 부동산등기제도 폐지, 건물등록제도 ·건물등록대장
주택 시장	-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한 주택가격주택량 결정	- 국가에서 임차료 결정(농촌주택은 임차료 없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배급제가 마비되면서 주택거래가 공공연히 진행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 부동산 제도 비교”, 2015.

④ 운수업·통신업

○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 와해로 여객·화물 수송 관련 개인 운수업이 확대

- 배경 :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는 에너지난과 설비 노후화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 교통 중심의 비공식 교통이 확대²⁵⁾

24) 정은이,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장과 함의에 관한 분석: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2016, p. 52.

25)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2014, p. 160.

- 현황 : 기업·기관 소속 트럭 등이 '씨비차'의 형태로 여객과 화물 수송 서비스를 담당²⁶⁾하는 등 개인 운수업이 확대되고 있음
 - 씨비차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 운행, '돈주'들이 국영기업·기관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운수업을 하는 것
 - 사람, 화물, 소포 등을 운송하는 '별이 버스', 택시나 영업용 승용차를 통한 승객 및 물품 운송 등도 확대
 - 특히 對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평양, 나선특구, 신의주에서 택시 영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평양에서는 1,500여대의 택시가 2부제 형태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인구 9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배경 : 북한 정부는 2013년까지 휴대전화 가입자를 2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2008년부터 오라스콤 텔레콤과의 합작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재개통
 - 북한은 2002년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했으나, 2004년 용천역 폭발사건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음
- 현황 : 북한 인구 9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대량 수입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는 280만 명이며, 동년 기준 북한의 對 중국 휴대전화 수입은 107만 대²⁷⁾
 - 휴대전화의 보급은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공식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

26)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2014, p. 132.

2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북한 이동통신 시장 동향", 2016. 및 KOTRA "최근 북한의 핫아이템, 스마트폰", 2015. 참고.

⑤ 금융업

○ 시장화의 흐름에 따라 사금융 시장이 점차 체계화 및 전문화되어가고 있음

- 배경 : 1990년대 경제난으로 중앙은행이 기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하게 되자, 돈주들이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자금을 지원²⁸⁾
 - 2012년 이후 생산단위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추진으로 사금융 시장이 더욱 확대
- 현황 : 북한의 사금융은 1980년대 환전, 1990년대 고리대, 2000년대 투자로 확대되다가 2010년대 송금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갖추게 됨²⁹⁾
 - 사금융 시장의 발달에 따라 이자율도 안정화되어가는 추세
 - ※ 2000년대 대출 이자율이 월 13~15%였으나, 2010년대 5~10% 수준으로 안정화
 - 개인과 농장원 간 금융 : 농장원들이 춘궁기에 식량을 빌려 가을에 농작물로 상환하는 ‘가을내기’가 대표적, 1990년대 3~5배까지 하던 현물 고리대는 2000년대 시장화 이후 2배 수준으로 안정화
 - 상인 간 또는 개인 간 금융 : 1990년대에는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채수준이었으나, 최근 거래 규모 확대 및 수요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율 결정 등 전문화된 사채시장 형성
 - ※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된 이자율 : 고위층 월 3%, 중규모 상인 월 10%, 밀수꾼 월 20~30%
 - 개인과 기업 간 금융 : 개인이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은 개인으로부터 先투자를 받아 제품을 생산한 뒤 생산품(현물)으로 개인에게 자금을 상환
 - 한편, 북한에서 여전히 송금은 불법이며 200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고리대죄(제118조)’를 신설해 고리대를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규정

28)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2016.

29) 박영자, “북한의 사금융시장”, 『북한의 금융』, 2016. p. 184.

4. 종합 평가

- 북한의 사경제화는 아직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시장화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990년대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 및 배급제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시장화가 급진전되고, 돈주들의 역할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토지이용권, 주택시장,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업 부문에서의 사경제화 진전이 눈에 띄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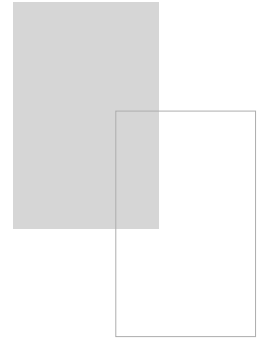
〈 북한의 부문별 사경제화 진전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배경	- 8.3 노동자의 출연, 비공식경제활동 참여율 83%(2008년 기준)
	현황	-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진행 중
토지이용권	배경	- 식량난 지속으로 농민들의 식량 확보 필요성 증대
	현황	- 농민들의 자가 소비 및 시장 판매 목적 소토지 경작 확대
주택시장	배경	-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데 되면서 비공식적 주택 거래 활성화
	현황	- 기존 주택 이용권의 단순 거래에서 돈주들에 의한 신규 주택 건설로 확대
운수업 및 통신업	배경	-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 와해 - 정부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대 의지
	현황	- 여객화물 수송 관련 개인 운수업 확대 - 북한 인구 9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2014년 기준)
금융업	배경	- 중앙은행의 기업 자금 지원 능력 상실, 돈주들의 부상
	현황	-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갖추며 체계화·전문화 진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제2장 북한의 대외 경제

-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 변화
-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
- 북중 경협 현황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 변화³⁰⁾

1. 서론

- 북한의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경제 정책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유치된 자본은 대부분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것
- 1989년부터 급진전된 사회주의권 변화로 1991년 사회주의 경제협력체제인 상호경제원조회의(CMEA)가 해체되고³¹⁾,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음
- 특히,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 법제 정비와 함께 경협 및 외자유치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투자 유치 실적은 미미한 실정

30)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2016. 9. 5 자료를 수정·보완.

31)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책 기조하에 CMEA 가입을 거부하여, CMEA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북한의 對 사회주의권 무역은 CMEA 회원국들 간의 무역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음.

- 북한이 추진해 온 외자 유치 정책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북한은 현재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경제난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경제 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과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변수의 선정 〉

구조적 요인	대외적 요인	국제 정치 상황·대외 정치적 관계 대외 경제적 관계(무역 및 대외 채무)
	대내적 요인	대내 정치적 상황 대내 경제적 여건
제도적 요인	법적 요인	헌법, 법률
행위자적 요인	대내외경제관련 기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분석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2. 각 시기별 주요 내용

① 1차 정비기(1984~1997년) : 재일동포 및 對 중국 투자 유치 저조

- 합영법 도입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
 - 북한 당국은 중국 심천경제특구 방문 등의 준비를 거쳐 외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1984년 합영법을 도입³²⁾
 - 동법 시행 이후 1993년 말까지 147건의 합영 계약을 체결, 이 중 88%인 130건을 조총련계 재일동포와 체결하였으며 그나마도 북한의 일방적 경영으로 성과 부진³³⁾
- 최초의 경제특구 설치 :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추진
 - 1991년 7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을 동북아지역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³⁴⁾
 - 이에 북한은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각종 법제 정비를 꾸준히 진행
 - 그러나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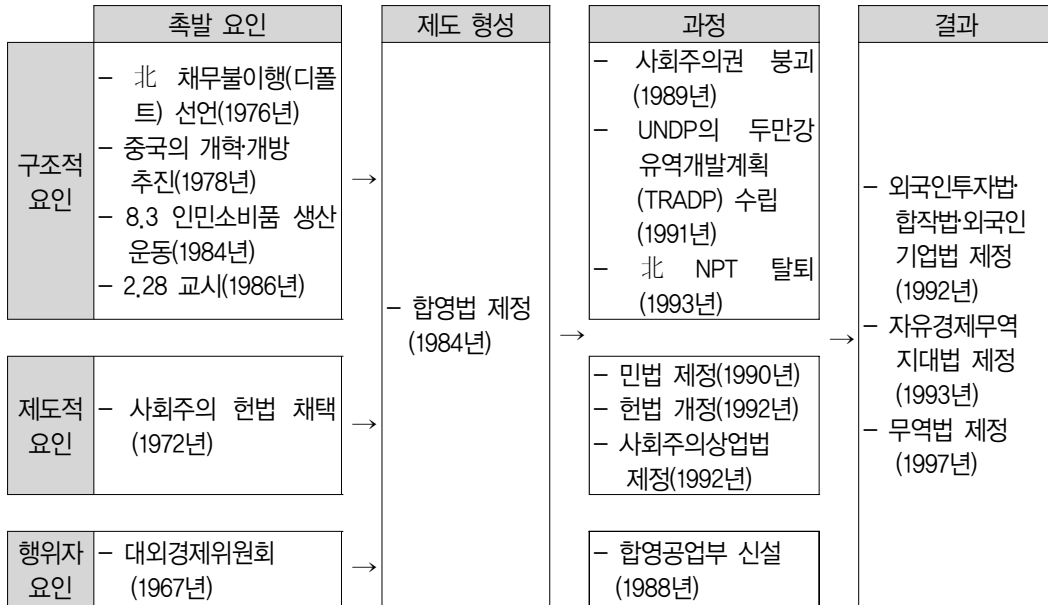
32) 권은민,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시기별 변화와 전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74.

33)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기획조사 06-010』, 2006, p. 3.

34) 북한은 동북아소지역계획회의(1991.7.6~7)에서 라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청진, 라진-선봉항을 동북아의 교통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배종렬, “다자간 국제협력 : KEDO와 TRADP 사업을 중심으로”, 『수은북한 경제』, 2005년, pp. 51~59 참조.

35) 1997년 말까지 나진선봉지대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액은 실행 기준으로 5,792만 달러에 불과. KOTRA, “북한 라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KOTRA 북한뉴스레터, 1998년.

〈 1차 정비기(1984~1997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이란 유휴 자재나 폐품을 활용해 소비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중공업우선정책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2.28 교시'는 김일성이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를 대상으로 합영사업 투자를 강조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대북 투자가 본격화.

② 2차 정비기(1998~2011년) : 남북 경협(浮沈)과 북중 경협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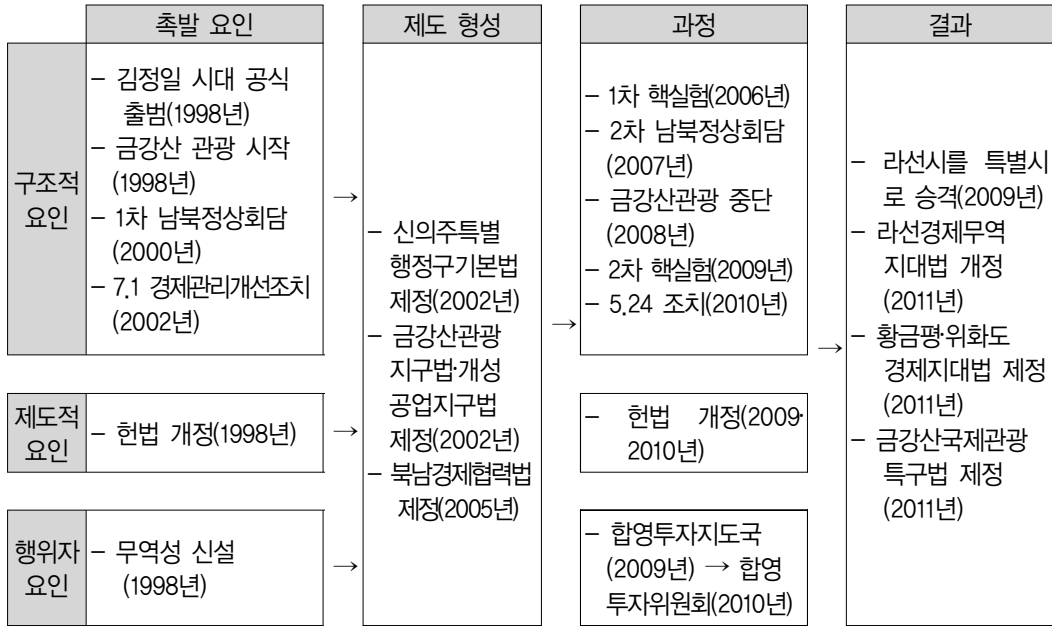
- 남북 경협 본격화 :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이 본격화
 - 북한은 남한과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 등 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
 - 그러나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 경협은 부침을 지속하였으며,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관광 개시 10년 만에 중단
 - 2011년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여 중국 등 제3국 사업자와의 관광사업 재개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신의주 특구의 실패 : 중국과는 신의주특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감
 - 2002년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된 중국인 사업가가 탈세 등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면서 신의주 특구 개발의 추동력 상실

- 나선·황금평 등 개발 노력 : 중국과 나선 및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에 대한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음

-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에 부응하여 북한은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중국과 나진항 1호 및 4~6호 부두 개발 및 북중 간 철도·도로 건설 합의
- 2010년 12월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에 대한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 합의

〈 2차 준비기(1998~201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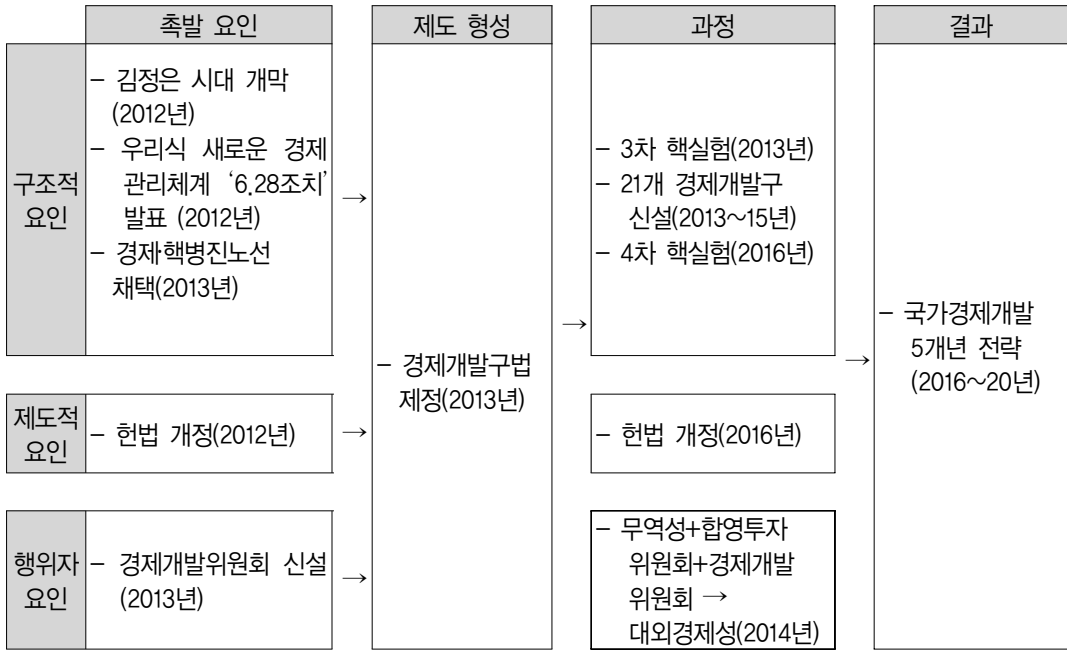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③ 3차 준비기(2012년~현재) : 전방위적 특구정책 추진

- 중앙 경제특구 지속 개발 : 기존 5대 중앙 경제특구(나선·개성·금강산·신의주·황금평/위화도) 개발 노력 지속
 - 중앙 경제특구는 대규모 복합형 경제특구(현재 5개)의 성격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중단
 - 북중 경제특구로 구분될 수 있는 나선·신의주·황금평/위화도 특구 역시 북핵 문제 등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개발구 대거 신설 : 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7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총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신설, 기능별로 육성할 계획

- 기존 국경지역 중심의 특구에서 내륙지역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 개발 분야를 구분해 외자유치 경로의 다양화를 모색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년) 수립 : 7차 당대회(5.8)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면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강조
- 이를 위해 대외무역구조 개선, 합영·합작의 확대, 경제개발구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

〈 3차 준비기(2012년~현재)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3. 종합 정리

-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
 - 1984년 합영법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2012년 이후 3차 준비기를 지나고 있음
 - ① 1차 준비기(1984~1997년) : 재일동포 및 對 중국 투자 유치 저조
 - 합영법 도입(1984년)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
 - 최초의 경제특구 설치(1991년) :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진·선봉자유무역 지대를 설치·추진
 - ② 2차 준비기(1998~2011년) : 남북 경협이 부침(浮沈)과 북중 경협 지속
 - 남북 경협 본격화(1998년) :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이 본격화
 - 신의주 특구의 실패(2002년) : 중국과 신의주특구사업을 추진, 실패로 돌아감
 - 나선·황금평 개발 노력(2010년) : 중국과 나선 및 황금평·위화도지대 공동 개발
 - ③ 3차 준비기(2012년~현재) : 전방위적 특구 정책 추진
 - 특구 지속 개발 : 기존의 5대 중앙 특구(나선·개성·금강산·신의주·황금평/위화도) 개발 노력 지속
 - 경제개발구 대거 신설 :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신설, 기능별로 육성할 계획

〈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시기 구분 〉

	1차 준비기 (1984~1997년)	2차 준비기 (1998~2011년)	3차 준비기 (2012년~현재)
정권별	▪ 김일성 주석 시기	▪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특징	▪ 재일동포 및 弊 중국 투자 유치 저조	▪ 남북경협외의 부침(浮沈)과 북중경협 지속	▪ 전방위적 특구정책 시행
주요 내용	▪ 합영법 도입(1984년) ▪ 최초의 경제특구 설치 (1991년):라진·선봉자유 무역지대	▪ 남북경협 본격화(1998년) ▪ 신의주 특구의 실패(2002년) ▪ 나선·황금평 등 개발 노력 (2010년)	▪ 기존 5대 중앙특구 개발 지속 ▪ 21개 경제개발구 신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4. 최근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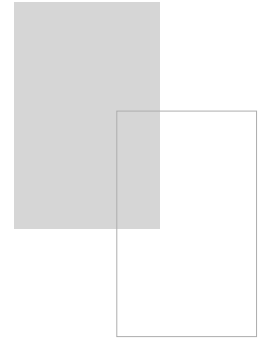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 북한은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관련 법제 정비 등의 성과를 도출,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 1991년 이후 개성·금강산 및 신의주·나선·황금평 등 남북 혹은 북중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었으나, 최근 전국 단위의 전방위적 특구 운영으로 운영 지역이 대폭 확대
 - (한계) 2016년 현재 북한 전역에 총 26개의 경제특구(중앙 특구 5, 경제개발구 21)가 지정 되었으며, 이 가운데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존재
- 특구 형태의 다양화 : 복합형 특구 개발과 함께,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농업, 관광, 첨단기술, 수출가공 등 특화된 단일형 특구 개발도 병행
 - (한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외자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는 한계가 존재

-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노력 : 기존 투자가 남한 및 중국에 편중되었던 반면, 투자 대상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한계) 그러나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다변화 노력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 외자유치 관련 법제 구축 노력 지속 : 개성·금강산 등 특구 개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경험이 외자유치 법제 구축에 반영되면서 점차 진화되고 있음
 - (한계) 지속적인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적 기업친화 법제에는 미치지 못함

〈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구분	주요 내용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성과	- 남북 혹은 북중접경지역 → 전국 단위 특구 운영
	한계	- 총 26개의 특구 중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
특구 형태의 다양화	성과	- 복합형 특구와 함께, 지역별 특화된 단일형 특구 개발 병행
	한계	-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음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노력	성과	- 투자 대상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한계	-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으로 한계가 존재
외자유치 관련 법제 구축 노력	성과	- 외자유치 관련 법제 인프라가 점차 진화
	한계	- 선진적 기업친화 법제에는 미치지 못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

1. 개요

- 북한의 대외 교역은 북한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북한 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대외 교역 현황을 알아볼 필요
 - 북한의 대외 교역은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가 부재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
 -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통계 데이터를 지원하는 경우는 인구 조사 (UN 인구공동조사), 농업 현황(FAO 제출) 등 극히 일부에 제한된 상황
 - 한편 북한의 대외 교역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역 대상국의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로 북한 교역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의 대외 교역 통계는 북한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총서에서는 북한의 대외 교역 통계를 통해 지난 25년 간 북한 대외 교역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방법 : 북한의 대외 교역 총량, 교역국 의존도, 교역구조 변화 등을 분석
 - 북한의 대외 교역 총량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對세계 수출입 추이, 시기별 의존도 분석, 무역 수지 등을 분석(남북교역액 포함)
- 분석기간 및 통계 : 1991~2015년간 KOTRA, UNCTAD의 교역 통계를 활용
 - 단 GDP 대비 교역 규모, 북한의 교역 구조 변화 분석과 관련해서는 통계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특정 연도에 국한하여 통계를 분석

〈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 분석 방법 〉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자료
총량	- 북한의 對세계 교역 추이 ·1991~2015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시기별 분석	- KOTRA, UN
	- GDP 대비 교역 규모, 무역수지 현황	
교역 의존도	- 북한의 국가별 교역 의존도 추이 ·1991~2015년 시기별 일본, 중국, 남한 의존도 분석	- KOTRA, 일본 통계청 UNCTAD
교역 구조	- 2000년 이후 북한의 교역 구조 변화 ·2000,2005,2010,2015년 현황 분석	- KOTRA, UNCTAD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2. 북한 대외 교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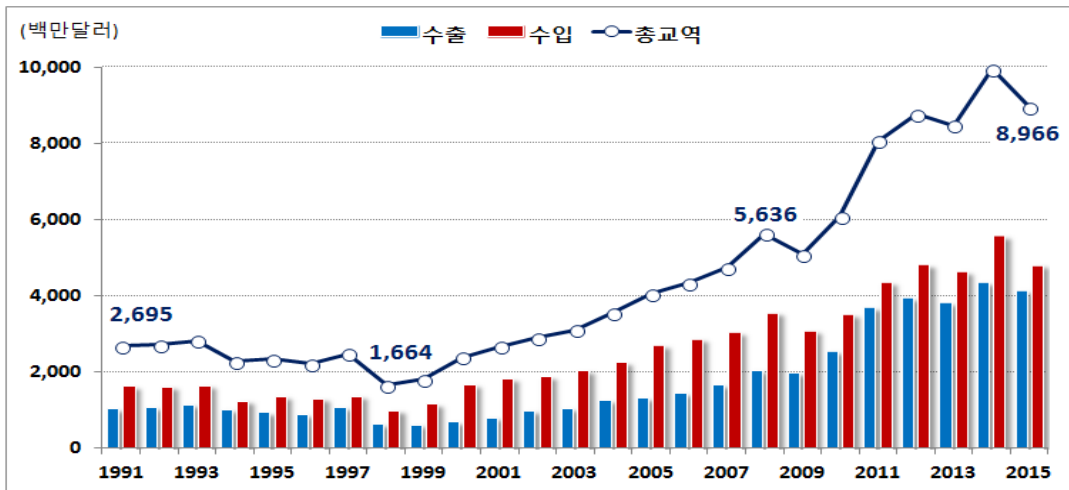
① 총량 : 지난 25년간 교역액은 3.3배 증가에 불과, 만성적인 무역적자도 지속

- 북한의 대외 교역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5.1% 증가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은 남북교역을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 수준임

- (1991~1998년) 사회주의권 붕괴로 북한 대외 교역은 전반적으로 침체
 - 1991년부터 1998년 사이 북한의 대외 교역은 연평균 증가율 -6.7%에 불과
 - 이는 舊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³⁶⁾로 북한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고난의 행군 등이 지속된 것에 기인

- (1999~200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외부지원 확대로 소폭 증가
 -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북한의 대외 교역은 연평균 13.4% 크게 증가
 - 이는 1998년 하반기 이후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1999년부터 북한의 식량난 해소 등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확대된 것에 기인
- (2009~2015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증가세 둔화
 -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의 대외 교역은 연평균 9.9%를 기록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對북 조치 등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 부정적 영향

〈 북한의 대외 교역 추이 〉



자료 :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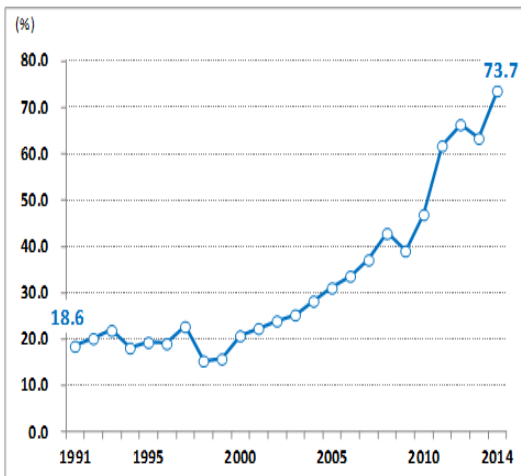
주 : 전반적인 북한의 대외 교역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북 교역액을 포함.

- 북한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절반 이상까지 확대된 한편, 무역적자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북한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상승
 - 북한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8.6%에 불과했지만, 이후 25년 간 지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73.7%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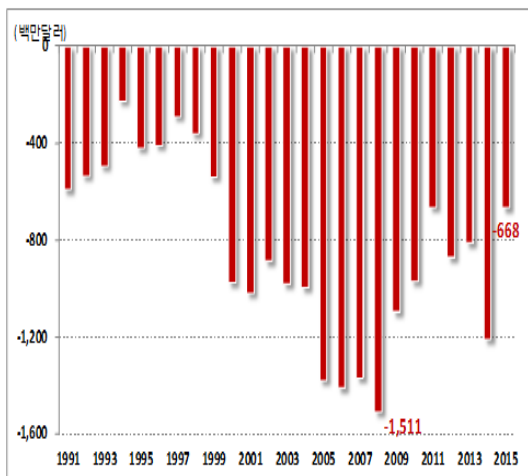
36) 뒷장의 참고자료(舊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대외무역) 참조.

- 이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내수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북한 경제가 절반 이상을 대외 교역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분석
- 한편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1년 약 6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 증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5억 달러에 달함
 - 2015년 기준 무역수지 적자폭이 약 7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상황³⁷⁾
 -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역시 내수산업 위축에 따라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기인
 - 따라서 전체 교역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출량의 증가 보다 수입량 증가가 더 커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 역시 지속 증가

〈 북한의 GDP 대비 대외 교역 규모 〉



〈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



자료 : KOTRA, UN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북한 GDP는 2005년 실질 기준이며 UN 통계를 활용.
 2. 북한의 GDP 대비 대외 교역 규모에서 남북교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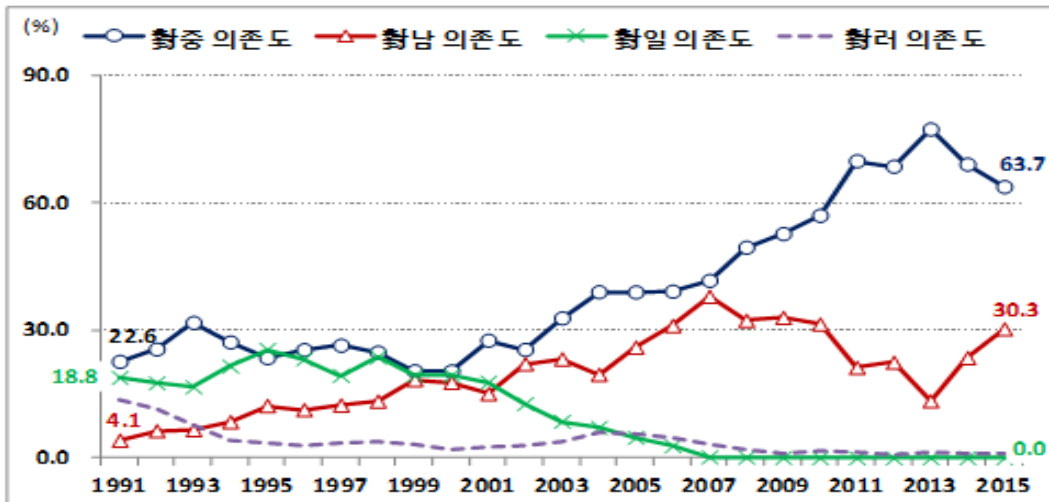
37) 최근 북한의 무역수지 개선은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등에 기인. 현대경제연구원,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현안과 과제』 16-23, p.4 참고.

② 교역 의존도 변화 : 對일본 교역→남북 교역→對중국 교역 심화

○ 북한의 대외 교역은 시기별로 대외 환경 및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옴

- (1991~2004년) 일본과 중국의 의존도가 약 50% 이상을 차지
 - 이 당시 북한은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의 최대 교역 파트너를 지속 유지
 - 특히 1995년 북한의 對일본 교역의존도는 2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하지만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여파 및 2002년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최대 교역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되기 시작
- (2005~2008년) 남북 교역 확대로 북한의 對남한 의존도 상승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진전으로 남북 교역이 지속 확대
 - 특히 1998년 13.3%에 불과하던 북한의 對남한 교역 의존도는 2005년 26.0%를 기록하는 등, 북한의 對일본 교역의존도를 한국이 본격 대체
 - 한편,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으로 북일 간 교역은 완전 중단
- (2009~2015년) 남북 교역 위축에 따라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급상승
 - 2008년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북한의 對중국 의존도 상승
 -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2009년 52.6%에서 지속 증가해, 2013년에는 77.2%에 달했고, 최근인 2015년에는 63.7%에 달함

〈 시기별 북한의 대외 교역 의존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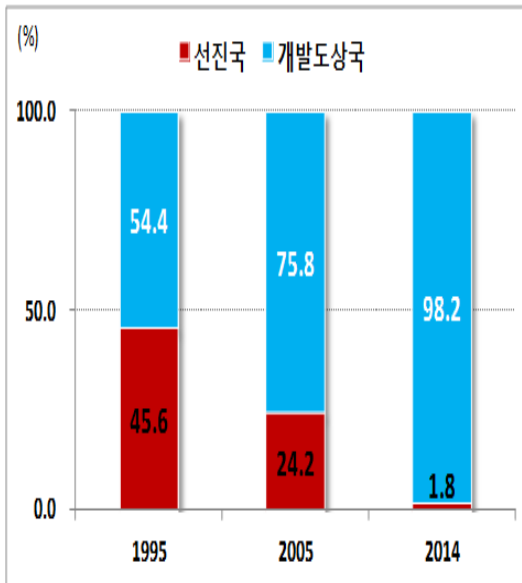


자료 :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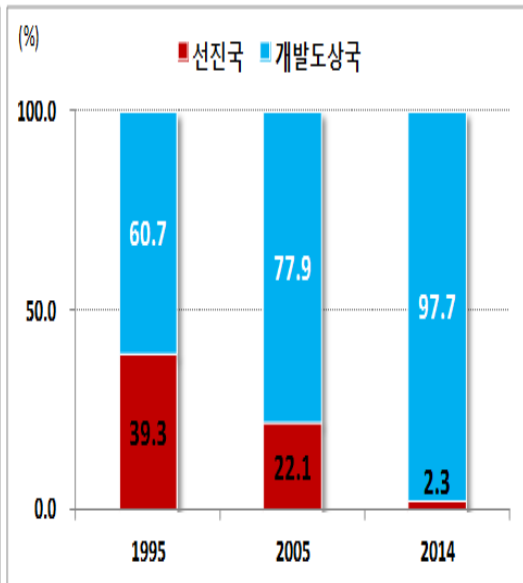
○ 한편 1995년 이후 전체 교역에 있어 개발도상국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이후 북한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심화
 - 북한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선진국 비율은 1995년 45.6%에서 2014년에는 1.8%에 불과한 반면, 개발도상국 비율은 동기간 54.4%에서 98.2%로 크게 증가
 - 또한 수입 상대국도 선진국 비율은 1995년 39.3%에서 2014년 2.3%로 크게 줄어든 반면, 개발도상국 비율은 2014년 97.7%에 달함
 - 결과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상대국 모두 선진국의 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 비율은 비약적으로 증가
-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북한의 교역 상대국 다변화 실패에 기인
 - 1990년대 초반 이후 舊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의 필요성이 증대
 - 하지만 핵 개발 확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심화로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크게 늘리지 못함
 -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정치상황에서 오는 리스크로 미국, 일본, EU와 같은 대다수의 북한 교역 상대국은 對북한 교역 비중을 지속 줄여 왔음

〈 북한의 수출 상대국 비중 변화 〉



〈 북한의 수입 상대국 비중 변화 〉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4』 참조해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선진국은 미국, EU, 일본 등으로 구분함.

2. 개발도상국은 아프리카, 남미, 동북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으로 구분함.

③ 교역구조 변화 : 후진국형 교역구조 심화

-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주로 1차 산업 위주로 후진국형 대외 교역 구조가 고착화
- (수출) 1995년 이후 북한 수출 품목의 변화는 동식물성제품은 다소 감소, 광물성 생산품은 급격한 증가
 - 2014년 기준 북한 수출의 50.3%가 광물성 생산품(석탄, 철광석 등), 29.7%는 경공업 제품(기타제조품)인 의류제품으로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위주의 수출 구조임
 - 2005년 이후 나타난 광물성생산품 수출의 급격한 증가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철광석, 석탄 등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
 - 한편 동식물성 식품 및 원료품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어패류의 수출은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對북 경제제재로 2005년 이후 급락

〈 북한의 대외 수출품목 비중 변화 〉

	1995	2005	2014
식료품	15.4	11.3	8.6
농산원료품	2.7	2.3	1.0
석탄 등 광물성 연료	2.0	10.2	35.3
광석 및 철광석	9.4	13.8	15.0
제조품	69.5	60.4	38.3
화학제조품	5.5	7.9	2.2
기계장비류	27.6	27.9	6.5
기타제조품	36.4	24.6	29.7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4』 참조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코드 기준.

2. 식료품=0+1+22+4, 농산원료품=2-(22+27+28), 석탄 등 광물성 연료=3, 광석 및 철광석=27+28+68+667+971, 제조품=5+6+7+8-(667+68)

- (수입) 1995년 이후 북한 수입 품목의 변화는 동식물성제품은 일정 수준 유지, 제조품은 빠르게 증가
 -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동식물성제품 (식료품+농산원료품)의 수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1995년 20.2%→2014년 17.9%)
 - 광물성생산품 수입은 1995년 21.9%에서 2014년 8.7%로 큰 폭 감소했지만, 이는 북한의 최대수입국인 중국이 對북한 원유 수출량을 미발표한 것에 기인³⁸⁾
 - 제조품의 경우 1995년 53.4%에서 2014년 72.8%로 19.4%p 크게 증가했고, 기계 장비류와 섬유 등 기타제조품이 수입 확대에 기여
 - 기계 장비류의 수입 급증은 2012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대국 실현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한 것에 기인
 - 또한 최근 들어 對중국 의류제품 수출을 위해 기타제조품(SITC code 6, 재료 및 제조제품)의 섬유류를 대량으로 수입(1995년 26.4%→2014년 39.2%)

〈 북한의 대외 수입품목 비중 변화 〉

(%)

	1995	2005	2014
식료품	14.8	18.8	14.9
농산원료품	5.4	2.2	3.0
석탄 등 광물성 연료	18.4	28.8	5.1
광석 및 철광석	3.5	4.3	3.6
제조품	53.4	43.8	72.8
화학제조품	8.6	6.9	8.0
기계장비류	18.3	16.8	25.5
기타제조품	26.4	20.0	39.2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4』 참조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SITC 코드 기준.

2. 식료품=0+1+22+4, 농산원료품=2-(22+27+28), 석탄 등 광물성 연료=3, 광석 및 철광석 =27+28+68+667+971, 제조품=5+6+7+8-(667+68)

38) 중국은 2014년부터 對북한 원유 수출액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對북 원유 수출액은 2014년 5억 달러, 2015년은 2.8억 달러 수준임. 전게서 p.9.

3. 종합 평가

- 평가 결과, 북한의 대외 교역은 대외 환경에 따라 국가별 교역 의존도가 변해왔고, 여전히 후진국형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총량 : 북한의 대외 교역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5.1% 증가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은 남북교역을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 수준
- GDP/대외 교역 비중 : 북한의 GDP에서 차지하는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절반 이상까지 확대
 -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내수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북한 경제가 절반 이상을 대외 교역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 : 2015년 기준 무역수지 적자폭이 약 7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상황
- 교역의존도 : 시기별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아왔고, 對일본 교역(1991~2004년)→남북 교역(2005~2008년)→對중국 교역 의존(2009~현재) 순으로 변화
- 교역구조 :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주로 1차 상품 위주로 후진국형 대외 교역 구조가 고착화(수출 : 석탄 등 광산물, 수입 : 기계장비 및 섬유 등)

〈 북한 대외 교역의 특징 〉

구분	내용
총량	- 1991~2015년 간 교역액 3.3배 증가(연평균 5.1% 증가) · 1991년 27억 달러 → 2015년 90억 달러
GDP/대외 교역	- 1991년 18.6% → 2014년 73.7%(약 4배 증가)
무역수지	- 여전히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 1991년 6억 달러 → 2008년 15억 달러 → 2015년 7억 달러
교역의존도	- 대외 환경에 따라 對일본 교역 → 남북 교역 → 對중국 교역 심화 · 2015년 북한의 對 중국 교역 의존도 63.7%(남북교역 포함)
교역구조	- 1차 상품 위주의 후진국형 대외 교역 구조 고착 · 수출 : 동식물성 제품 감소, 석탄 등 광물성 생상품 급증 · 수입 : 건설을 위한 기계장비류, 의류 수출 위한 섬유자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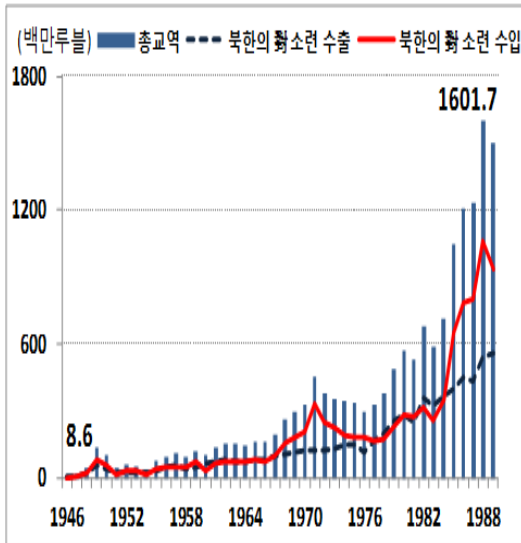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 참고 〉 舊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대외무역

○ 1991년 舊소련의 붕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급격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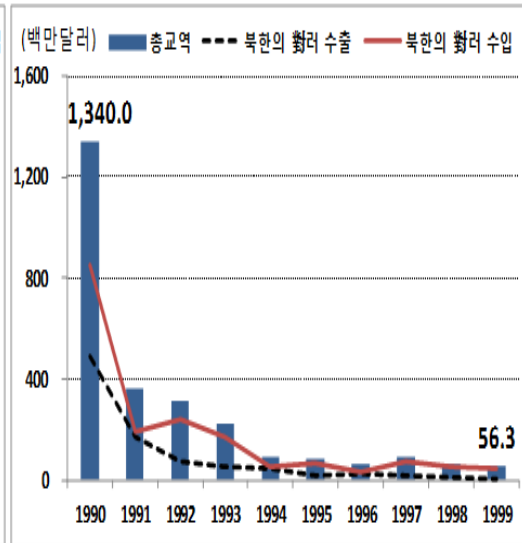
- 1946년 북·소 간 총 교역은 860만 루블(약 960만 달러, 50년대 평균 환율 1:1.12 적용)에 불과했지만, 1988년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약 16억 루블(약 10억 달러, 80년대 평균 환율 1:0.63 적용)을 기록
 - 1970년대 중반 북한의 對서방 외교 강화로 북·소 교역은 감소했지만, 1976년 향후 5년 간 양국의 상품거래를 40%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증가
 - 냉전시기 동안 북한의 총 교역은 舊소련에 편중되어 왔으며, 1988년에는 북한의 총 대외 교역 가운데 49.0%를 차지
- 1990년 약 13억 달러에 달하던 북·러 간 교역은 1991년 舊소련 붕괴로 3억 6,500만 달러로 급락했고, 1999년에는 5,600만 달러에 불과함
 - 舊소련 붕괴로 북한에 대한 원조성 구상무역³⁹⁾이 중단되고, 국제시세에 기초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러 간 교역은 크게 감소

〈 냉전시기 북소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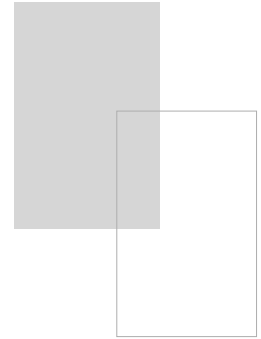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자료 : USSR Foreign Trade Statistical Data,
<http://src-h.slav.hokudai.ac.jp/database>.

〈 체제전환기 북러 간 교역 현황 〉



자료 : 러시아 통계청(gks.ru), CEIC.

39) 구상무역이란, 두 나라 간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零)으로 만들고, 결제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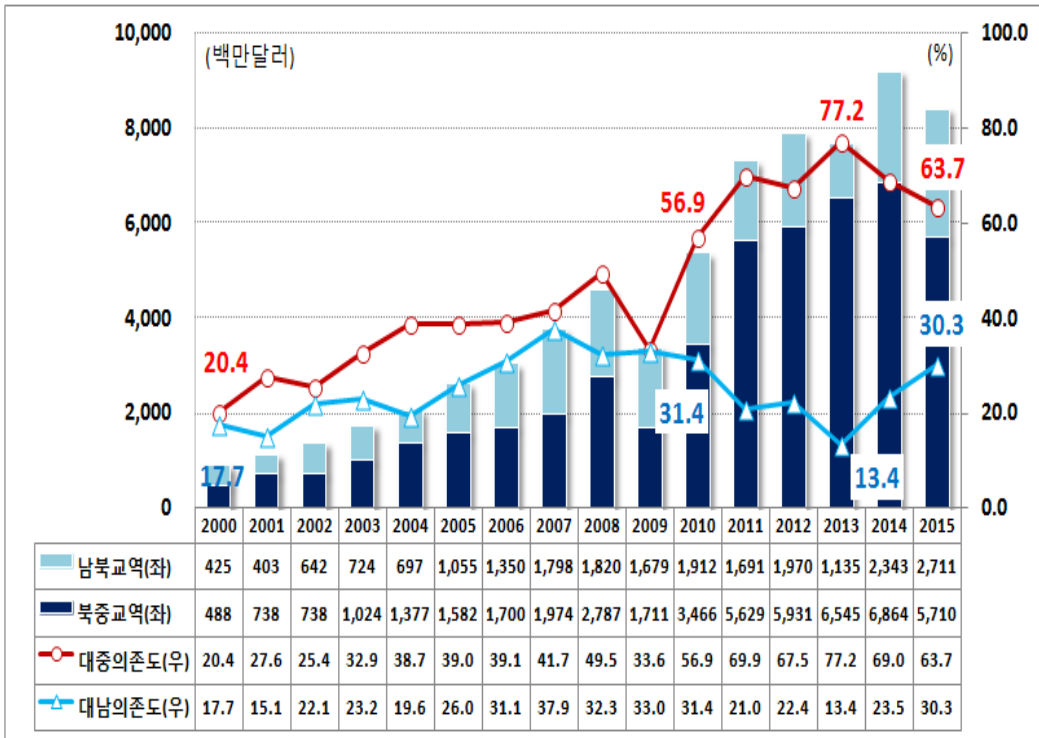
북중 경협 현황⁴⁰⁾

1. 연구 개요

- (개요)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
 - 2000~2015년 간 북·중 교역 규모는 동기간 남북 교역 규모의 약 2.2배
 - 2000~2015년 북·중 누적 교역액은 482억 달러인 반면, 동기간 남·북 교역액은 224억 달러로 북·중 교역이 남북 교역의 약 2.2배 수준
 - 북한의 對남한 교역 의존도는 2000년 17.7%에서 2007년 37.9%로 확대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2015년 30.3%로 축소
 - 반면,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0.4%에서 2015년 63.7%로 3배 이상 확대(남북 교역 포함)
 - 한편, 남북 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동 기간 24.8%에서 91.3%로 크게 확대 되어 사실상 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

40) 현대경제연구원,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2016. 6. 21 자료 수정·보완.

〈 북한의 對 중국남한 교역 의존도 추이 〉



자료 : KITA,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 남북 교역 포함.

○ (연구 방법) 북·중 교역이 북한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6년간(2000~2015년) 북·중 교역 통계 자료를 특징별로 분석

- 분석 방법 : 북·중 교역 추이와 주요 수출입 품목 변화를 알아보고자 전체 교역, 가공단계별, 10대 수출입 품목별 분석을 실시
 - 전체 북·중 교역 추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對세계 교역 가운데 對중국 의존도 현황, 북한의 對중국 수출입 추이 및 무역수지 등을 분석
 - 또한 가공단계별 북·중 교역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기준 대분류 3단계(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중분류 5단계(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분석을 실시
 - 끝으로 북·중 교역의 10대 수출입 품목을 주요 연대별로 비교 분석

- 분석 기간 및 통계 : 2000~2015년간 북·중 교역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교역 통계(KITA, KOTRA, UNCOMTRADE, 중국 해관)를 활용
- 전체 북·중 교역 통계는 1991년부터 제공되나(KITA, UNCOMTRADE) 일부 누락 부분이 있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년을 분석 기간으로 선정
- 기본 북·중 교역 통계는 KITA 통계를 참조해 분석, 북한의 對세계 교역 현황은 KOTRA(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포함)의 북한대외무역동향을 참조
- 가공단계별 북·중 교역 품목 변화 분석은 UNCOMTRADE의 UN BEC통계 활용

〈 북중 교역 현황 분석 방법 〉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자료	비고
전체 교역	- 북한의 對세계 교역 추이 -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KOTRA	對중국 원유 수입추정액 포함
	-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	KITA	
가공단계별	- 대분류(3단계)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UNCOMTRADE (UN BEC CODE)	對중국 원유 수입추정액 제외
	- 중분류(5단계)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10대 수출입 품목별	- 주요 연대별 품목 변화 분석 ·2000, 2005, 2010, 2015년	KITA 중국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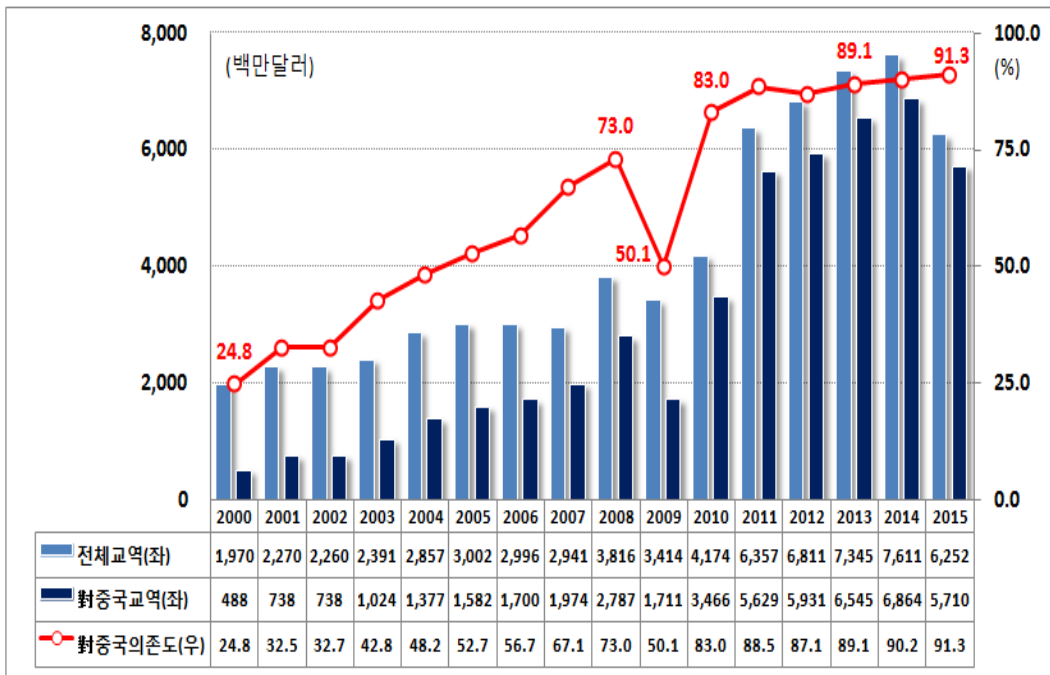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2. 2000~2015년 북중 교역의 특징

- ① 전체 교역 :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심화
- 지난 16년 간 북한의 對중국 교역은 약 12배 증가했고,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3배 이상 확대

- 2000년 이후 북·중 교역 규모는 연평균 17.8%씩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지속 확대
- 북·중 교역 규모는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15년 57.1억 달러로 약 12배 확대됐고,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8%에 달함
- 특히 동기간 북한의 對세계 교역액(약 3.2배) 및 연평균 증가율(8.0%)과 비교하더라도 북·중 교역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 북·중 교역 확대에 따라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2000년 24.8%에서 2015년 91.3%(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액 추정치 포함)로 3배 이상 확대

〈 북한의 연도별 교역 및 對중국 의존도 추이 〉



자료 :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2014~2015년 북한의 對중국 전체 교역액 가운데 對중국 원유 수입액은 추정치임. KOTRA에 따르면 2014년은 5억 달러, 2015년은 2.8억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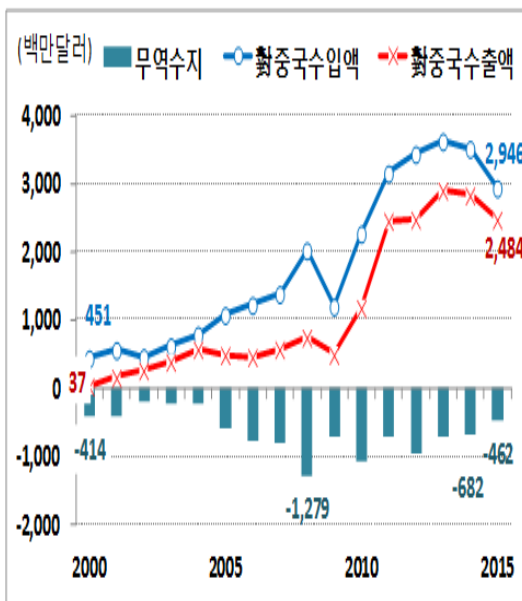
2.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서 남북 교역(민족 내부 거래)은 제외함.

○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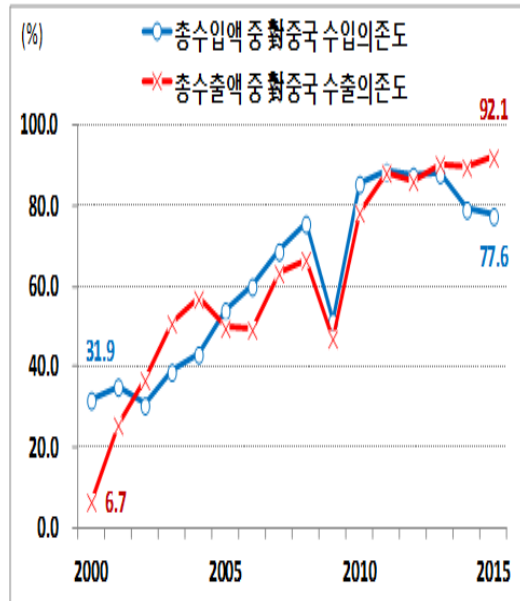
- 북한의 對중국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 북한의 對중국 수입액은 2000년부터 4.5억 달러에서 2015년 29.5억 달러로 약 6배 이상 확대(연평균 13.3% 증가)
 - 동기간 對중국 수출액은 약 0.4억 달러에서 24.8억 달러로 약 67배 가까이 확대(연평균 32.4% 증가)
 - 이에 따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4.1억 달러에서 2010년 12.8억 달러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4.6억 달러(전년 대비 2.2억 달러 개선)로 감소
- 특히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크게 상승
- 북한의 총 수입액 중 對중국 수입의존도는 2000년 31.9%에서 2015년 77.6%로 45.7%p(약 2.4배) 상승
 - 한편 동기간 북한의 총 수출액 중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6.7%에서 92.1%로 85.4%p(약 13.8배) 크게 상승

〈 2000~2015년 북중 교역 추이 〉



〈 북한 對중국 수입, 수출 의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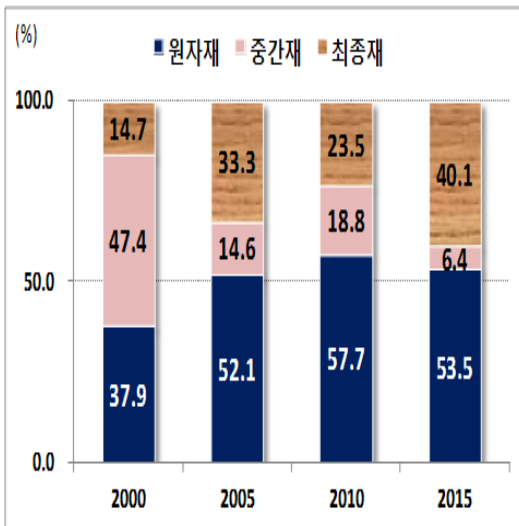
자료 : KIT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14~2015년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액 추정치는 제외함.

② 가공단계별 : 중간재를 수입해 재가공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임가공무역 방식 확대

○ (對중국 수출) 의류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 비중 증가 추세

-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출품 가운데 최종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중간재 비중은 하락세 지속
 - 북한의 對중국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0년 14.7%에서 2010년 23.5%, 2015년 40.1%로 상승세
 - 철광석, 무연탄 등 북한의 주요 對중국 수출품목이 포함된 원자재 비중은 2000년 37.9%에서 2015년 53.5%로 15.6%p 상승
 - 반면 2000년 47.4%로 북한의 對중국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간재 비중은 2015년 6.4%로 축소
- 특히 성격별로는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
 - 2000년에 비해 2015년 對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소비재(2000년 14.3%→2005년 33.0%→2010년 22.2%→2015년 39.2%)부문임
 - 특히 의류 등이 포함된 반내구성 소비재(BEC 코드 62)의 비중이 대폭 상승 (2000년 0.2%→2005년 12.8%→2010년 14.7%→2015년 27.9%)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품 비중(대분류) 〉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품 비중(중분류) 〉

		(%)			
		00	05	10	15
원자재		37.9	52.1	57.7	53.5
중간재	반제품	47.1	14.4	18.3	6.1
	부분품	0.3	0.2	0.5	0.3
최종재	자본재	0.4	0.2	1.4	0.9
	소비재	14.3	33.0	22.2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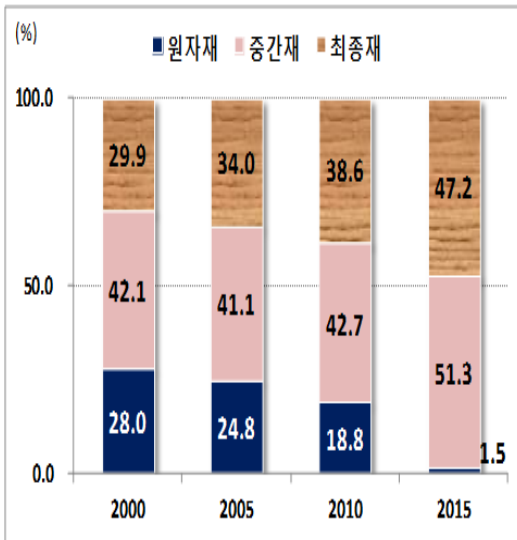
자료 : UNCOMTRADE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세부 품목들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함.

○ (對중국 수입) 중간재(반제품) 수입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확대

-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입품목 가운데 중간재와 최종재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원자재 비중은 크게 축소
 - 북한의 對중국 최종재 수입 비중은 2000년 29.9%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5년 47.2%로 16년 간 17.3%p 확대
 - 한편 중간재 비중도 동기간 42.1%에서 51.3%로 9.2%p 증가하는 등 최종재 및 중간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 반면 원자재 비중은 동기간 28.0%에서 1.5%로 26.5%p 큰 폭으로 감소⁴¹⁾
- 특히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반제품 비중은 전체 수입의 절반 수준까지 근접
 - 2000년에 비해 2015년 對중국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품목은 소비재(9.7%p), 자본재(7.6%p), 반제품(6.5%p) 순임
 - 세부적으로는 소비재(식음료, 비내구성)와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자본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반제품(섬유 등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북한의 對중국 수입 비중의 절반 수준(2000년 38.9%→2015년 45.4%)에 근접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입품 비중(대분류) 〉



〈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입품 비중(중분류) 〉

		00	05	10	15
원자재		28.0	24.8	18.8	1.5
중간재	반제품	38.9	38.4	37.9	45.4
	부분품	3.3	2.8	4.7	5.9
최종재	자본재	11.5	10.7	20.9	19.1
	소비재	18.4	23.3	17.6	28.1

자료 : UNCOMTRADE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세부 품목들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함.

2.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추정액(2.8억 달러)은 제외함.

41)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 가운데 원유 수입 추정액을 대입하면 원자재 비중은 11.0% 수준임.

③ 10대 수출입 품목별 : 의류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급부상했고, 수입품은 기계 및 섬유류가 확대

○ (對중국 수출) 나무, 철강 등에서 광산물, 의류를 중심으로 개편

-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10대 수출품 비중은 2000년 66.5%에서 2005년 74.4%, 2010년 77.4%, 2015년 78.0%로 지속 상승
- 최대 수출 품목은 광산물(철광석, 무연탄)이며, 최근 들어 의류제품(공산품), 전기기기 등 수출이 급부상
 - 광산물(HS 26, 27)의 경우 2000년 전체 수출의 16.2% 수준이었으나, 2015년 50.8%로 상승, 특히 의류제품(HS 61, 62)은 동기간 0.1%에서 32.2%로 대폭 상승
- 반면 나무, 철강 등 수출 품목은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
 - 2000년 북한의 對중국 수출비중 1, 2위를 차지하던 나무(HS 44)와 철강(HS 72)은 2000년 각각 26.7%, 23.3%에서 2015년 0.9%, 2.1%로 크게 축소

〈 2000~2015년 북한의 10대 對중국 수출품목 및 수출액 비중 변화 〉

(%)

순위	2000		2005		2010		2015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44 (나무)	26.7	27 (광물연료)	22.6	27 (광물연료)	33.4	27 (광물연료)	42.6
2	72 (철강)	23.3	03 (어류 등)	18.6	26 (광,슬랙,회)	21.1	62 (의류 2)	25.5
3	03 (어류 등)	10.9	26 (광,슬랙,회)	18.6	62 (의류 2)	13.5	26 (광,슬랙,회)	8.2
4	27 (광물연료)	9.2	72 (철강)	14.5	72 (철강)	9.1	61 (의류 1)	6.7
5	26 (광,슬랙,회)	7.0	62 (의류 2)	11.7	03 (어류 등)	5.0	03 (어류 등)	4.4
6	50 (견)	6.1	44 (나무)	3.0	79 (아연/제품)	4.0	85 (전기기기)	2.3
7	39 (플라스틱)	4.1	79 (아연/제품)	2.3	25 (시멘트류)	2.6	72 (철강)	2.1
8	78 (연/제품)	2.8	12 (과실 등)	1.4	61 (의류 1)	2.2	08 (견과류 등)	1.7
9	12 (과실 등)	2.4	61 (의류 1)	1.0	85 (전기기기)	1.8	25 (시멘트류)	1.6
10	07 (채소 등)	1.5	08 (견과류 등)	1.0	28 (희토류 등)	1.2	44 (나무)	0.9

자료 : KIT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HS코드 2단위 기준임.

2. 의류 1은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의류 2는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제외임.

- (對중국 수입) 광물유에 대한 북한의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자본재(전기기기, 기계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섬유 등)의 비중은 지속 증가
 -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입액 가운데 10대 수입품 비중은 2000년 64.6%에서 2005년 68.5%, 2010년 64.8%, 2015년 55.8%로 지속 감소 추세
 - 이는 2000년 이후 북한 시장화 활성화에 따른 수입품목의 다변화 등에 기인
 - 전기기기(HS 85), 기계류(HS 84), 차량 및 부품(HS 87) 등 자본재를 비롯해, 인조섬유(HS 54)와 같은 반제품 수입 비중이 지속 증가
 - 특히 섬유류의 수입 비중은(HS 54, 55) 2000년 2.0%에서 2015년 7.3%로 증가
 - 반면 광물유(원유 수입 추정액 제외)와 곡물 수입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
 - 2000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비중 1위를 차지하던 광물유(HS 27)는 2000년 26.1%에서 2015년 5.0%로, 2위였던 곡물(HS 10)은 2015년 88위(0.5%)로 급락

〈 2000~2015년 북한의 10대 對중국 수입품목 및 수입액 비중 변화 〉

(%)

순위	2000		2005		2010		2015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27 (광물유)	26.1	27 (광물유)	26.3	27 (광물유)	21.0	85 (전기기기)	11.3
2	10 (곡물)	7.6	02 (육류)	9.6	84 (기계류)	10.8	84 (기계류)	8.6
3	87 (차량/부품)	6.4	84 (기계류)	7.1	85 (전기기기)	8.4	87 (차량/부품)	6.7
4	72 (철강)	5.0	85 (전기기기)	5.2	87 (차량/부품)	7.0	39 (플라스틱)	5.7
5	85 (전기기기)	4.7	39 (플라스틱)	4.8	39 (플라스틱)	3.7	54 (인조섬유 1)	5.1
6	39 (플라스틱)	3.8	10 (곡물)	4.6	54 (인조섬유 1)	3.5	27 (광물유)	5.0
7	62 (의류 2)	3.7	72 (철강)	3.2	72 (철강)	3.1	72 (철강)	3.8
8	84 (기계류)	3.2	54 (인조섬유 1)	2.7	10 (곡물)	2.6	15 (동식물 유지)	3.6
9	12 (과실류)	2.4	87 (차량/부품)	2.6	55 (인조섬유 2)	2.4	61 (의류 1)	3.3
10	31 (비료)	1.7	73 (철강제품)	2.3	73 (철강제품)	2.3	03 (어류 등)	2.9

자료 : KIT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HS코드 2단위 기준임.

2. 의류 1은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의류 2는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제외임.

3. 인조섬유 1은 필라멘트 섬유, 인조섬유 2는 스테이플 섬유임.

4.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액 가운데 원유는 추정치이므로 제외.

3. 종합 평가

- 평가결과,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입 중간재를 재가공해 최종재로 수출하는 임가공무역 방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
 - 교역 전체 : 지난 16년 간 북한의 對중국 교역은 약 12배 증가했고,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3배 이상 확대
 -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지속, 남북 교역 위축 등으로 對중국 수출 의존도 심화
 - 가공단계별 :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의류 등)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반제품의 對중국 수입 비중은 절반 수준까지 확대
 - 특히 북한의 對중국 수입품 중 소비재(식음료, 비내구성)와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소득수준 개선을 시사
 - 10대 수출입 품목별 : 對중국 수출은 광산물, 의류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對중국 수입은 전기기기·기계 및 섬유류의 비중이 지속 증가

〈 2000~2015년 북중 교역 특징 비교 〉

구분	북한의 對중국 수출(00년 대비 15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00년 대비 15년)
전체 교역	- 북중 교역 규모 12배(4.9억 달러→57.1억 달러) 증가 - 對중국 교역 의존도 3배(24.8% → 91.3%, 원유 수입 추정액 포함) 이상 확대	
가공단계별 (대분류)	- 최종재 상승, 중간재 하락 ·최종재 : 25.4%p 상승(14.7%→40.1%) ·중간재 : 41.0%p 하락(47.4%→6.4%)	- 중간재 상승, 원자재 하락 ·중간재 : 9.2%p 상승(42.1%→51.3%) ·원자재 : 26.5%p 하락(28.0%→1.5%)
가공단계별 (중분류)	- 의류 등 소비재 비중 상승 ·24.9%p 상승(14.3%→39.2%)	- 반제품 비중, 전체의 절반 수준 근접 ·6.5%p 상승(38.9%→45.4%)
10대 수출입 품목별	- 의류제품이 주요 수출품으로 급부상 ·광산물 : 34.6%p 상승(16.2%→50.8%) ·의류 : 32.1%p 상승(0.1%→32.2%)	- 전기기기가기계 및 섬유류 비중 증가 ·전기기기 : 6.6%p 상승(4.7%→11.3%) ·기계류 : 5.4%p 상승(3.2%→8.6%) ·섬유류 : 5.3%p 상승(2.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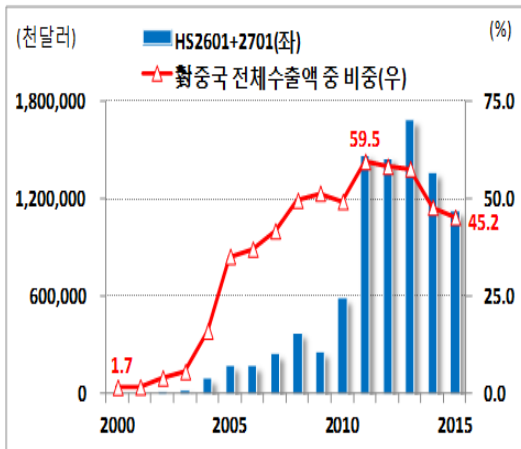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주 : 가공단계별, 10대 수출입 품목별 평가에서는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추정액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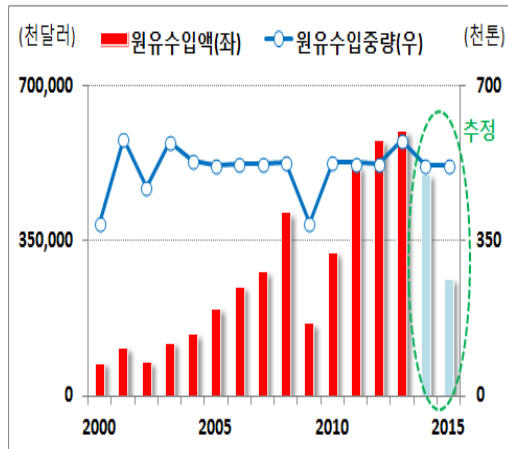
〈 참고 〉 최근 북중 간 주요 광산물 수출입액 추이

- 북한의 對중국 광산물 수출액 감소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기인
 - 2015년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 석탄 수출액은 11.2억 달러로 감소 추세
 - 이는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북한의 對중국 광산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석탄(호주산)은 2008년 톤당 123.6달러에서 2015년 54.4달러까지 하락, 철광 석도 동기간 2008년 151.7달러에서 2015년 52.8달러 수준으로 급락⁴²⁾
- 한편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감소는 주로 단가 하락에 기인
 - 2013년 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중량(실적치 기준)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후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원유 수입액은 지속 증가
 - 2014년과 2015년의 경우(실적 미발표)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
 - 중국해관의 원유 수출 단가 추이를 보면 2000년 톤당 197달러에서 2008년 717달러로 증가했다가, 2009년 435달러로 급감. 2015년 기준 513달러 기록

〈 북한의 對중국 주요 광물성
생산물품(HS27) 수출액 추이 〉



〈 북한의 對중국 원유(HS2709)
수입액 및 비중 추이 〉



자료 : KITA, World Bank, 중국해관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주요 광물성 생산물품의 경우 HS2601(철광석), HS2701(무연탄)으로 한정함.

2. 2014년부터 중국의 對북한 석유(HS2709) 통계가 '0'으로 미집계. 하지만 중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간 52만톤의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수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해당기간 국제유가(DUBAI)를 적용해 추산(2014년 5.0억 달러, 2015년 2.8억 달러)

42)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Annual prices, June 02 2016.

〈 부록 〉 가공단계별 무역의 분류 기준

- 가공단계별 북·중 교역 품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 품목들을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함
- 가공단계는 3단계 기준으로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
- 5단계 기준으로는 원자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함
- ※ HS 6단위 코드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중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HS코드와 연계하지 않음.

〈 가공단계별 분류 기준 〉

3단계 기준	5단계 기준	BEC 코드	BEC 품목명
원자재(소재, 1차제품)		111	산업용 식음료품
		21	산업용 원자재
		31	연료 및 윤활유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1	자동차 차체
		322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부품부분품	42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53	운송 장비의 것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자료 : Gaulier, Lemoine and Unal-Kesencii(2004), p51.

제2부

남북 교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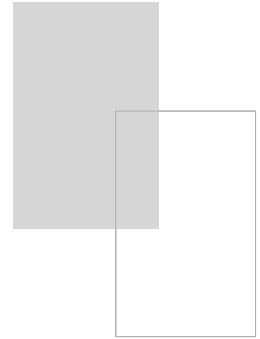
제1장 남북 간 경제 교류

제2장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제1장

남북 간 경제 교류

- 남북 경협 28년 현황
- 부문별 남북 경협 현황
- 다자협력 추진 현황



남북 경협 28년 현황

1. 개요

○ 남북 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지속

-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 경협은 2008년 이후 3단계인 정체기에 진입

① Stage I (1988~1997년) : 도입기

- 시작(1988년) :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7.7 선언에 따라 시작
- 정체(1993년) : 북한의 NPT 탈퇴로 북핵 위기 발발, 투자협력사업 중단
- 재개(1995년) : 제네바 합의(1994년) 이후 1차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⁴³⁾ 발표

② Stage II(1998~2007년) : 성장기

- 본격화(1998년) : 2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⁴⁴⁾ 및 금강산 관광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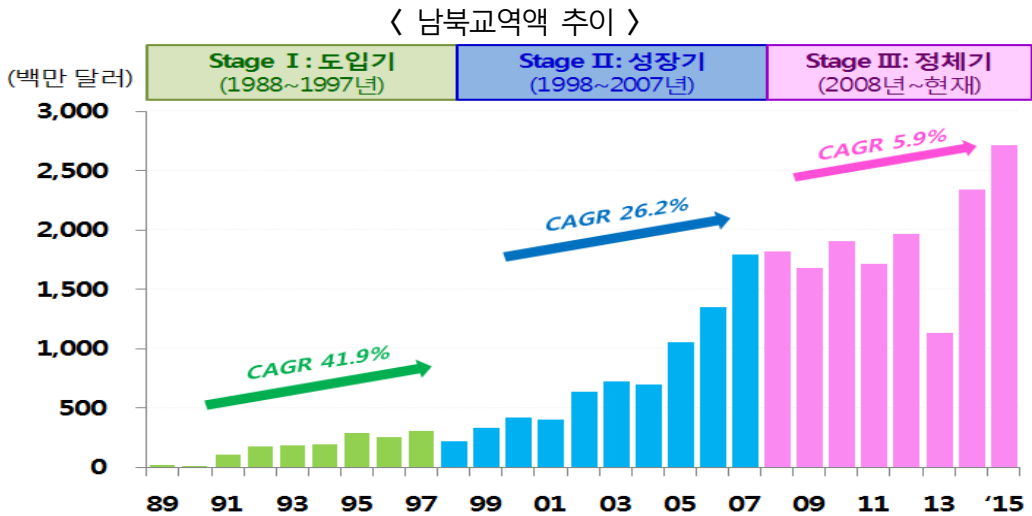
43) 기업 총수를 제외한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의 상호방문 허용, 1회 100만 달러 이하의 위탁가 공용 시설재 반출 및 기술자 방북 허용, 500만 달러 이하의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

44)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방북 전면 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대북 투자제한업종의 ‘네거티브 리스트’화, 생산 설비 대북반출 제한 폐지 등.

- 1차 정상회담(2000년) : 6.15 남북정상회담, 4대경협합의서⁴⁵⁾ 체결
- 활성화(2003년) : 개성공단 착공으로 남북 경협에 새로운 전기 마련
- 2차 정상회담(2007년) :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협에 확대·발전 합의

③ Stage III(2008년~현재) : 정체기

- 관광 중단(2008년) :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 對북 제재(2010년) :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제재 조치인 5.24 조치 시행
- 개성공단 잠정 중단(2013년) :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및 재가동
- 개성공단 중단(2016년)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자료 :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2. 각 단계별 주요 내용

① Stage I (1988~1997년) : 도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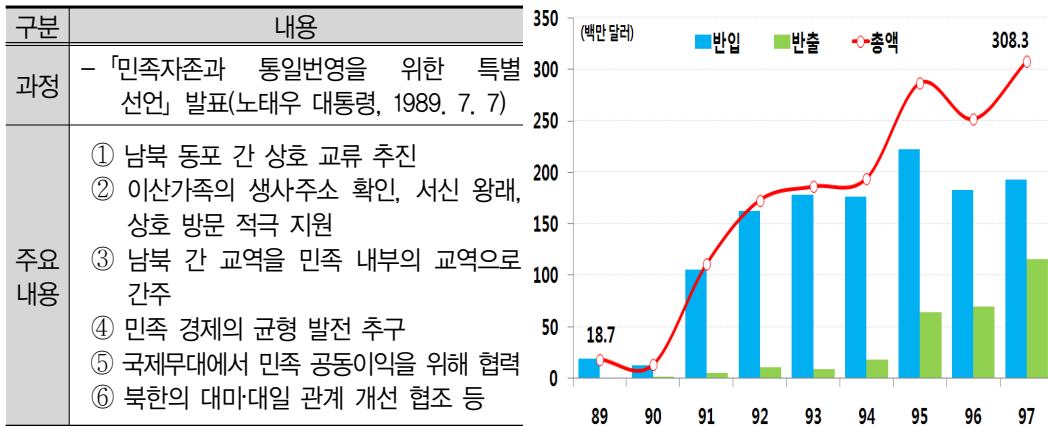
- 시작 :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발표
- 7.7 선언을 통해 남북 주민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 등을 강조

45) 이종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상사분쟁합의서, 투자보장합의서 등.

- 동년 10월 '對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⁴⁶⁾을 발표하여 북한과의 교역이 시작
-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체결(☞<참고 1> 참조)
- 정체 : 북한의 NPT 탈퇴로 북핵 위기 발발, 투자협력사업 중단
- 1993년 북핵 위기 및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 남북교역 위축
- 재개 :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 이후 1차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 1994년 11월 1차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위탁가공 확대, 對북 경수로지원사업 진전 등으로 교역액이 증가
- 그러나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⁴⁷⁾ 및 1997년 외환위기로 남북교역은 다시 위축

< 7.7 선언의 주요 내용 >

< 도입기(1989~1997년)의 교역액 추이 >



자료 :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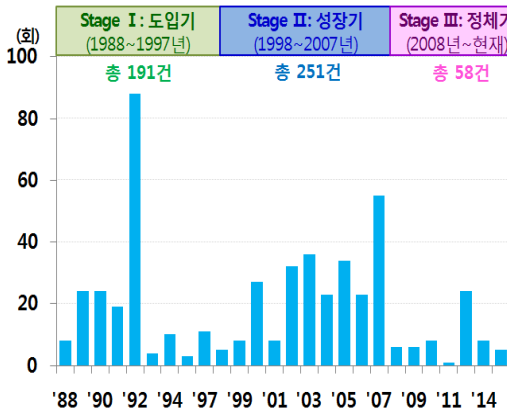
46) 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개 허용, ③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 부과, 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⑥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⑦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47)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으로 확인됨. 군인·경찰·예비군은 49일 동안 소탕작전에 돌입하여 무장간첩 1명을 생포하고 13명을 사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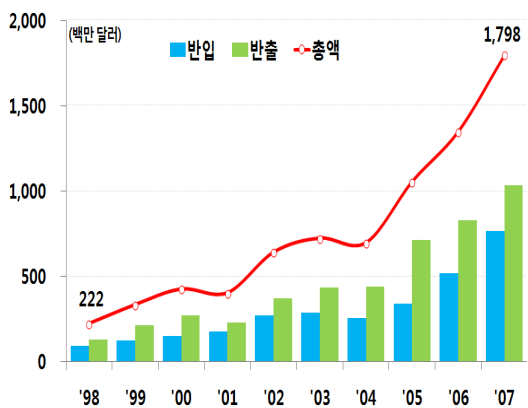
② Stage II(1998~2007년) : 성장기

- 본격화 :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을 계기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
 - 한국의 햇볕 정책과 북한의 김정일 체제 출범, 페리 프로세스(1999. 9)⁴⁸)에 따른 미일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발표 등으로 경협 확대
 - 1998년 4월 2차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기업인의 수시 방북 확대로 동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시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대규모 대북 지원과 동년 12월 4대경협 합의서 서명 등으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활성화 : 2003년 개성공단 착공으로 남북 경협의 새로운 전기 마련
 - 2004년 12월 개성공단 가동 및 첫 제품 생산으로 개성공단 사업 시작
 -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발효 등 남북 경협의 제도화 진전
 - 특히,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을 합의, 동년 12월 개성관광 시작
 -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등 핵 문제가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 남북 간 회담 개최 횟수 추이 〉



〈 성장기(1998~2007년)의 교역액 추이 〉



자료 :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48) 페리 프로세스란 美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함.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 ① 1단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 미국은 對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며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② 2단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수교 협상을 본격화, ③ 3단계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및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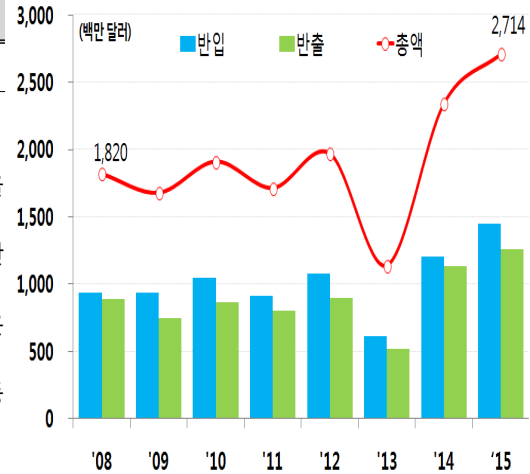
③ Stage III(2008년~현재) : 정체기

- 정체 :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 경협 정체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7. 11)이후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
 - 2009년 북한의 핵 폐기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발표
 - 2010년 천안함 사건(3. 26)으로 한국의 對북 경제제재인 ‘5. 24 조치’ 발표
 - 2012년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 향아리 운동’ 전개
- 전면 중단 :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 이어 2016년 가동 중단 발표
 -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동년 8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 9월 재가동
 - 2013년 한·러 정상회담(11. 13)을 계기로 ‘나진~하산 물류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남북러 3자의 다자 간 경협사업 추진
 - 2015년 6월 경원선 복원공사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구간) 착수⁴⁹⁾
 -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및 나진~하산 사업 지원 중단 발표

〈 5.24 조치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과정	- 천안함 사건(2010. 3. 26)이 계기
주요 내용	①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②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③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개성·금강산 제외)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 ⑤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

〈 정체기(2008년~현재)의 교역액 추이 〉



자료 :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49) 경원선은 서울 용산역과 북한 측 강원도 원산을 잇는 총연장 223.7km의 노선. 이 가운데 우리 측 노선은 현재 서울 용산역에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까지 94.4km 운영. 정부는 이번 1단계 복원사업을 통해 백마고지에서 민통선 내 남방한계선 인근 월정리역 사이 9.3km 구간에 단선철도를 건설할 계획.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경원선 단절 구간은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 2.4km와 북한 측 평강역까지 14.8km 등 모두 17.2km가 남게 되며, 향후 경원선이 완전 복원되면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돼 유라시아철도망 완성 가능.

< 참고 1 >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내용

- 남북 간 대표적인 주요 합의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을 들 수 있음
 - 7.4 남북공동성명(1972. 7. 4) : 전문과 7개 항으로 구성
 -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상호 중상·비방과 무장도발 중단, 다방면적인 교류 실시,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등
 -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 :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세 부문으로 구성
 - 제1장 '남북화해'의 주요 내용은 체제 인정, 상호 내정 불간섭, 쌍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의 중지, 상대방 파괴전복 행위의 금지, 군사정전협정체제의 준수 등
 - 제2장 '남북불가침'은 무력 침략의 금지, 남북 간 경계선 및 구역에 대한 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음
 - 제3장 '남북교류협력'은 자원공동 개발·물자교류·투자 등 경제협력, 과학·기술·문화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의 상봉 및 방문, 철도·도로 연결, 해로·항로의 개설, 우편·전기통신 및 교류의 비밀 보장 등을 담고 있음
 - 6.15 공동선언(2000. 6. 15) :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 남북 간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협력, 당국 간 대화 등을 합의
 - 10.4 공동선언(2007. 10. 4) :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등

<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공동선언 비교 >

구분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일시	1972. 7. 4	1991. 12. 13	2000. 6. 15	2007. 10. 4
형식	전문 및 7개항	전문 및 4장 25조	전문과 5개항	전문과 8개항
내용	1항 조국통일 3대 원칙 2항 정치군사문제 3항 다방면 교류 4항 남북적십자회담 5항 서울-평양직통전화 6항 남북조절위원회 7항 이행 합의 약속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1항 당사자해결원칙 2항 통일방안 공통성 3항 인도적 문제 해결 4항 경제·문화 협력 5항 당국 간 대화	1항 6.15정신 구현 2항 남북 간 신뢰 구축 3항 한반도 긴장 완화 4항 종전선언 협의 5항 남북 경협 확대 6항 사회문화교류 7항 인도적 협력 8항 국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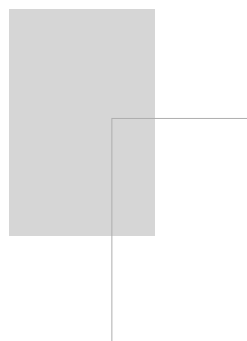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참고 2 > 남북 경협 주요 일지

< 남북 경협 관련 주요 일지 >

일시	주요 내용
1988. 7	-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발표
1988. 10	-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 발표
1989. 1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첫 방북(김일성 주석과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 체결)
1990. 8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법률 제정
1991. 12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2. 2	- 남북 간 위탁가공구역 시작
1994. 11	- 1차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1996. 9	-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한의 대북지원 및 투자 동결
1998. 6	- 정주영 명예회장 1차 소떼 방북,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합의
1998. 10	- 정주영 명예회장 2차 소떼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첫 면담
1998. 11	- 금강산관광선 금강호 첫 출항
1999. 2	- 현대그룹, 남북 경협전담사(주) 현대아산 설립
2000. 6	- 남북 최초 정상 회담 개최(6.15선언)
2000. 8	- 현대-北 아태위원회, 개성공단 6,612만㎡개발 합의서 체결
2002. 9	-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2002. 11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2	-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및 금강산 시범육로관광
2003. 6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4. 1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14. 12	- 개성공업지구 첫 제품 생산
2005. 12	- 연간 남북교역 규모 처음으로 10억 달러 돌파
2006. 11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2007. 1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2007. 10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발표
2008. 7	- 관광객 박왕자(53)씨 북한군 총격에 사망, 금강산관광 잠정 중단
2008. 11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2010. 5	- 천안함 침몰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교류 중단 발표(5.24조치)
2012. 1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2013. 1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달성
2013. 4	- 北,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2013. 9	-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공동위 사무처 개소
2016. 2	- 한국 정부, 북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 결정

자료 : 내외신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부문별 남북 경협 현황

1. 남북 경협 사업 개요

- (개념) 남북간 교역은 반입과 반출로 표시되며, 유형별로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
 - 남북 경협은 민족 내부 간 거래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국가 간 무역과는 달리 수출과 수입을 반출과 반입으로 표시하며, 이를 남북교역으로 통칭
 - 유형별로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
 - 상업적 거래는 단순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과 경제협력 등으로 구분,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 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출해 이를 가공·수입하는 것으로 '임가공'이라 불림
 - 경제협력은 투자협력 사업으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 평양의 평화자동차 사업 등이 대표적임

〈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이 〉

구분	단위	1990	2000	2005	2007	2010	2014	2015
총 남북 교역	100만 \$	13.5	425.1	1,055.8	1,797.9	1,912.2	2,342.6	2,714.5
교역 건수	건	83	7,394	21,215	51,758	84,202	86,158	100,907
교역 품목수	개	26	578	775	852	795	718	1,120
사업 승인수	건	-	2	36	169	25	3	3
상업적 거래 비중	%		64.3	65.3	79.6	98.8	99.8	99.6
- 경협사업비중	%	-	20.4	39.2	39.6	76.0	99.8	99.6
- 개성공단비중	%		-	16.7	24.5	75.5	99.8	99.6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주: 1) 사업 승인은 경제협력(투자) 사업 승인을 의미

2) 상업적 거래란 총 교역 중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사업의 합으로 지원성 및 KEDO, 경수로 사업 거래를 제외한 것임

○ 남북 경협은 대규모 인적 교류를 동반

-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기 이전의 방북자 수는 한 해에 평균 300여 명에 불과했으나 1998년 말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2004년의 개성공단 가동 등으로 크게 늘어났음

〈 연도별 인적 교류 현황 〉

(단위 : 명)

구분	단위	1990	2000	2005	2007	2010	2014	2015	누계	
비관광 방북	명	183	7,280	87,028	158,170	130,119	129,028	132,101	1,447,010	
관광 방북	금강산 관광객	명	-	213,009	298,249	345,006	-	-	-	1,934,662
	개성 관광객	명	-	-	1,484	7,427	-	-	-	112,033
총계	명	183	220,289	386,761	510,603	130,119	129,028	132,101	3,493,705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주 : 누계는 1989년 이후의 인적교류임

2. 개성공업지구 사업

(1) 개성공단 사업 개요

- (현황) 2016년 2월 현재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잠정 중단
 - 2016년 2월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
 -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과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채택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 2002년 11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정 이후 2016년 2월까지 16년 간 지속된 사업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
 -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2.10)
 - 2016년 2월 중단 이전의 개성공단 개발면적은 전체 개발계획 대비 5%, 업체수는 6%, 고용 인력은 15%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조성은 2007년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입주기업은 계획 대비(300개 업체) 약 40% 수준인 124개 기업만 입주해 1단계 사업도 미진했음
 - 한편, 2016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직전까지도 남북한이 합의한 2단계(150만평) 및 3단계(350만평) 개발도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

〈 개성공단 주요 약사 〉

〈 개성공단 개발 계획 대비 실제 운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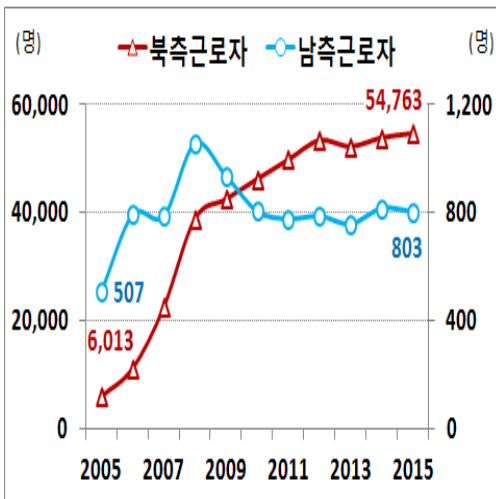
일시	주요내용	구분			
		개발 면적	개발 계획	운영 현황	계획 대비 비중
2000.8	- ‘개성공단개발 합의서’ 채택	개발 면적	2,000만평	1단계 100만평	5% 수준
2002.11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6	-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	업체수	2,000개	124개	6% 수준
2004.12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7.1	-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2013.4	- 北,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고용 인력	35만 명	5만 여명	15% 수준
2013.9	- 개성공단 재가동				
2016.2	- 한국 정부, 개성공단 잠정 중단				

자료 : 내외신,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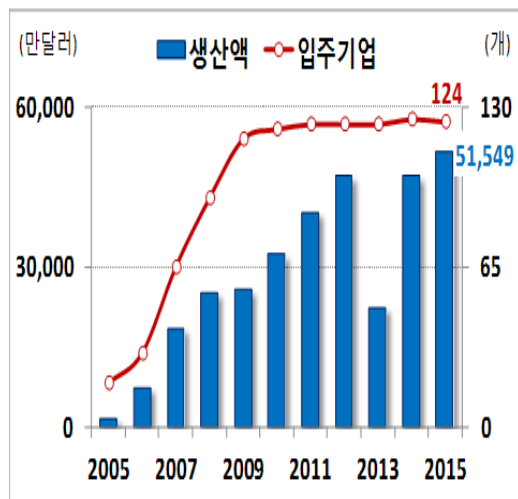
(2)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평가

- (실적) 2015년 기준, 개성공단은 124개 기업에서 5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했고, 연간 생산액은 5.1억 달러 수준에 달했음
- (입주기업) 2015년 11월 기준 총 124개 기업이 입주
 - 업종별로는 섬유부문이 64개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23개), 전기전자(13개), 신발 및 화학(각각 9개), 종이목재(3개), 식품(2개), 비금속광물(1개) 순임
- (근로자) 2015년 11월 기준 북한 5만 4,763명과 남한 803명의 근로자를 고용
 - 북한 근로자의 특성으로 연령대는 40대가 39.4%로 가장 많고(평균 연령 39세), 학력은 고졸(84.8%), 성별은 여성(68.3%)이 많음
- (1인당 노동보수) 2015년 11월 기준 1인당 평균 노동보수는 188달러(노동보수 167.3달러+사회보험료 20.7달러)로, 2006년 평균 68.1달러(노동보수 60.3달러+사회보험료 7.8달러)에 비해 176.1% 증가
- (생산액) 2015년 1~11월 누적 생산액은 5.2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에 비해 62.5% 증가(2015년 11월 전년 동기 누계 대비 19.9% 증가)
 - 연간 생산액 : 2005년 1,491만 달러 달성 이후 2009년 2.5억 달러, 2011년 4.0억, 2013년 2.2억(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감소), 2015년 5.2억 달러 기록
 - 누적 생산액 : 200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32억 8,524만 달러 기록

〈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



〈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생산 추이 〉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개성공단 교역액 비중) 2015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 교역은 27.0억 달러로, 남북한 총 교역 및 상업적 거래에 있어 모두 99.0%이상을 차지
 - 총 교역 대비 : 2005년 16.8%에서 2009년에는 56.0%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에는 99.6%를 차지
 - 상업적 거래 대비 : 2005년 25.7%에서 2011년 99.8%로 연평균 25.4% 증가했고, 2015년에는 100.0%를 차지
 - 2010년부터 개성공단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5.24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위탁 교역의 중단에 기인

〈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총 교역(A)		1,056	1,798	1,679	1,714	1,136	2,714
상업적 거래(B)		690	1,432	1,642	1,702	1,134	2,704
개성공단(C)		177	441	941	1,698	1,132	2,704
개성공단 비중	총교역대비 (C/A)	16.8	24.5	56.0	99.1	99.6	99.6
	상업적 거래대비 (C/B)	25.7	30.8	57.3	99.8	99.8	100.0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3)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 첫째, 개성공단 사업이 확대 및 지속가능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
 -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여 정치·군사적 사안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개성공단 사업은 경험을 통해 북한 포병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킨 '경제-안보 선순환'의 좋은 사례로,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의 절감시켜주므로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투자'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둘째,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의 내실화를 우선 추진

- 북한 :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합의문을 토대로 3통 문제 개선, 노동력 공급 확대, 근로자 관리의 자율성 보장을 전향적으로 해결
 - 3통 문제 해결 : 상시통행 허용과 24시간 통과시스템 도입, PC방 형태의 제한적 전산센터 운영과 인터넷·이동전화 허용, 그리고 선별검사와 통관 시스템의 표준화로 통합시스템 구축 등
 - 노동력 공급확대와 노무 관리의 자율성 보장 : 북측의 개성 인근 노동력 충원과 함께, 입주기업에게 북한 인력의 노무관리(작업지시·기술지도)와 인사권(근로자 채용·배치)에 대한 많은 재량권 부여로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
 - 고급 인력 육성 : 기 설립된 기술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요구를 적극 반영, 기술 습득과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 남한 : 5.24조치 완화로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허용
 -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U-Turn 기지로 활용 확대 : 1단계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
 - 인력 수급 대책 : 부족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건설이나 출퇴근 도로 보수, 통근 버스 확대 등을 통해 원거리 지역의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
 - 공동브랜드의 적극 홍보 : 남남북녀 의미의 시스브로(SISster-BROther)를 세계적인 유니클로, 자라와 같은 SPA 브랜드 및 명품 브랜드로 육성⁵⁰⁾

○ 셋째, 중장기적으로 확대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인정 노력이 필요

- 통합형 개성공업지구로 개발 : 현재 단순 제조업 위주의 공단에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관광·상업·물류 등이 추가된 '통합형 개성공업지구'를 구축하여 확대 발전시켜나아가야 함

50) SPA :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 자사의 기획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을 의미

- 2단계 개발 방향 : 경공업과 전기·전자 등 중공업, 의료기기 등 도시형 산업 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첨단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출 전진지기를 구축해야 함
 - 3단계 개발 방향 :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복합공업단지로 발전시켜 대기업 및 해외기업 등을 유치해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해야 함
 - 한편, 개성 역사유적지구(UNESCO 세계유산 등재) 중심의 개성관광단지 조성 등 배후 지역 개발도 병행
- 국제적 공단으로 구축 : 개성공단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개발 사업에 국제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제적 공단의 기틀 마련
 - 자본의 국제화 : 다국적 기업 참여 유도는 투자 자본의 확대 효과는 물론,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기술의 국제화 :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개성공단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추구
 -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의 국제화 : 3통(통신, 통행, 통관) 확대와 4대 경험합의서 등 법·제도의 국제화를 통해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 계기로 작용
 - 한편 북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시장경제 학습 확대·기업경영 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 회생의 기제로 작용될 것임
 - 국내산 인정 노력 : 해외 판로 확보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특례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미, 한-EU, 한-중 FTA 과정에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역외가공 특례인정'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

< 참고 1 >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① 법·제도의 이행 ② 불합리한 제도 개선 ③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결 등을 통한 세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

구분		현황	과제	
국제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법·제도의 이행	공단의 안정적 운영	- 남북간 합의 이행 - 분과위원회를 통한 투자자 권 리 보장 방안 마련 - 남북 민사형사 사법공조 방안 협약 - 시장경제 법제 도입 논의	
		3통 관련	- 2007년 합의 - 8. 14 합의	- 3통의 선진화 - 자유 체류·자유 왕래 보장
		분쟁해결 절차	-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고 있음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남북 상사중재규정 마련 - 공단 내 특수법원 설치
		노무관리	- 노무 관리의 자율성이 제도 상으로만 보장	- 자율적 노무 관리 보장 - 근로계약제 시행
		임금관련	- 임금 직불을 규정하고 있으 나, 간접 지불 시행	- 임금 직불 시행
	불합리한 제도개선	세무제도	- 지나치게 단순한 규정 - 불합리한 세칙 존재	- 조세 부과의 일반 원칙 확립 - 선진적 조세 인프라 이식
		보험제도	- 북한 지정 사업자에게 보험 의무 가입 조항 규정	- 남한과의 합작 보험사 설치 - 선진적 보험기법 전수
	국제 경쟁력 강화	대북제재 단계적 해결	전략물자 반출통제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의한 물자 반출 통제 -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 북한 비핵화와 연계하여 단계적 반출 가능 품목 확대
			원산지 인정	-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는 한국산 인정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국제화의 주요 현안과 과제,” 체어퍼스노트, 2013. 12. 27.

< 참고 2 > 개성공단 사업 일지

일자	추진 내용
2000. 08.	·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 08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
2002. 11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06	·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2004. 04	· 통일부, 1단계 100만평(3.3km ²) 협력사업 승인
2004. 06	·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2004. 12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 09	· 1단계 본 단지 1차 24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7. 05	· 한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06	· 1단계 본 단지 2차 183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8. 11	· 누적 총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2009. 05	· 북한, 개성공단 관련법규 및 계약 무효 선언
2009. 06	· 남북한, 1~2차 개성실무회담
2009. 07	· 남북한, 3차 개성실무회담
2010. 05	· 한국,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 시행
2010. 07	· 북한 근로자 총 임금 지급액 1억 달러 달성
2010. 09	· 누적 총 생산액 10억 달러 달성
2011. 12	· 누적 총 생산액 15억 달러 달성
2012. 10	· 북한, 개성공단 8개 기업에 총 16만 달러 과세 일방 부과
2013. 03	· 북한, 최고 존엄 훼손 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2013. 04	· 김양건 북한 대남 담당 비서,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에 따른 사실상 가동 중단
2013. 05	· 남한, 잔류 인원 7명 전원 귀환
2013. 06	· 북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당국회담 제의(格 문제로 결렬)
2013. 07	· 남북 실무회담 개최(개성공단 정상화 인식 공유)
2013. 08	·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5개항 정상화 합의)
2013. 09	· 개성공단 재가동(9. 16)
2014. 04	·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방문(4. 29) · KOTRA,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시스브로 설명회 개최(4. 29) ※ 시스브로 : SISBRO · 남과 북은 한민족이자 형제자매라는 뜻
2014. 05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및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방문(5. 2)
2014. 06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 기업 최초
2014. 08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방문 행사 요원 7,000명 단체복 제공
2014. 10	· 공동 의류브랜드 SISBRO, 첫 홈쇼핑에서 매진 판매(10. 24)
2016. 2	·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2. 10) · 북한 조평통,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2. 11)

3. 對北관광사업의 주요 내용

(1) 금강산관광사업의 주요 내용

- (금강산관광)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중단되어, 중단 8년째를 맞고 있음
 - 배경 :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민간 기업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과하는 방북을 실현하고,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을 논의
 - 관광 개시 : 1989년 1월 「금강산관광 개발의정서」 체결 후 10년만인 1998년 11월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본 관광 시작
 - 연간 35만 명 방문 기록 : 2002년 11월에는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 2008년 7월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6만 명에 달함
 - 2007년 연 35만 명이 방문했으며, 2008년 연 40만 명 관광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⁵¹⁾
 - 중단 8년째 :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관광이 중단된 지 8년째임
 - 정부는 초기에는 관광 재개 3대 선행조건⁵²⁾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전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
 - 북한은 진상규명 재조사는 불필요하며, 재발방지와 신변안전보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로 직접 보장(2009. 8)했다고 주장

51) 1998년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육로관광이 실시되고, 2004년 해로관광이 중단되었으며, 2008년 승용차관광이 실시되었음.

52) 3대 선행조건 :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장치 마련.

〈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

(단위 : 만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연도별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6	141	176	196

자료 : 현대아산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한편, 금강산관광은 2003년 평화항공여행사의 백두산·평양관광과 10월의 평양 류경체육관 개관 기념관광, 2005년 8월의 개성 시범관광과 2007년 12월의 개성 본관광 등으로 이어짐

(2) 개성관광사업의 주요 내용

- (개성관광) 2007년 12월 5일 관광을 개시하여 2008년 11월 29일 관광이 중단 되었으며, 동 기간동안 내·외국인 11만 명이 관광
- 개성관광은 2005년 8월에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시범관광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에 3차례의 시범관광을 한 데 이어 2007년 12월부터 본 관광이 이루어졌음
 - 하루 300~400여 명의 관광객들은 고려의 성균관과 선죽교, 박연폭포 등의 역사유물 등을 관광했고, 시범관광을 포함하여 총 11만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왔음
- 개성관광은 서울에서 60~70여 k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당일관광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도 직접 볼 수도 있어 인기관광상품이었음
 -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이의 영향으로 개성관광도 2008년 11월 29일에 중단

(3) 백두산관광사업의 주요 내용

- (백두산관광) 2007년 11월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남북관광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2008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 백두산관광은 2003년 9월에 평화항공여행사와 북한의 금강산관광총회사간 계약 체결로 상업적 관광이 이루어져 9차례에 걸쳐 총 780여 명이 백두산을 다녀왔음
- 2005년 7월에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합의를 체결
 - 2005년 8월에 삼지연공항의 활주로 공사용 피치를 제공한 데 이어,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시범관광 실시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2007년 11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대그룹 일행에게 백두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고 양측은 2008년 4월을 목표로 관광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음
- 이후 통일부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의 정부합동반이 북한과 중국 측의 백두산 지구를 방문하여 점검하기도 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임

4. 남북 간 물류 사업의 주요 내용

(1) 남북 간 물류 사업 개요

- (현황)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0년 중반의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한 데 이어, 2002년의 특사 방북 시에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
- 이 사업은 당초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1992. 7)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남북 당국 합의 하에 2005년 8월에 『차량운행 기본합의서 및 열차운행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 연결 철도 및 도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도로는 2004년 11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12월부터 정상 활용 중임
 - 남북간 도로 연결로 남북 차량 및 인원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중 연간 차량은 6만 대, 인원은 40만 명 정도가 방북
 - 다만, 도로 이용시 사전 통보, 시간을 정한 편대 운행 등으로 다소 사용에 불편함이 존재

- 철도(경의선 문산~개성간 27.3Km, 동해선 제진~금강산간 25.5Km)는 2005년 12월에 동해선 남측 본선 궤도 부설이 완료됨으로써 열차 운영을 위한 남북간 기본적인 공사는 완료되었음

- 2006년 5월 25일 열차 시험 운영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산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중단된 상태임

- (효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개성공단 개발 및 남북 관광 등의 경험 활성화를 비롯하여, 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

- 물류비 절감 : 인천~남포간 해상 수송시 1 TEU당 운임은 720 달러이나, 경의선 철도 수송시의 수도권~평양권간 물류비는 약 200 달러 수준으로 약 520 달러가 절감
 - 물류비 절감 효과는 2005년도 남북한간 해상 물동량 679.5만 톤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억 3,5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 경험이 확대될수록 절감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됨⁵³⁾

〈 인천~남포(왕복)간 수송 수단별 비교 〉

구분	수송 일수	운임(TEU당)
해상 운송(A)	7~10일	720 달러
철도 운송(B)	1~3일	200 달러
차이(A - B)	6~7일	520 달러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53) 1 TEU의 수송량을 약 15MT로 가정하면, 물류비 절감 효과는 2005년도의 남북한간 해상 물동량 679.5만 톤 ÷ 15MT × 520 달러 = 2억 33,556만 달러에 달함.

- 경험 활성화 : 철도 수송의 적시성과 대량 수송의 장점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남북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며,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
-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 : 한반도횡단철도(TKR)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등과 연계될 경우,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로 육성·발전시킬 뿐 아니라, 남북한 양측 모두 통과료 수입이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북한 경제 회생 지원 : 북한의 철도 시설 현대화는 물론, 건설과 서비스 분야 등의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을 촉진⁵⁴⁾
 - 경의선 연결 및 북한 철도의 개보수를 통한 투자가 북한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산업 연관 효과는 6년간 약 1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남북한 1일 생활권 시대 개막 : 통행 시간 단축에 따르는 지리적·공간적 거리감 축소는 물론 심리적 거리감의 축소로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동질감 회복과 1일 생활권 시대를 개막
- 한반도의 긴장 완화 : 지뢰 제거 작업 및 군사 직통 전화 운용 등 철도 연결 과정에서의 대화와 접촉 촉진은 물론, 철도 연결을 통한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크게 보탬이 됨

(2) 부문별 사업 내용

○ (철도) 남북 공동 경의축 및 동해축 철도연결사업은 현재 중단 상태

-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 간 철도는 2003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2007년 화물 열차 운행으로 활성화 기대가 컸으나 2008년 북한의 12.1 조치로 중단
 - 2000년 6.15 정상회담 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 2003년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철도궤도 연결
 - 2007년 5월 경의선 문산~개성 간,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간 열차 시범운행
 -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간 매일 1회 12량의 화물열차 정기운행
 - 2008년 북한의 12.1 조치로 중단

54) 최임봉, “남북 철도 연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경의선 연결 및 북한 철도 개보수 효과를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제569호, 한국산업은행, pp. 1~30.

※ 북한의 121 조치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 7)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한이 취한 남북 간 육로통행 및 북한 내 체류 관련 제재 조치임.

□ 북한의 철도 현황

- 북한은 철도 중심의 물류시스템 운영 중
 - 북한은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0% 정도를 철도가 담당
 - 북한의 철도는 약 10개의 기간노선과 약 90개의 지선으로 구성
 - 북한의 철도연장 길이는 총 5,302km(협궤구간 포함)로 이 가운데 전철화 구간 길이는 4,232km(전철화율 80%)로 추정

〈 남북 간 철도 현황 비교(2014년 기준) 〉

구분	남한	북한
노선	■ X자형, 총 88개 노선	■ H자형, 100여개 노선
열차운행 최고속도	■ 여객 : 300km/h ■ 화물 : 120km/h	■ 여객 : 50km/h ■ 화물 : 40km/h
철도연장 길이	3,590km	5,302km
전철화율	68%	80%
복선화율	49%	3%
보유차량	1만 8,248량	2만 2,447량

자료 :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 를 참고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도로) 북한의 경의축 및 동해축 고속도로 정비 및 연결을 통한 한반도 종단 도로망 구축 사업은 현재 답보 상태

- 남북 간 도로는 2003년부터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었으나, 북한 고속도로 정비 및 연결 사업은 현재 미추진
 - 2000년 6.15 정상회담 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 2003년부터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경의선 도로 차량 임시통행 실시 및 동해선 도로를 통한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실시
 - 2007년 10.4 정상회담 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합의 후 12월 2차례 공동현지조사 실시
 - 2008년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및 공사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 협의

- 북한의 8개 고속도로와 10개 1급 도로에 대한 신규 포장 및 시설 보강 필요
 - 8개 고속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으나, 10개 1급도로는 포장률이 낮아 포장공사 필요
 - 8개 고속도로 중 평양~개성, 평양~묘향산, 평양~남포 고속도로만 아스팔트 포장,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신규 포장 필요
 - 고속도로를 제외한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⁵⁵⁾

〈 남북 간 도로 비교(2014년 기준) 〉

구분		남한		북한		남/북 비율
수송 분담율 (%)	철도	여객 13.2	화물 10.9	여객 74.8	화물 90.7	-
	도로	여객 85.0	화물 51.4	여객 24.9	화물 6.1	-
	해운	여객 0.2	화물 37.5	여객 0.3	화물 3.2	-
	항공	여객 1.6	화물 0.2	여객 -	화물 -	-
총도로연장(km)		105,673		26,164		24.8%
고속도로연장(km)		4,139		729		17.6%
국도연장(km)		14,246		7,700		54.1%

자료 :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를 참고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항만) 북한은 지리적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청진, 흥남, 라진, 선봉, 원산항 등 5개 주요 항구가 집중, 서해안에는 남포, 송림, 해주, 송관항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항만 발달이 저조
-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선박 접안여건이 양호하나 서해안은 수심이 얇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불리
 - 북한은 약 3,000km에 달하는 동서해안이 분리된 지리적 한계로 연안 해운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하역시설의 노후와 전용부두시설의 부족, 항만관리 운영의 부실, 화물의 부족으로 인해 항만시설의 이용도가 50% 미만임
 - 2014년 기준 북한의 하역능력은 약 4,156만 톤으로 남한의 4.0% 수준임
 - (과제) 주요 항만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사업 추진과 함께, 항만배후수송체계 정비와 연계

55) 2013년 12월 기준, 북한 전체 도로 포장률은 19.3% 및 5,042km이며, 한국은 82.5% 및 87,782km임.

〈 북한의 주요 항만 〉

구분	항명	하역 능력 (만 톤)	접안 능력 (만 톤)	수심 (m)	부두 연장 (m)	주요 장비	비고
동해	청진	1,156	4	7	2,138	15톤급 크레인	- 1974년 시설과 장비 보강 - 1983년 중국의 대일중개무역 - 동항 : 만경봉호 전용부두 - 서항 : 김책제철소
	흥남	260	1	11	1,634	10톤급 일반 및 갠트리 크레인	- 1960년 무역항으로 개항
	라진	600	1.5	11	2,515	5~15톤 크레인	-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 소련의 대동남아 수출창고
	선봉	200	0.5	12	1,253	-	- 석유도입항으로 개발
	원산	170	1	7	3,166	-	- 1976년 무역항으로 개항 - 군항으로 활용
서해	남포	750	5	9~11	4,000	5톤급 크레인, 해상크레인	- 평양과 고속도로, 전기철도로 연결 - 동항은 석탄부두로 이용
	해주	240	0.7	10	1,348	10톤급 크레인	-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	100	1.5	11	900	18톤급 크레인	- 1975년 무역항으로 개항 -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합계	3,476			16,954		- 북한 전체 하역능력은 2014년 현재 4,156만 톤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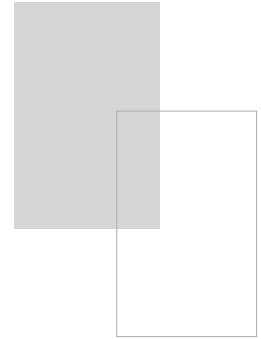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청, KDB 산업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참고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추진 경과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추진 경과 >

일자	추진 내용	비고
'92.2.19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시 철도·도로 연결 합의	
'00.7.31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1차 장관급회담
'02.4.5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특사 방북
'02.8.30	동해선 임시도로는 '02년 11월까지 완공 합의	2차 경추위
'02.9.17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1차 실무협의회
'02.9.18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동시 착공식 개최	
'02.12.31	우리측 경의선 철도 전구간 공사 완료	
'03.1.4	『차량 운행 합의서』 체결	
'03.1.27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잠정합의서』 채택	군사실무회담
'03.2.14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및 금강산 시범육로관광 실시	
'03.6.14	남북 철도 궤도 연결 행사 개최	
'03.10.31	우리측 경의선 도로 전구간 공사 완료	
'03.12.8	경의선 공사 구간 상호 방문 실시	
'04.3.5	올해 안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범 운행 합의	8차 경추위
'04.4.10	『열차 운행 합의서』 합의	4차 실무협의회
'04.10.말	남북 경의선·동해선 포장 공사 완료0000	
'05.8.18~20	경의선 방면 공사 실태 공동 점검 실시	
'05.8.23~25	동해선 방면 공사 실태 공동 점검 실시	
'06.5.11~12	5.15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 실시 합의	12차 실무접촉
'06.5.24	북측, 열차 시험 운행 행사 취소 통보	
'06.6.6	열차 시험 운행 조건으로 『경공업-지하자원협력합의서』 발효 합의	12차 경추위
'07.3.2	상반기 내 열차 시험운행 합의	20차 장관급회담
'07.5.17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동시 시행	
'07.10.4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개통 합의	2차 정상회담
'07.12.11	경의선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개통	
'08.11.25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중단	
'15.8.5	경원선 복원 사업 기공식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다자협력 추진 현황

1.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으로 국내 민간 3개사가 북러 합작사 '나선콘트랜스'의 러시아 지분 일부를 매입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임
- 사업 개요 :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54km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3호부두 현대화, 나선특구의 개발·운영권 보유(2008년 이후 49년간), 그리고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 확보를 통해 나진항 해운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육로를 연계하는 유라시아 복합물류 운송 사업임
- 이 사업은 54km의 나진~하산간 철도현대화, 10개 철도역, 3개 터널, 40개 이상의 교량과 그 이외의 설비를 개보수(두만강~나진 구간의 통과능력은 1일 12열차 왕복, 물동량 연간 4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음)

- 특히 이 사업은 남·북·러 간의 TKR-TSR 연결 사업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X) 사업의 시범 사업임
 - ※ 나진~하산 구간은 표준궤(1,435mm)와 광궤(1,520mm)가 동시에 부설된 복합 궤 구간이며, 북·러 국경에서 환적·환승 없이 나진항에서 바로 광궤 열차로 운송 가능함
- 사업 규모와 지분 구조 : 총 사업비 3억 6천만 달러로 이 중 한국은 34.3% 차지
- 지분 구조 : 국내 3개사(현대상선·코레일·포스코)가 러시아 철도공사 지분(총 70%)의 49%를 매입하여 러시아(35.7%) - 한국컨소시엄(34.3%) - 북한(30%)으로 구성
 - 2008년에 러시아(70%, 자본·설비 투자)와 북한 나선시(30%, 토지 등 현물 투자)가 공동 개발기로 합의
 - ※ 총 사업비 3.6억 달러 가운데 실제 자본은 10%인 3,000만 달러(나머지는 부채)
 - 특히 이 사업은 남북러 간의 TKR-TSR 연결 사업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X) 사업의 일환으로 3 차례의 시범운송이 이루어졌음
 - 박근혜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간주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음
 - 업체간 역할 분담 : 현대상선은 해상 운송을 담당
 - 포스코는 러시아·북한의 유연탄 수송망 확보를 위해, 코레일은 철도 운영을 담당
 - 특히 현대상선과 현대아산은 훈춘 국제물류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복합물류기지 조성과 관광, 나선개발 사업(LH와 200만평 개발 검토) 참여 등에 관심

<TSR-TKR 연결 시 모습>



<나진~하산 프로젝트>



- 추진 현황 : 3차례의 시범사업과 수차례의 현지 실사를 실시
- 사업 제1차 시범사업(2014. 11)은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 500톤을 나진~하산 간 철도를 통해 운송한 후에 나진항에서 포항항으로 운송하였음
 - 제2차 사업(2015. 4~5월)은 유연탄 14만 톤을 포스코와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의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광양항, 당진항, 보령항 등으로 유입하였음
 - 제3차 시범사업(2015. 12)은 컨테이너를 통한 운송이란 점과 남북러에서 남북중러 사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현지 실사 : 나진 콘트랜스의 지분가치 평가 및 공정률 확인 목적
- 나진항 : 2014년 7월에 3호부두 벌크터미널 완공 (연간 400만톤 처리 규모)
 - 벌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항만으로 운영시, 한국은 러시아 물동량 10만 TEU 화물을 TSR로 운송가능하며,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로 연 40~70만 TEU 확대 예상
 - ※ 1 TEU = 길이 20ft(6.1 m) × 폭 8ft(2.44 m) × 높이 8.5ft(2.6m) = 1,360 cu ft(39m³)

〈 사업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2006.	- 남북러 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논의 시작
2008. 10	- 북러간 3:7로 나선콘트랜스 합작사 설립,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착공
2011. 10	-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 완공 및 시범 열차 운행
2011. 12	- 러시아철도공사, 포스코에 同 사업 참여 가능성 타진
2012. 10	- 현대상선, 同 사업 관련 코레인과 컨소시엄 구성
2012. 12	- 러시아철도공사,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코레일 참여 요청
2013. 9	- 나진~하산간 철도 54km 완공 준공식 개최
2013. 11	- 한러간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지역 항만 개발 MOU 체결
2014. 2	- 1차 나진 현지 실사 (3사 공동 방북 실사)
2014. 7	- 2차 나진 현지 실사 (3사 공동 방북 실사) · 나진 항만 준공식 개최
2014. 11	- 1차 시범사업, 4만 500톤의 유연탄 시범 운송
2015. 4	- 2차 시범사업, 14만 톤의 유연탄 시범 운송

○ 예상 효과 :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

- 3차 사업의 경우,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과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 170톤을 광양항과 포항항, 부산항으로 들여오므로써 엄청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예컨대 생수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종전에는 백두산 인근의 얼다오바이허 (二道白河) 현지 공장에서 철도로 다롄항까지 1,000km를 이동한 뒤 선박을 통해 다시 평택항(600km)이나 부산항(1,000km)으로 들어왔었음
 - 그러나 3차 시범사업에선 현지 공장에서 나진항까지 차량으로 250km를 운송한 뒤 부산항까지 선박으로 950km가 소요되어 전체 운송구간이 1,200km에 불과
 - 따라서 기존의 평택항보다는 400km, 부산항에 비해서는 800km나 짧아 물류비용과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음⁵⁶⁾

- 그러나 이 사업도 2016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 진입으로 잠정 보류된 상황

56) 이지성, “신춘호의 독심… 북한 나진 통해 '백산수' 반입, 글로벌 생수신화 쓴다.” 서울경제신문(2015. 12. 9), 제4면.

< 참고 > 나선시 현황

- 위치 : 함경북도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청진(북한) - 중국(옌지·훈춘) - 러시아(나훗카)의 3국 접경지대의 대삼각권의 중심에 위치한 물류거점 도시
- 나진·선봉은 1991년에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2010 나선특별시 승격)
- 나선 지역은 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물류·운송 및 정치·군사적 요충지로, 최근 동북아의 경제성장과 북극항로 개발로 이 지역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훈춘 200km 주변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가 약 10개 분포
 - 나진항은 동북아의 싱가포르항의 경쟁력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짐 로저스, 2004. 1)
 - ※ 소삼각권은 두만강경제구역(TREZ : Tumen River Economic Zone)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 중국 훈춘 - 러시아의 포시에트로 연결되는 1,000km의 소삼각 지역을 일컫음
 - ※ 대삼각권은 두만강경제개발지구(TREDA :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으로 북한의 청진, 중국의 옌지(延吉), 러시아의 나훗카를 연결하는 5,000km 지역
 - ※ 2020년 이후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토크의 북극항로가 완전 개통되면 부산~싱가포르~수에즈운하~로테르담의 기존항로 2만 100km에서 1만 2,700km로 대폭 단축
- 경제 현황 : 2011년 기준으로 19.8만명으로,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발전 가능
- 산업 현황
 - 기계 : 조선 및 배수리(라진조선소, 창평배수리공장), 농기계 생산 등
 - 화학 : 석유정제업(승리화학연합기업소 : 선봉)
 - 기타 : 목재가공업(웅상), 농업(밭 80%, 옥수수, 콩), 양식업과 수산물 가공업 등

〈 나선시 현황 〉



자료 : 각종 언론보도 참고.

- 인프라 현황

- 전력 : 선봉화력발전소(29만 KW), 청진화력발전소(15만 KW), 서두수수력발전소(51만kW, 청진), 부령수력발전소(4만 KW),
- 철도 : 평라선-함북선이 연결되는 405km의 단선 순환철도망(40km/h 미만)
- 도로 : 주요 간선(청진~나선), 순환 도로망(청진~나선~온성~회령~청진, 384km), 훈춘~원정리~나진항 고속도로 건설중
- 통신 : 지역간 통신망(평양~청진~나진), 국제통신 열악(평양위성통신지구국 통해 연결)
- 항구 : 나진항(수산물, 목재,석탄, 컨테이너화물), 선봉항(유류 중심), 웅상항(목재)
- ※ 나진항 부두는 1호(중국, 100만톤, 잡화부두), 2호(북한, 150만톤, 컨테이너), 3호(러시아, 100만톤, 컨테이너, 지린성 목재 등), 4~6호 부두는 중국에게 50년간 임대 의 우선사용권
- 공항 : 나선 지역내 군용비행장, 청진에 어랑공항(국제선은 평양 순안공항 이용)

- 개발 계획 : 북중은 나선지대에 8.5조원을 투자해 470km²(1.4억평)의 개발계획 발표(2011)

- 중국은 나선항을 동북3성의 지하자원과 곡물의 남방 운송 통로로 활용 모색
- 북중 무역의 약 70~80%는 신의주-단둥에서, 나머지의 80%는 훈춘-나선에서 거래

· 물류비 절감 효과 : 하얼빈~상해로 가는 컨테이너 물류비용은 내륙철도 이용시 2만 9,500위안(15일), 대련항 1만 2,100위안(8~10일), 나진항은 9,000위안(7일)

※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 : 중국은 북한(나진)과 러시아(자루비노) 항구를 빌려 동해 진출

- 나선 3대 개발목표 : 선진제조업 기지, 동북아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

· 산업 배치 : 1대(지대) - 4편(나진·선봉·웅상·굴포) - 10구역으로 나누어 유치 개발

〈 주변국의 개발 동향 〉

	주요 개발동향	방향 및 전략	주요 관심 사항
중 국	-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2009) - 훈춘 국가경제합작구 - 훈춘~나진 도로 확장연결 - 나진항 1호부두 개발	- 국제산업기지 개발 (수출가공+변경무역) - 동해출해권 확보 (해군력 동해 진출)	- 러시아 남하정책 견제와 환동해(일본) 진출 모색 - 노동집약산업 이전지 - 물류 운송 (항구 활용)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 극동발전전략 2025 - 나진항 3호부두 개발	- 자원중심의 수출가공산업 - 블라디보스토크~나훗카~하산 연계 개발	-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동북아에서의 입지 제고 - 인프라 연결(철도, PNG 등) - 목재가공, 제지산업, 자원
일 본	- 임해형 석유중화학공업지대 개발계획(안) 제시(1996) - 훈춘~자루비노~니가타~속초 해상수송로 구축	- 동북3성 진출路 확보 - 공해산업의 해외 이전지 확보	- 물류 운송(해상 수송로) - 석유화학단지 건설(공해산업)

주 : 러시아 극동발전전략 2025는 2025년까지 극동, 부랴트공화국, 이르쿠츠크주 사회주의 발전 전략을 통해 이 지역의 철도, 도로, 에너지 등을 집중 개발한다는 것임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에서 발표)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현황과 전망

(1) 개요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두만강개발계획(TRADP)로 시작되었으며, 동북아 4개국 간의 두만강지역 경제협력사업을 지원
 -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설립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 회원국의 주도적 활동 부족, 두만강 소지역 개발 집중, 과대평가된 사업계획 등의 문제로 투자 사업 진행이 난항에 부딪침
 - 이외에도 1997년 동아시아 통화 위기 및 일본의 가입 유보, 북한의 폐쇄적 조치와 불리한 투자환경 등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들로 지적
 - 2005년 열린 장춘 포럼을 통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로 개칭하면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실질적 협력 모색

〈 TRADP와 GTI 비교 〉

TRADP	항목	GTI
- 당사국위원회, 조정위원회, 두만사무국	조직	- 세부 분야별 위원회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 위원회) - 기업인 자문회의 (민간기업과 정부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참여 국가	- 변동없음 (단, 2009년에 북한 탈퇴)
- 연변, 나산선봉, 포시에트의 두만강 소삼각지역 중심	대상 지역	-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
- 1기(1991년~1996년) - 2기(1997년~2000년) - 3기(2001년~현재) ※ 2005년부터 GTI로 변경	사업 기간	- 2006~현재
- UNDP 지원금 - 회원국 기탁금 - 개별기업의 투자	사업 자원	- 변동없음 (UNDP의 비중 감소, 회원국가 및 기업의 비중 증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 북한은 2009년 12월에 UNDP의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GTI에서 탈퇴를 선언

- GTI는 현재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GTI 추진 주요 프로젝트 〉

	프로젝트 명	현재상황
교통	- 동북아(NEA)페리 항로 인프라 건설 구상	- 2009년 5회 운항뒤 잠정중단
	- 자루비노 항구 현대화	- 사업 협의중
	- 몽골~중국 간 철도 건설	- 사업 협의중
	- 훈춘~Makhalino 철도 건설	- 2004년 운송중단
	- 중국~북한 간 도로·항만 연계 사업	- 2010년 두만강대교 보수완료
에너지	- 역내 에너지 협력 역량 강화	- 협력방안 모색중
관광	- 관광 협력 역량 강화	- 관광가이드 발간 추진
투자	- GTI 투자 교육 프로그램	- 정부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
환경	- 두만강 수자원 보호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합의
	- GTI 환경 협력	

주 : UNDP, Tumen Secretariat

1) 교통 (Transport)

① 동북아페리 사업

- 속초항(한국), 자루비노항(러시아), 니카타항(일본)을 연결하고 훈춘(중국) 및 블라디보스톡까지의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동북아페리’ 사업 추진
 - 2000년 4월 동춘 여객의 주도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니카타(일본) 항로를 추가하여 환동해 물류 및 여객사업으로 발전 계획
 - 2008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각각 51%, 16%, 16%, 17%를 출자하여 ‘동북아페리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속초-니카타-자루비노 훈춘을 잇는 여객 물류사업 시작
 - 2009년 7월에 시험운항 뒤, 본격적인 운항을 개시하였으나 물류 실적 부족 과 용선계약 만료 등으로 사업 잠정 중단

② 자루비노 항구 현대화 사업

- 낙후된 자루비노 항구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 물류망과 교통망을 구축하는 '자루비노 항구 현대화 사업' 추진
 - 2004년 Far Eastern Marine Research와 Design and Technology Institute (FEMRI, Vladivostok, Russia)가 새로운 항구 디자인 완성
 - 2004년 AS 물류회사가 2010년까지 항구 개발 계획 수립하고, 러시아 국영 철도회사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 협정 맺음
 - 2009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각종 투자와 물류 사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투자가 위축되었고, GTI와 관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업 재개가 협의 중

③ 몽골~중국 간 철도 사업

- 동해로의 항구로 연결하여 몽골 내륙 개발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과 물류 통로를 확보하는 '몽골~중국 간 철도 사업'을 계획
 - 1998년부터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2009년에 투자개발회사가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
 - 몽골 정부, 중국 중앙 정부와 길림성 정부, 투자개발회사와 국제 금융 회사들의 참여 등으로 사업 추진 본격화
 - Choibalsan - Tamsag Bulag - Sumber(Mongolia) - Arxan(China) - Ulan Hot - Baicheng을 연결하는 '중-몽 철도사업' 청사진 제시

④ 훈춘~Makhalino 철도 연결 사업

- 훈춘(중국)과 Makhalino(러시아)를 잇는 철도사업은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러시아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최단 경로를 통한 물류운송사업계획임
 - 1998년 양국의 국경 개방 협정을 맺고, 2000년 훈춘과 Makhalino를 잇는 철도가 완성되었음
 - 연간 3백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었으나, 철도 연결 공사 이후 화물 수송 실적이 저조하여 2004년 9월에 철도 운송이 중단됨
 - 현재 철도의 재개를 위해 철로 보수 공사와 관리 운영 책임 문제 및 국경 출입사무소 건설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⑤ 중국~북한 간 도로·항만 연계 사업

- 북한과 중국 간 도로 및 항구 연결 계획은 훈춘과 나진항을 연결하여, 러시아, 일본, 한국과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운송망 건설 사업임
- 2007년 말, 중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으며, 2008년 양국 간 교통 협정이 맺어짐
-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함께 훈춘-나진 간 도로 건설 공사를 맺가로 나진항 사용권을 획득
- 2010년 6월 1일에 권하(중국)~원정리(북한)을 잇는 두만강대교가 보수 공사가 완료

2) 자원 (Energy)

- GTI는 회원국 간의 자원 개발과 협력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적 환경 구축 및 파트너십 제고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탈퇴 이전)의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자원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회원국 정부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한 '자원위원회(Energy Board)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자원전문가협의회'(Energy Expert Council)를 구성하여 동북아 지역 자원 개발 및 협력 방안 연구
- 동북아 통합 가스관과 동시베리아 석유관 및 항만 건설 사업 등이 구상 중이며, 석유 시장 개발, 자원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자원 개발 투자 지원

3) 관광 (Tourism)

- GTI는 동북아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협력 위원회 (Tourism Board)를 설립하여 지역 정부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 GTI 관광 협력 위원회는 회원국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 상품 개발과 투자 방안 구상
- GTI 관광 가이드 발간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와의 협력 관계 구축

- 회원국 간 비자 제도 개선책이 논의 중에 있으며, 백두산 관광을 비롯한 다국적(Multi-destination)관광 상품 개발 지원

4) 투자 (Investment)

- 두만강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투자 포럼 개최 및 중앙·지방 정부 관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GTI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관료, 기업 대표, 투자 전문가, 연구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각종 세미나 개최
- 또한 회원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역 활성화 위원회(Trade Facilitation Committee)를 설립하여 역내 교역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 한국 KDI와 공동으로 정부 관료들의 투자 유치 교육 및 투자 유치 전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마련

5) 환경 (Environment)

- 두만강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개발 유도
- 회원국들은 이미 1995년부터 '두만강 및 동북아시아 경제 개발과 관련한 환경 보호 원칙에 대한 양해각서'를 채택함
-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의 추진 시, 두만강의 수자원 및 환경 자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 영향 평가 사업 시행
- 환경 협력 위원회(Environment Board)는 회원국가 대표들 사이에 환경보호 원칙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환경 영향 평가 사업의 네트워크 설립 추진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전망

- (기대효과) GTI는 동북아시아 신경제권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 경제 기반 마련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 : 중국과 몽골, 러시아, 남북한 및 일본을 연결하여 동북아 신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역내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 GTI를 통해 몽골과 중국 내륙 지방이 동해와 연결되면서 일본, 한국으로의 자원 수출과 교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GTI를 통한 몽골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 한국과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 등의 결합은 높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됨
 - GTI 협력을 통해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시, 북미 경제권과 EU경제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

-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한 경제 개방 : 두만강 지역 개발에 따른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 사업 및 북한 경제의 개방 유도 효과 기대
 - 북한은 현재 GTI에서 탈퇴한 상태이나, GTI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경제 협력의 틀 안에서 남북 경험과 대북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
 - 현재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 등이 동북아 지역을 잇는 핵심적인 물류기지로 발전할 전망
 - GTI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지역과 연계된 관광 및 산업 인프라 개발 등은 북한 경제의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
 - 다자간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시장 경제 학습과 각종 경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경제 개방이 촉진, 기술 이전 및 인적 자본의 확충 등의 효과 등이 기대

- 대중 의존도 약화 및 통일 경제 기반 조성 : 다자간 협력으로 일방적 대중 의존도 약화 및 북한 산업 개발로 인한 통일 경제 기반 조성 효과
 -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경제 개발 사업은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북한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북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다자간 협력 사업 추진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선점 현상 및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약화
 -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경제성장으로 남북 간 경제 격차 해소 및 남북 통일 시에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통일 비용 절감이 예상됨

- (문제점) 국가 간 협력과 인프라 투자 및 자원 마련이 힘든 상황이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협력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됨
- 지역적 특수성 : GTI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중앙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협력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지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회원국 사이에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와 이질성이 커서 협력 기반 조성이 어려움
 -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규모 투자 위 중앙 정부 차원의 협력이 부진한 상황임
- 투자 리스크 : 지역 내 안보 리스크와 두만강 지역의 인프라 및 권역별 배후 산업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움
 - 북한 핵문제와 남북 관계, 중·일과 러·일 간의 영토 분쟁 등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가 간 협력 사업 추진의 어려움
 - 특히, 국경을 접한 국가 간에 안보 문제 등으로 교통이나 관광 협력을 위한 국경 개방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
 - 두만강 지역은 대체로 저개발지역이며, 배후산업단지 발전이 부족하여 투자 기업이 단기간에 이익을 확보하기 힘든 환경임

(3) 대응 과제

- GTI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및 장기적인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 차원의 GTI 사업 참여와 동북아 지역 자원 개발 및 물류 산업 개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신동북아 경제권 형성이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역내 리더십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GTI 사업 참여 필요
 - 북방 국가들의 자원 개발 사업과 벌크 화물 운송 사업 등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존 자원의 국내 도입을 위한 대비책 필요
 -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으로 물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

- 효과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 및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보장 대책을 마련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현재 기금 집행이 부진한 남북협력기금의 GTI 경제 협력 사업에의 활용 방안을 모색
 - 효과적인 GTI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및 회원국들 간 공동펀드설립을 통해 재원 마련
 -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보험과 투자액 보전을 위한 회원국 정부 차원의 투자 보장 대책 마련

- 국제적 교육기관의 건설 지원을 통해 지역내 정치적·문화적·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도록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
 -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은 국제적인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를 유도
 -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기관과의 자매 결연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민간의 참여 동기 부여
 -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GTI에 대한 미디어의 홍보 강화 및 자치단체들의 GTI 참여를 위한 공동 연수 프로그램과 타지역 경제협력체의 벤치마킹 등 추진

- GTI 사업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의 토대 구상 및 계획을 주도
 - 장기적인 관점에서 GTI 사업의 확대와 세부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며, 단계적인 개발 구상을 통해 효과적인 경제 협력을 주도해야 함
 - ASEAN이나 APEC 같은 타 경제협력체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된 개발 계획을 통해 다자간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
 - 회원국 공동 FTA구상 및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 협력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연구와 개발 계획을 지원

〈 부록 〉 GTI 관련 사업 진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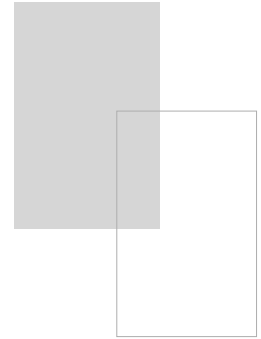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 GTI 관련 사업 진행 추이 〉

구분	시기	내용
TRADP	1991년	- 유엔개발계획(UNDP), 동북아시아 최우선 사업으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 발표
	1992년	-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정식 출범
	1995년	-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위원회 협정 체결 - 당사국협의회(Consultative Commission), 조정위원회(Cooperation Committee), 사무국 (Tumen Secretariat) 등 설치
	1998년	- 두만강지역 투자서비스 사업 추진과 투자서비스센터 설립
	2000년	- 두만강개발계획의 수정 및 발전 계획 모색 - 참가국의 주도성 강화, 세분화된 사업 계획 마련
GTI	2005년	- 8차 당사국협의회, 광역두만강개발계획(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로 개칭, 개발 계획을 연장 - GTI 전략기획안(Strategic Action Plan) 채택: 교통, 자원, 관광, 투자 및 환경 등의 세부 투자사업 분야 확정
	2007년	- 9차 당사국협의회, 세부 투자사업 분야별 위원회 설치 - 기업인자문회의 (Business Advisory Council, BAC) 설치
	2008년	- 관광위원회 설치 - 다국가경유관광프로그램 개발 - 다국가경유관광홍보센터 개소(2014년, 훈춘)
	2009년	- 교통위원회 설치 - 에너지위원회 설치 - 11월, 북한이 GTI에서 탈퇴선언
	2011년	- 무역원활화위원회 설치 - 무역투자박람회 개최 - 환경위원회 설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제2장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 주요 부문별 사회문화 교류 현황
- 남한의 對북 인도적 지원 추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⁵⁷⁾

1. 개요

- 2016년 들어 이산가족⁵⁸⁾ 사망자 비율이 생존자 비율을 역전
 - 2016년 6월 30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850명 가운데 사망자가 51.3%(6만 7,180명)에 달해 생존자(6만 3,670명, 48.7%)를 넘어섬
 - 2016년 2월 최초로 이산가족 사망자 비율이 생존자 비율을 역전하였음
 - 특히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비율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2016년 2월 50.4%→4월 50.5%→6월 51.3%)이며,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산가족 사망자는 80세 이상 超고령자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
 - 2016년 6월 말 기준 사망자는 80~89세가 3만 592명(45.5%)으로 가장 많고,

57) 현대경제연구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2016. 8. 16 자료를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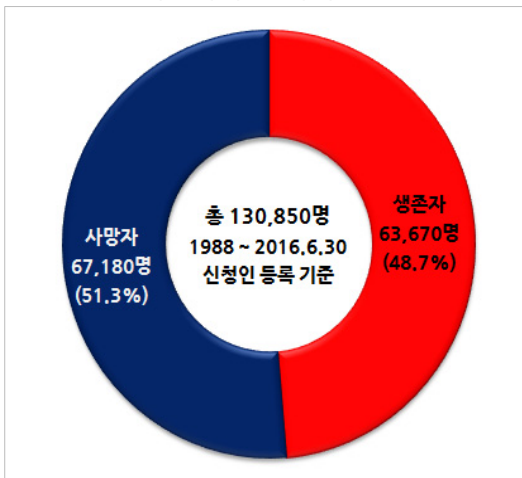
58)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다음으로 70~79세(1만 8,160명, 27.0%), 90세 이상(1만 3,232명, 19.7%) 순임
 · 총 6만 3,670명의 생존자 가운데 80~89세가 2만 7,877명(43.8%), 90세 이상
 이 1만 547명(16.6%)으로 **초고령자가 생존자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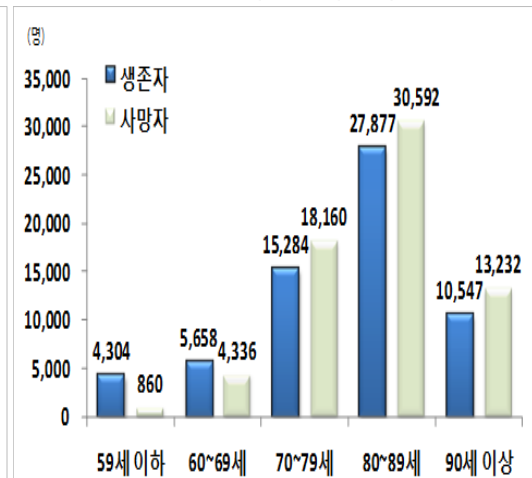
- 이산가족 대부분이 초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⁵⁹⁾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알아보고, 이산가족 상봉 대상
 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이산가족 등록자 현황 〉



〈 연령별 생존자 및 사망자 현황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 6월 30일 기준.

2. 이산가족 상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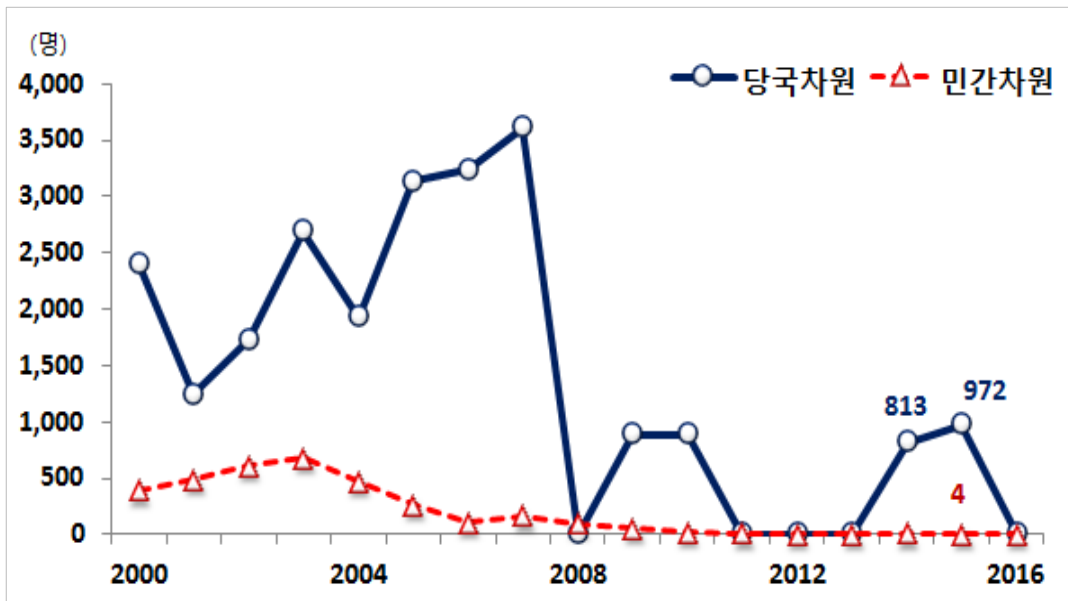
○ (상봉 추이) 2000년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계기로 점차 활성화 되었으나, 2008
 년 이후에는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5년간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2만 3,676명(방북+방남+화상 상봉)의 이산가족이 상봉

59)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 『통일경제』 2016. 제1호를 수정, 보완.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되어, 해마다 2~3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 특히 2005년 도입된 화상 상봉은 2007년까지 총 3,748명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2005~2007년까지 화상 상봉은 전체의 37.5%)
 -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으로 상봉자 수가 2009년(888명), 2014년(813명), 2015년(972명), 2016년(0명) 등 연간 800~900명 수준에 불과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2008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
-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상봉은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 이후 두 자리 수로 급감, 2015년 4명에서 2016년에는 0명 수준

〈 이산가족 상봉 추이(2000~201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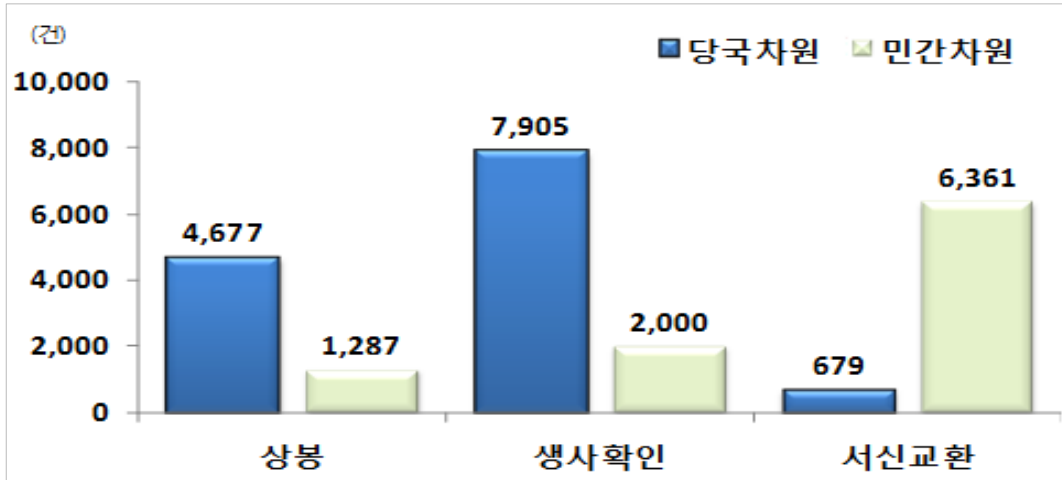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은 6월 30일까지임.

주 : 당국 차원의 상봉자는 화상상봉을 포함.

- 특히 민간 차원에서는 제3국이라는 상봉 여건의 어려움으로 서신 교환의 형태로 주로 이뤄지고 있음⁶⁰⁾
- 당국 차원에서는 상봉 기회가 추첨(고령자, 직계가족 우선)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는 주로 서신 교환을 추진해 옴

〈 당국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비교(2000~2016년)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은 6월 30일까지임.

주 : 당국 차원의 상봉건수는 화상상봉을 포함.

- 한편 최근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기회 감소에 따라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비용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
- 특히 2005년 1인당 평균 425만원의 상봉 비용이 2009년에는 589만원으로 164만원(35.5%)이 증가
- 상봉 비용 증가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

60)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참조.

〈 민간 차원 이산가족상봉 소요 비용(2005~2009년) 〉

(단위: 명 / 만원)

연도	인원(건수)	1인당 평균 상봉 비용	평균 주선 사례비
2005	136명 (84)	425	180
2006	117명 (70)	465	184
2007	96명 (50)	418	174
2008	46명 (32)	539	220
2009	25명 (18)	589	257

자료 : 홍정욱 의원실.

주 : 2010년 9월 국회 외교통산통일위원회 보고 내용이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 2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왔으며, 당국 차원의 교류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당국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5년까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합쳐 총 4,742건 성사되었으며, 2만 3,676명이 상봉함
 - 1985년에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실시로 총 65가족, 15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함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면상봉은 총 4,185건(1만 9,928명)이 이뤄졌으며, 화상상봉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총 557건(3,748명)이 성사됨
 -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총 1,751건(3,406명)이 성사
 - 당국 차원에서의 상봉 비중이 민간 차원의 상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당국 차원의 상봉은 전체 상봉 건수 기준으로는 73.0%, 인원 기준으로는 87.4%를 차지
 -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상봉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지는 데다가, 특히 북한 가족이 제3국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2005년에 정부에 의해 도입된 화상 상봉은 2007년까지 총 3,748명의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1985~2016년) 〉

구분	당국 차원		민간 차원	합계
	방북상봉	방남상봉		
대면상봉	3,854건 (17,228명)	331건 (2,700명)	1,751건 (3,406명)	5,936건 (23,334명)
화상상봉	557건 (3,748명)		-	557건 (3,748명)
합계	4,742건 (23,676명)		1,751건 (3,406명)	6,493건 (27,082명)
비율	73.0% (87.4%)		27.0% (12.6%)	10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년은 6월 30일까지임.

주 : 비율의 ()내는 인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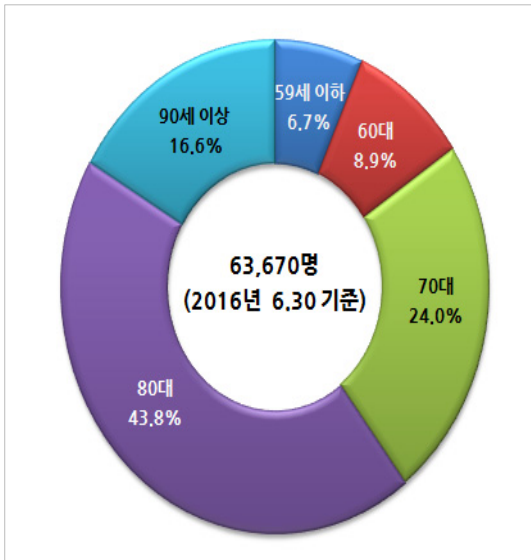
3.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특징

① (고령층 급속 증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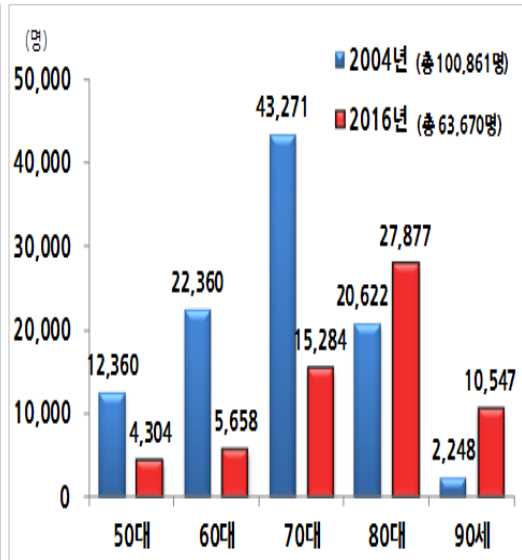
- 2016년 6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84.4%를 차지
 - 연령층별로는 80대(43.8%)와 70대(24.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90세 이상도 16.6%에 달함
 - 60대 이하의 비율은 15.6%(59세 이하 6.7% + 60대 8.9%)에 불과함
- 2004년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超고령층이 2004년 2만 2,870명(전체 22.7%)에서 2016년 6월 기준 3만 8,424명(60.4%)으로 대폭 증가
 - 70대 이하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2004년 7만 7,991명(77.3%)에서 2016년 6월 2만 5,246명(39.6%)로 크게 감소

- 반면 80대 이상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동기간 2만 2,870명(22.7%)에서 3만 8,424명(60.4%)로 증가
- 특히 90세 이상의 생존자 비율이 동기간 2,248명(2.2%)에서 1만 547명 (16.6%)으로 증가하여 생애 상봉시한이 임박

〈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별 분포 〉



〈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추이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② (사망자 급증)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3,800명에 달하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260명에 달함

- 이산가족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나, 상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26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음
- 2004년~2015년까지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연간 평균 약 3,800여 명에 달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49.8%에 달함
- 반면에 이산가족 상봉자는 연간 약 1,540여 명에 불과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상봉자 비율은 20.7%에 그침
- 따라서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매년 약 2,260명 발생

- 특히,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정제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2015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은 2.3%p 증가에 불과한 반면, 사망률은 19.2%p 대폭 증가

〈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와 상봉 추이(2003~2015년) 〉

(단위 : 명, %)

연도	사망자 (누계) (A)	생존자 (누계)	합계 (B)	연간 사망자	사망률 (누계)	상봉자		상봉률 (누계)
						연간	누계(C)	
2003	19,488	103,397	122,885	-	15.9	3,368	10,406	8.5
2004	23,058	100,861	123,919	3,570	18.6	2,396	12,802	10.3
2005	26,945	96,268	123,213	3,887	21.9	3,395	16,197	13.1
2006	28,997	94,933	123,930	2,052	23.4	3,341	19,538	15.8
2007	33,300	93,487	126,787	4,303	26.3	3,780	23,318	18.4
2008	38,926	88,417	127,343	5,626	30.6	97	23,415	18.4
2009	42,123	85,905	128,028	3,197	32.9	939	24,354	19.0
2010	43,990	84,133	128,123	1,867	34.3	904	25,258	19.7
2011	49,776	78,892	128,668	5,786	38.7	14	25,272	19.6
2012	53,943	74,836	128,779	4,167	41.9	6	25,278	19.6
2013	57,784	71,480	129,264	3,841	44.7	5	25,283	19.6
2014	61,352	68,264	129,616	3,568	47.3	823	26,106	20.1
2015	65,134	65,674	130,808	3,782	49.8	976	27,082	20.7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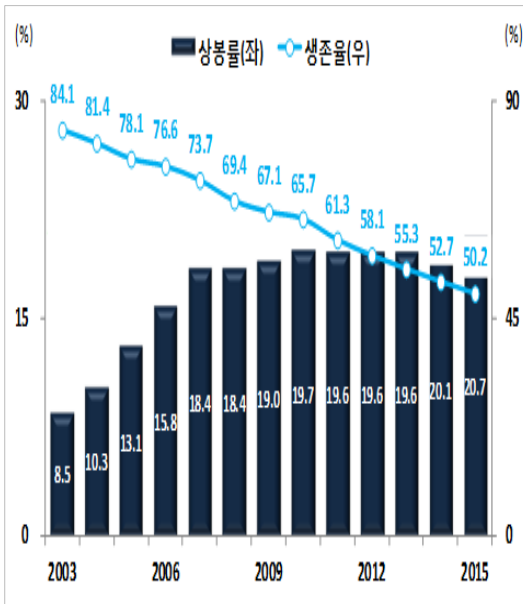
- 주 1. 이산가족의 전체 합계가 변동하는 이유는 미등록자의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임.
- 2. 상봉자수는 당국 차원(화상상봉 포함)과 민간 차원의 상봉자를 합한 수치임.
- 3. 사망률(누계) = 연도별 사망자 누계(A) ÷ 합계(B) × 100.
- 4. 상봉률(누계) = 연도별 상봉자 누계(C) ÷ 합계(B) × 100.

③ (생존자 비율 급락)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하고 있으며, 2032년경에는 생존율이 0.5%에 불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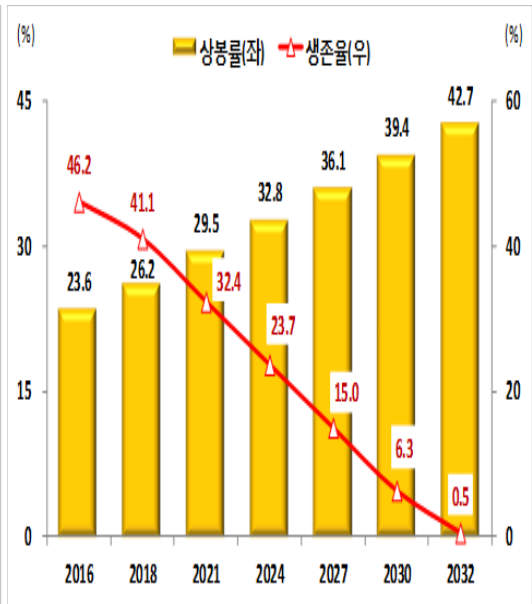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이산가족의 연평균 생존율이 매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32년경에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의 생존율이 0.5%에 불과
- 현재의 생존율과 상봉률을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상봉 비율은 약 1.1%p씩 증가하여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2032년의 누적 상봉률은 42.7%에 불과

-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봉 규모가 유지될 경우, 57.3%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못한 채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약 67%의 생존자 비율이 2015년에는 50.2%로 하락했고, 2016년 말에는 46.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연평균 사망자가 3,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2015년 상봉 규모 976명씩(당국 차원 972명+민간 차원 4명) 매년 상봉할 경우에는, 연평균 약 2,9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하게 됨

〈 이산가족 상봉률 및 생존율 추이 〉



〈 이산가족 상봉률 및 생존율 추정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계산.

주 : 2016년부터는 추정치임.

④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 기대여명으로 보아 25년 내에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

- 현재 이산가족은 모두 50~60대 이상으로, 이들의 기대잔여수명이 25.3년임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대부분은 25년 이내에 사망 예상

- 통계청의 2014년 생명표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 기대여명은 50대가 29.6년, 60대는 21.0년이며, 70대는 13.0년, 80대는 7.1년, 90대는 3.7년임
 - 따라서 50~60대의 평균 기대여명은 약 25.3년이며, 70대 이상은 7.9년임
-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 인원을 매년 7,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약 6,800명 이상 상봉해야 함⁶¹⁾
- 50~60대 : 생존자 비율이 15.6%이고 평균 기대여명이 25.3년인 점을 고려하면,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 매년 390명 이상 상봉 필요
 - 70대 이상 : 생존자 비율이 84.4%인 점과 평균 기대여명이 7.9년임을 감안하면, 매년 6,800여 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함
 - 따라서 현재의 상봉 신청자가 모두 생애 한번이라도 이산가족들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최소한 7,200명이 되어야 함

〈 평균 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 현황(2016년 6월 30일 기준) 〉

구분	평균 기대수명 이하			평균 기대수명 초과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인원(명)	4,304	5,658	15,284	27,877	10,547
비중(%)	6.7	8.9	24.0	43.8	16.6
기대여명(년)	29.6	21.0	13.0	7.1	3.7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 1. 2014년 통계청 생명표 기준.

2. 세대별 기대여명은 중간치로 함. 예컨대 60대는 65세를 기준.

61) 50~60대는 (생존자 63,670명 × 50~60대 비율 15.6%) / 25.3년 = 390명, 70대 이상은 (생존자 63,670명 × 70대 이상 고령자 비율 84.4%) / 7.9년 = 6,80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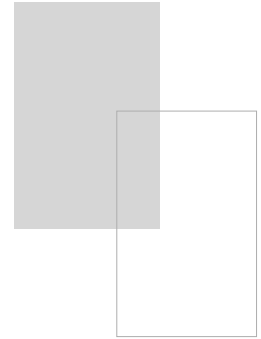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4. 종합 평가

-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超고령자가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가 51.3%로 사망률이 생존율을 역전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850명 가운데 사망자가 51.3%(6만 7,180명)에 달해 생존자(6만 3,670명, 48.7%)를 넘어섬(2016년 6월 말 기준)
 - 전체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超고령자가 60.4%를 차지
 - 총 6만 3,670명의 생존자 가운데 80~89세가 2만 7,877명(43.8%), 90세 이상이 1만 547명(16.6%)으로 超고령자가 생존자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고령층의 급속 증가, 사망자 급증, 생존자 비율 급락,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등의 특징을 보임
 -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대부분이 超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

구분	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사망률이 생존율을 역전 -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超고령자가 60.4%를 차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령층 급속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84.4% 차지 ② 사망자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2015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 2.3%p 증가, 사망률 19.2%p 대폭 증가 ③ 생존자 비율 급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말 생존자 비율 46.2% 추정, 2032년경 생존자 모두 사망할 가능성 ④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기대여명으로 볼 때, 이산가족 대부분은 25년 이내 거의 사망, 70세 이상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 예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요 부문별 사회문화 교류 현황⁶²⁾

1.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
 - 남북 사회문화협력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⁶³⁾을 말함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협력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62)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2013. 7. 19일 수정·보안

63)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예규(2012.7.26, 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민간의 중재 역할 가능 등의 의미를 지님
 - 민족 동질성 회복 : 사회문화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여 사회 통합의 기초를 제공
 -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도움⁶⁴⁾
 - 민간의 중재 역할 가능 : 2005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김 위원장 방북 면담(7. 16)시 8. 15를 계기로 축구경기를 개최하자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의 제의를 전달하여 같은 해 8월 14일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성사

○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교류를 계기로 재가동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2007년 남북간 교류 건수 350건, 교류인원 7,639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 이후 급감
 - 다만, 2014년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사회문화협력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남
 - 2015년에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가 확대되어 동년 남북간 교류 건수 66건, 교류인원 1,614명을 기록
- 2008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 지원⁶⁵⁾도 급감
 - 2009년 이후에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지원이 주를 이루었음
 - 2014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교류에 대한 북한 참가를 지원
 - 한편, 2015년에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⁶⁶⁾ 지원 및 국제기구 북한 모자패키지⁶⁷⁾ 관련 지원 사업 등으로 61.4억 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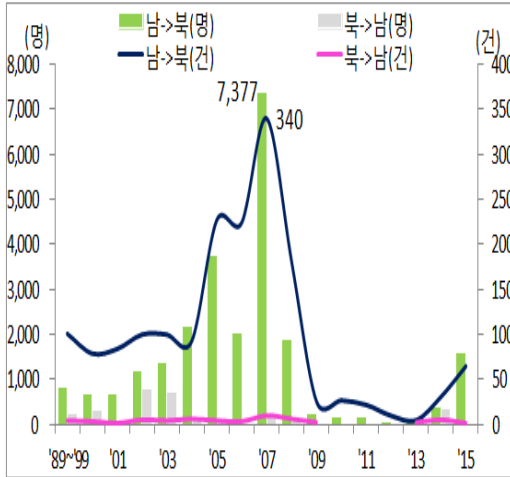
64)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8%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통일의식조사』, 2014. p. 108 참고.

65)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총 10조 7,539억 원 집행, 이 가운데 사회문화협력 지원은 0.49%에 해당하는 536.1억 원이 집행

66)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 직영 통일체험연수 시설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4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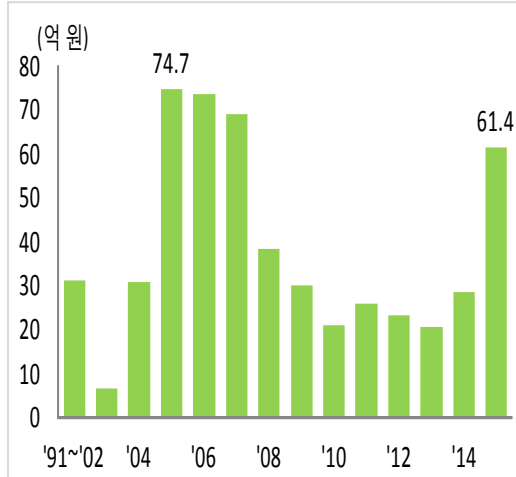
67)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지원.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협력 지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2.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한계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정치 상황에 좌우, 회담의 체육 분야 편중,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최다, 분야간 시너지 창출 등의 특징을 가짐
- ①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 2000년대 들어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와 6.15 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등의 기념일 공동행사 등이 이루어짐⁶⁸⁾
 - 2007년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2008년 이후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사업, 겨울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 법회 등 일부 사업만 유지

68)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p. 17~36.

-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북한의 고위급 3인이 참석하여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함

② (2003~07년간 사업 승인 집중) 1991년부터 2015년 말까지 통일부 승인 사업 159건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전체의 76%)에 달함

- 1990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1991년부터 2014년 말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159개임⁶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997년까지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3건에 불과
- 1998~2002년간 27건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07년간 121건으로 급증
- 2008년 이후 급감하여 2015년까지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8건에 그침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현황 〉

(단위 : 건)

연도	'91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0	'11	'14	'15	합계
건수	2	1	5	5	4	6	7	13	16	47	26	19	3	1	1	1	2	159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③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를 시작, 총 55건의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47건(전체의 85%)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

- 2014년 7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이 가장 최근에 개최된 회담임
- 총 55건의 회담 가운데 교육학술 분야 4건,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4건을 제외한 47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
- 교육학술 분야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4차 실무 접촉(2005. 9~2007. 4) 등 역사 공동 복원 사업 추진
-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2005. 4), 북한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3),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5),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 12)

69)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관련 회담 추이 〉

(단위 : 건)

연도	79	84	85	86	87	89	90	91	02	03	04	05	06	07	08	14	합계
건수	4	3	1	2	1	9	7	7	2	1	1	6	3	6	1	1	55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사이트(<http://dialogue.unikorea.go.kr>) 참고

④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 및 인원 최다) 사회문화협력관련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93건, 9,794명으로 가장 많음

-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5년 말까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방문 건수는 총 1,756건으로 28,135명이 상호 왕래함
- 전체 방문건수 대비 비중 : 종교(28.1%), 교육학술(20.3%), 체육(20.2%), 언론출판(17.4%), 문화예술(9.7%), 과학기술(4.2%)
- 특히, 북 → 남으로 방문은 체육분야가 전체의 54.4%를 차지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현황(1989~2015년) 〉

(단위 : 건, 명)

구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시민사회	계
남→북	344 (4,646)	163 (2,467)	324 (4,255)	490 (9,735)	303 (2,949)	73 (400)	20 (406)	1,699 (24,858)
북→남	12 (105)	8 (540)	31 (2,513)	3 (59)	3 (60)	0 (0)	0 (0)	57 (3,277)
합계	356 (4,751)	171 (3,007)	355 (6,768)	493 (9,794)	306 (3,009)	73 (400)	20 (406)	1,756 (28,135)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주 1. ()는 명을 말함.

2. 시민사회 구분은 2009년 신설.

⑤ (분야간 시너지 창출)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

- 분야간 시너지 창출 :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
 -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개최,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로 남북통일음악회 개최 등
-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다수 추진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역사와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 〉

구분	특징	성과	한계
종교	- 2008년 이후에도 중단없이 접촉을 지속	-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 교류의 비대칭성, 단순 지원 및 방문 수준의 교류
체육	-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문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	- 국제대회 공동입장으로 한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 왕래 추진 -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	- 교류의 정례화 미흡
교육학술	- 역사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이념 충돌이 작은 범위부터 협력 추진	-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등재, 장기적 지속적인 사업 추진	- 교육 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언론출판	- 남북간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	- 북한 주민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학의 공감대 형성	-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
문화예술	-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	-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영화교류도 초보적 수준
과학기술	- 북한은 우수한 인적 인프라 구비	-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 양성 효과	-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제도적 제약
지방자치단체	-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농업 협력으로 발전, 사회문화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진	-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확대 사례 구축, 남북 공동 대처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	- 지역간주민간 실질적 교류 미흡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3.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과 발전 과제

-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은 하나의 한반도(One Korea)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임
- 통일한국시민 이루기를 위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 과제를 고려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는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③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함
- 문화적으로는 ①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②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③ ‘新경평대축제’ 등의 추진이 가능함

〈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과 발전 과제 〉

구분		내용
비전		-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
실천 과제	사회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 ③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추진
	문화	④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추진 ⑤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 ⑥ ‘新경평대축제’ 추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의료+영양지원 package) 추진

- 의료·보건 부문 : 의약품, 의료기구·장비,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
 - 1단계 : 최우선 관리 대상인 전염성 질병(결핵, 폐렴, 간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긴급 의약품 상시 지원 체제’ 구축
 - 2단계 : 국제적십자사(IFRC)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간편 수술 기구(동상 치료를 위한 긴급 왕진 가방 등) 및 응급의료 설비 지원
 - 3단계 : 북한 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한 의약제조시설 개·보수 지원(평성, 순천 제약공장 등), 병원 현대화, 남북 영양제 공동 개발, 북한 의료진 교육 등
 - * 기초질병 퇴치 지원 : ‘북한어린이 질병예방 기금(가칭)’ 모집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등 기초질병예방사업을 추진
- 영양지원 부문 : 취약계층(영유아 및 산모, 아동 및 노인 등)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장비 지원
 - 1단계 : 건강취약계층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분유 등 영유아 영양식 긴급지원, 산모 영양지원을 위한 철분제, 미숫가루 등 지원

- 2단계 : 취약계층 생명 보호 및 일반주민의 영양실조 해소를 위해 기존 빵공장·영양식 생산 공장 확대 지원,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FAO 등)와 연계한 각 시군별 신규 생산 공장(콩우유, 영양 비스킷 등) 건설
- 3단계 :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 * 對北 구호지원물자 전달시스템 구축 : 쌀, 밀가루, 비료, 의약품 등 對北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되, UN, 국제적십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구호지원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사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단계별 추진 전략 〉

구분	의료·보건 부문	영양지원 부문
1단계	- 긴급 의약품 상시 지원 체제 구축 ▪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병	- 건강취약계층 생명 보호 ▪ 영유아 영양식, 산모 긴급지원 등
2단계	- 국제사회 협력 통한 의료기구 지원 ▪ 긴급 왕진 가방 지원 등	- 건강취약계층+일반 주민 영양 지원 ▪ 기존 생산 공장 확대, 신규 건설 등
3단계	- 북한 의료 시스템 복원 위한 지원 ▪ 의약품 제조시설, 병원 현대화 등	-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 1~2단계 사업 전국단위로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

- 남북한 공유하천(한강하구~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확대 추진
 - 남북공유하천의 홍수조절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
 - 임진강 : 현재 정체상태인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에도 홍수조절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임진강유역 종합개발 추진
 - 북한강 : 임남댐, 평화의댐, 화천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남한측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협력체계 구축
 - * 이를 위해 홍수 예·경보 설비를 북한강 유역에 지원하고 임남댐 하류방류를 위한 직하류 발전소 설치 등 추진
 - * 홍수 예·경보 장비 지원은 우선 임진강, 북한강 공유하천에 구축하되 점차 타 유역으로 확대

-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 수립
 - 남북 통일 대비 용수 공급, 전력과 연계하는 홍수 방어 계획 수립이 필요
 - 남북 경험 확대 등으로 북한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경우 생활용수 상수도의 수요 및 공산품 제조를 위한 공업용수 수요는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식량증산을 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도 필요

③ 조립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추진

- 북한 산림 복구 계획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 북한 산림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산림자원 현황 및 황폐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산림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필요
 -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 구성 :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 구성하여 남북 당국자 및 전문가와 추진 사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로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협의
 - 이를 통해 남쪽의 황폐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전수, 종합적인 북한 산림 복구 계획 수립
-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추진
 - 방제 기자재, 농약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피해 입지에 대한 집중적인 병해충 방지가 중요
 -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림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 방제사업 실행 및 공동평가를 통해 방제 성과 제고가 필요
 - 특히, 금강산, 묘향산 등 산림 보호 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피해가 발생할 시 남북 공동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 확대
 - AI 및 구제역 바이러스는 육지에서 50km까지 공기로 전파될 수 있어 DMZ 부근 남한 축산농가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남한은 가축전염병 소독 및 백신접종 지원 등 ‘남북한공동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조사연구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 남한 농림축산검역본부 + 북한 국가수의방역위원회 간 핫-라인 설치도 모색

- 한편 남북한 교류 협력의 질적 확대를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가축전염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

④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추진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독도, 동해표기 문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
-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동북아 역사·문화 전쟁에 대응
- 또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 공동 연구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도 병행 가능

⑤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

-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 함양
- 청소년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 간 이질감 해소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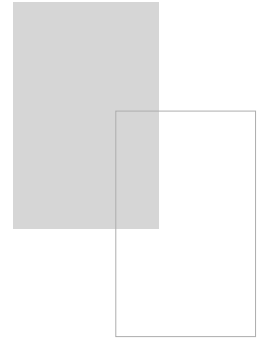
⑥ '新경평대축제' 추진

- 남북 체육분야 교류 재개
 - 경평축구대회 및 통일농구대회 부활,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체육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 등
- 남북 민속문화 교류 확대
 - 민요, 남한의 봉산탈춤과 북한의 북청사자놀음 등 무형문화제와 관혼상제 등 전통민속문화 교류
 - 씨름, 줄다리기, 택전, 팔씨름 등 민속 스포츠 교류 추진

- 남북 순수문화 교류전 추진
 - 미술, 음악, 서예, 공예 등 순수문화 부문 남북간 정기 문화교류전을 추진, 남북 신진 예술가 발굴 및 관련 시장 조성

4. 시사점

-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2007년 11월 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의 정례화·제도화 추진
-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
 -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운영 사업 등 주로 종교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
-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 필요
 - 교육학술·언론출판·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
 -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
-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나무심기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 지속 추진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 추진



남한의 對북 인도적 지원 추이

1. 개요

-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⁷⁰⁾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았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중단 상태로
- (대북 인도적 지원 배경) 1995년 대홍수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에 쌀 15만 톤을 직접 지원하면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격화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수해와 가뭄으로 악화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
- (대북 인도적 지원 효과) 그 동안 북한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식량 부족 완화,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

70) 인도적 지원은 사람에 의해 야기된 위기 또는 자연에 의해 야기된 재난에 대한 단기 구호활동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장기적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음. 박형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개념과 원칙”, 『KDI 북한 경제리뷰』, p.3

- 2016년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69만 4,000여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는 달리 대량 아사자는 발생하지 않음
 - 이는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식량을 비롯한 비료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된 것에 기인
 - 또한 결핵 퇴치 등 보건의료 지원, 농촌 비닐하우스 개건 등의 사회 인프라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
-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 남북 상호 간 이해도 증진을 비롯해 바람직한 평화 통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속될 필요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을 비롯해 소수이지만 주민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남북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
 - 또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될 필요
 -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대북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중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이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를 정권별, 분야별, 주체별 특징으로 알아보하고자 함

2.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① 정권별 현황

-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총 3조 2,855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었고, 개별 정권 차원의 대북정책에 따라 지원의 부침이 있어 왔음
- (김영삼 정부) 1995년 북한 식량난 심화로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
 - 북한의 긴급 식량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 인도적 지원을 실시
 - 하지만 1996년 강릉 잠수한 침투 사건을 계기로 대북 지원 확대에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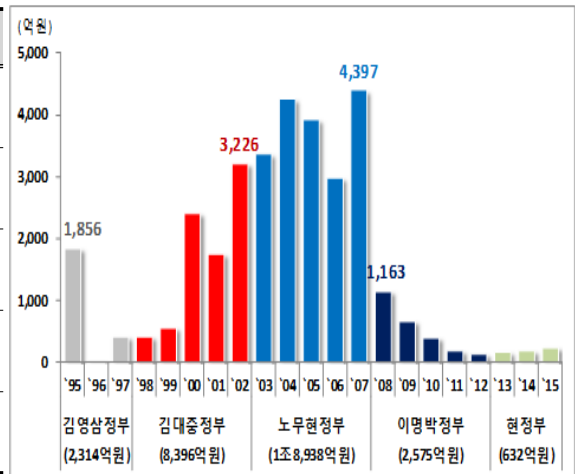
- (김대중 정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증가, 2002년 3,226억 원 기록
 - 1998년 3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가 발표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모색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퍼주기 논란으로 의미 퇴색
- (노무현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를 통한 질적 변화 모색
 - 식량 지원 등 구호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농업구조개선 등 중장기적 지원 모색
 - 노무현 정부 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4천 397억 원에 달함
- (이명박 정부) 5.24조치와 이에 따른 민간차원 대북지원 크게 위축
 - 대북 인도적 지원 투명성을 강조하며 접근했으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축소
-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취약계층 및 영유아 지원도 중단 위기

〈 정권별 대북 인도적 지원 특징 〉

정권	주요 특징
김영삼 정부	북한 수해로 긴급 지원
김대중 정부	민간 대북지원 활성화
노무현 정부	정부 및 민간 지원 확대
이명박 정부	5.24조치에 따른 지원 위축
박근혜 정부	정부 및 민간 지원 침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정권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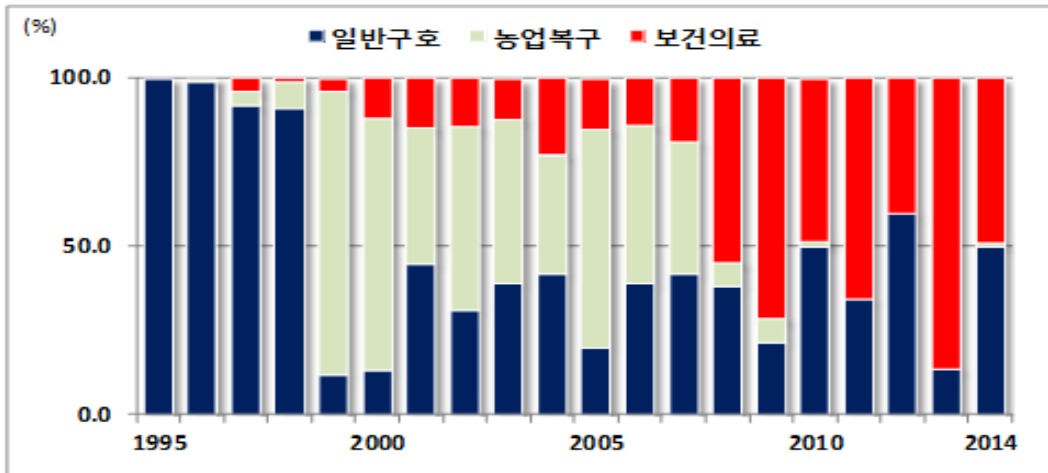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② 분야별 현황

-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
 - 대북 인도적 지원 초기에는 주로 긴급을 요하는 일반구호 중심에 집중
 - 일반구호는 인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인도적 지원 상황 발생 시,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구호식량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임
 - 1995년 북한의 식량난 당시 일반구호의 비중은 100.0%였고, 고난의 행군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평균 95.5%에 달했음
 - 동기간 농업복구 및 보건의료의 지원 비중은 각각 평균 3.3%, 1.3%에 불과
 - 2000년 이후 북한 식량난 개선으로 대북 농업복구 지원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
 - 2000년 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도 일반구호에서 농업복구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
 - 1999~2007년 사이 농업복구 분야의 평균 비중은 54.3%로 전체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절반 이상에 달한 반면, 일반구호 비중은 동기간 평균 31.4%로 축소
 - 2008년 이후에는 보건의료 등 개발구호성 대북 인도적 지원 비중이 증가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개선 등에 따라 일시적인 긴급성 일반구호 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보건의료(2008~2014년 평균 59.5%) 등의 개발구호 성격으로 전환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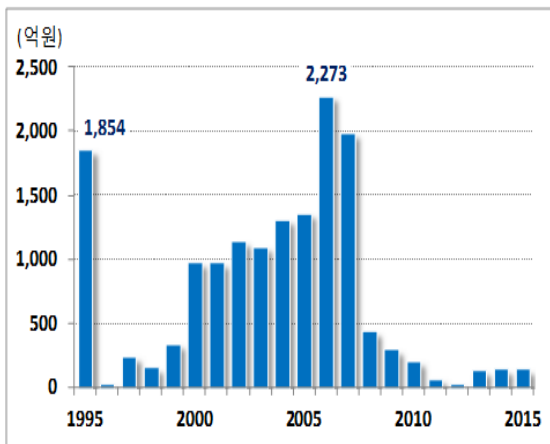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주 : 식량차관 제외.

③ 주체별 현황

- 정부차원에서는 그동안 약 1조 5,0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집행했고, 북한 내부 상황에 맞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함
 - 1995년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1,854억 원에 달하는 쌀 15만 톤을 직접지원하면서 시작
 -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직접지원을 비롯해 WFP, WHO, UNICEF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 1995년에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15만 톤을 무상지원 했고, 2006년에는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273억 원을 지원한 것이 최대임
 - 정부의 주요 지원 물품은 식량을 비롯해 비료, 의약품, 의료장비 등 다양함
 -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식량난 개선을 위해 쌀, 옥수수 등 식량 지원을 비롯해,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료 등을 주로 지원
 -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 의료 지원 등 주로 방역 및 영양과 관련된 지원을 실시해 왔음
 - 한편, 2000년 이후 지원된 대북 식량 차관은 총 8천 728억 원에 달함
 -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북한에 지원
 - 하지만 최초 상환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차관 상환은 전무한 상황

〈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 추이 〉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주 : 식량차관 제외.

〈 정부의 대북 식량 차관 규모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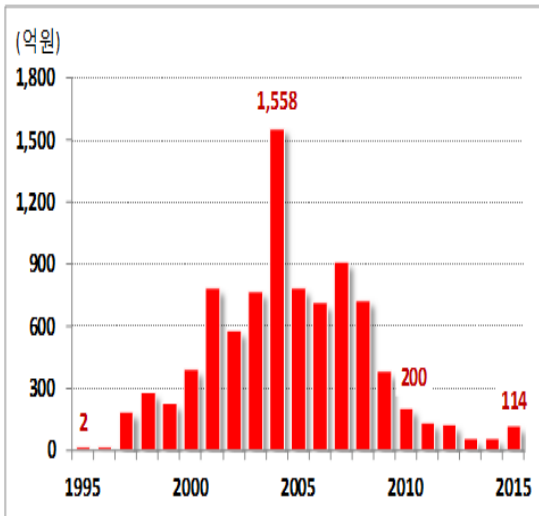
연도	금액	지원내용
2000	1,057	쌀30만톤, 옥수수20만톤
2002	1,510	국내쌀40만톤
2003	1,510	국내쌀40만톤
2004	1,359	국내쌀10+외국쌀30만톤
2005	1,787	국내쌀40+외국쌀10만톤
2007	1,505	국내쌀15+외국쌀25만톤
합계	8,728	쌀240만톤, 옥수수20만톤

자료 : 통일부.
주 : 무상지원방식 제외.

○ 민간차원에서는 정부보다는 적지만 누적 8천 930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고, 104개의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음

- 1997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확대됐지만,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1995년부터 본격화 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달리, 민간차원의 지원은 북한에 대한 국민적 대북 지원 공감대가 형성된 1997년부터 본격화
 - 1995년에는 2억 원 상당의 담요 8천매를 지원했고, 2004년에는 밀가루, 농자재, 의약품, 감귤 등 1,558억 원 상당의 대북 지원을 실시한 바 있음
 -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조치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축소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114억 원 규모에 불과
-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 민간지원 단체는 총 104개로, 보건의료를 비롯해 우선복지, 사회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음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결핵약 등 의약품 지원, 의료 기자재 지원, 병원 건립 및 개선, 의약품 및 의료 기자재 생산 공장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해 왔음
 - 특히 정부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 및 개선, 산림녹화 등), 농축산 지원(농자재 지원, 비료지원, 농업기술 지원) 등을 시행

〈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 추이 〉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 민간의 대북 지원 사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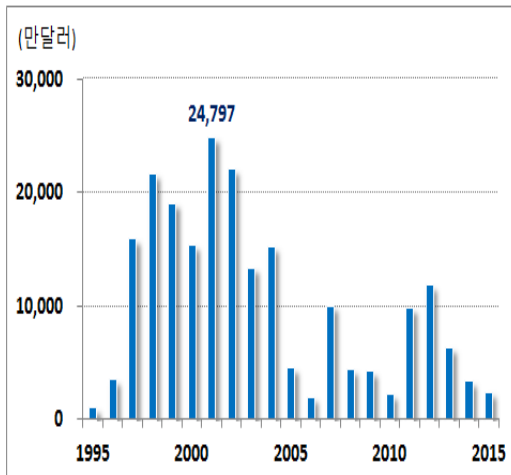
구분	단체수	주요 지원 내용
긴급구호 일반구호	31개	식량 및 생필품 지원 수해복구 지원
농축산	24개	종자 및 비료 지원 농기자재 지원 등
보건의료	25개	결핵약, 영양제 지원 병원 현대화 지원 등
우선복지	27개	영유아, 임산부 지원 빵공장설립 지원 등
사회인프라	12개	조림사업, 태양광 지원 농촌형 주택 지원 등

자료 :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 참조.
 주 1. 통일부 허가 단체는 총 104개임.
 2. 단체수는 중복 포함.

〈 토론.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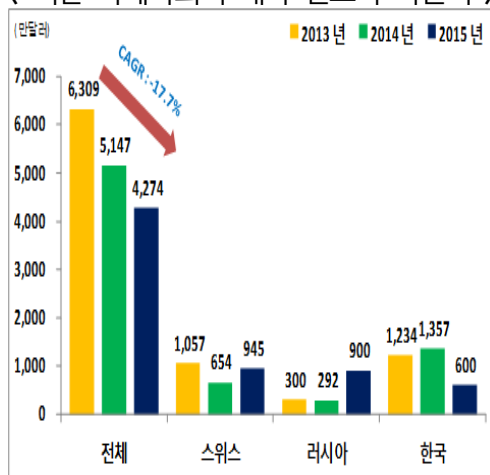
- 2015년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 달러임
- 2015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은 4,270만 달러로, 주요 지원품인 영양 지원 사업임(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세계식량계획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제공 국가 : 한국,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등 14개 국가
 - 최대 지원국 : 스위스가 950만 달러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900만 달러, 한국이 600만 달러 지원 순임
 - 주요 지원품 : 전체 금액의 61%인 2,600만 달러가 분유, 식량 등 영양 지원임
 - 그 밖에 보건사업 632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 410만 달러, 재난감소 사업 170만 달러, 산림 황폐화 방지 사업에 140만 달러가 각 각 지원됨
- 반면 북한 핵 개발 등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15년 국제사회의 對북 지원액은 지난해 5,100만 달러에 비해 17.0% 감소, 2013년에 비해선 무려 32.3% 감소한 것으로 분석(2013~2015년 연평균 증가율 -17.7%)
 - 이는 북한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對북 제재 지속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 투명성 문제 등으로 지원액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향후에도 북한의 핵 개발 등 도발이 지속될 경우 대북 지원액은 지속 감소할 전망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 추이('95~'15) 〉



자료 : UNOCHA(Financial Tracking Database), WFP.

〈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 〉



④ 종합 평가

- 평가결과,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권별 대북 정책에 따라 변화해 왔고, 초기 식량 중심의 일반구호 방식에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
 - 정권별 :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개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부침이 있어 왔음
 -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총 3조 2,855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행
 - 대북 인도적 지원 최대 활성화기는 노무현 정부임(1조 8,938억 원)
 - 분야별 :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단기적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 등 북한 개발지원 방식으로 확대되는 추세
 - 대북 인도적 지원 초기에는 주로 긴급을 요하는 식량지원 등 일반구호 중심에 집중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개선 등에 따라 일시적인 긴급성 일반구호 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보건의료(2008~2014년 평균 59.5%) 등의 개발구호 성격으로 전환
 - 주체별 : 정부는 민간 대비 대북 인도적 지원 금액은 우위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정부가 집행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 사업 등을 실시
 - 정부차원에서는 그동안 약 1조 5,0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집행, 민간은 정부보다는 적지만 8천 930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
 - 한편 정부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 및 개선, 산림녹화 등) 사업은 민간이 중심으로 실시해 옴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평가 〉

구분	내용
정권별	- 김영삼 정부~현 정부 : 총 3조 2,855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1995년 북한 식량난 심화로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
분야별	-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 ·일반구호 비중 : 1995~1998년 평균 95.5%→1999~2007년 평균 31.4% ·보건의료 비중 : 1995~1998년 평균 1.3%→2008~2014년 평균 59.5%
주체별	- 정부는 민간 대비 지원 금액에서 비교우위, 민간은 다양성에 비교우위 ·1995~2015년 간 누적 지원 금액 : 정부 1조 5,000억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 참고 1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누계 총액은 3조 2,826억원임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정부차원					정부 소계	민간차원 (무상)	총계
	무상지원			식량차관				
	직접지원	민간단체 경유	국제기구 경유					
김영삼 정부	1995	1,854	-	-	-	1,854	2	1,856
	1996	-	-	24	-	24	12	36
	1997	-	-	240	-	240	182	422
김대중 정부	1998	-	-	154	-	154	275	429
	1999	339	-	-	-	339	223	562
	2000	944	34	-	1,057	2,035	387	2,422
	2001	684	62	229	-	975	782	1,757
	2002	832	65	243	1,510	2,650	576	3,226
노무현 정부	2003	811	81	205	1,510	2,607	766	3,373
	2004	949	102	262	1,359	2,672	1,558	4,230
	2005	1,221	120	19	1,787	3,147	779	3,926
	2006	2,000	134	139	-	2,273	709	2,982
	2007	1,432	216	335	1,505	3,488	909	4,397
이명박 정부	2008	-	241	197	-	438	725	1,163
	2009	-	77	217	-	294	377	671
	2010	183	21	-	-	204	200	404
	2011	-	-	65	-	65	131	196
	2012	-	-	23	-	23	118	141
박근혜 정부	2013	-	-	133	-	133	51	184
	2014	-	-	141	-	141	54	195
	2015	-	23	117	-	140	114	254
총계		11,249	1,176	2,743	8,728	23,896	8,930	32,826

자료 : 통일부.

〈 참고 2 〉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연도	규모	지원방식	주요 지원 내용
1995	23,200만 달러(1,854억원)	직접지원	쌀 15만톤
1996	305만 달러(24억원)	UN경유	분유, 기상자재 등
1997	2,667만 달러(240억원)	UN경유	옥수수, 분유, 의료 등
1998	1,100만 달러(154억원)	UN경유	옥수수, 밀가루
1999	2,825만 달러(339억원)	직접지원	비료 11.5만톤
2000	8,139만 달러(978억원)	직접지원	비료 30만톤
2001	7,522만 달러(975억원)	직접지원/WFP/WHO	내의, 옥수수, 비료 등
2002	8,915만 달러(1,140억원)	직접지원/WFP/WHO	비료, 말라리아 방역
2003	9,377만 달러(1,097억원)	직접지원/WFP/UNICEF	취약계층 지원 등
2004	11,541만달러(1,313억원)	직접지원/WFP/WHO	의약품, 비료 등
2005	13,588만달러(1,360억원)	직접지원/WFP/UNICEF	수해응급구조 등
2006	22,740만달러(2,273억원)	직접지원/WFP/UNICEF	영유아 지원 등
2007	20,893만달러(1,983억원)	직접지원/WHO/WFP 등	구제역, 식량지원 등
2008	3,996만달러(438억원)	WHO/IVI/UNICEF	영유아, 의료지원 등
2009	2,420만달러(294억원)	직접지원/WHO/WFP 등	의료인력교육 등
2010	1,780만달러(204억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신종플루, 수해지원
2011	565만달러(65억원)	UNICEF	영유아, 의약품 지원
2012	210만달러(23억원)	IVI	백신 및 의료교육
2013	1,209만달러(133억원)	UNICEF/WHO	보건 및 영양지원
2014	1,330만달러(141억원)	WHO/WFP	보건 및 영양지원
2015	1,220만달러(140억원)	UNICEF/WFP 등	보건, 의료인력 지원
2016.2	10만달러(1억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의료장비 등
합계	145,551만달러(15,169억원)	-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주 : 식량차관 제외.

〈 참고 3 〉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연도	규모	지원방식	주요 지원 내용
1995	25만달러(2억원)	국적경유	담요 8천매
1996	155만달러(12억원)	국적경유	밀가루, 분유, 식용유
1997	2,056만달러(182억원)	국적/적십자 경유	옥수수, 감자, 라면 등
1998	2,085만달러(275억원)	적십자 경유	약품, 분유, 젓소 등
1999	1,863만달러(223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옥수수, 약품, 비료 등
2000	3,238만달러(387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감귤, 의류, 설탕 등
2001	6,017만달러(782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옥수수, 설탕, 분유 등
2002	4,577만달러(576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류, 의료장비 등
2003	6,386만달러(766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류, 생활용품 등
2004	13,250만달러(1,558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농자재, 의약품 등
2005	7,666만달러(779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밀가루, 의약품 등
2006	7,088만달러(709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밀가루, 수해복구 등
2007	9,568만달러(909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료소모품, 감귤 등
2008	6,460만달러(725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류, 양모장 자재 등
2009	2,858만달러(377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식량, 온실자재 등
2010	1,748만달러(200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연탄, 말라리아 방역
2011	1,173만달러(131억원)	독자창구	분유, 두유, 의약품 등
2012	1,032만달러(118억원)	독자창구	밀가루, 수해지원 등
2013	453만달러(51억원)	독자창구	영양빵재료 등
2014	506만달러(54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영양식, 농자재 등
2015	1,002만달러(114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진료소자재, 묘목 등
2016.2	16만달러(2억원)	독자창구	영양빵재료, 조제분유 등
합계	79,223만달러(8,931억원)	-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제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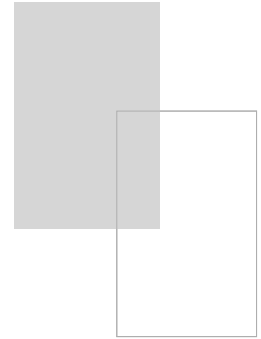
통일경제의 미래

제1장 통일경제의 현주소

제2장 통일경제의 미래

제1장 통일경제의 현주소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⁷¹⁾

1. 개요

○ 북한의 현재 사회상을 남한의 과거와 현재 모습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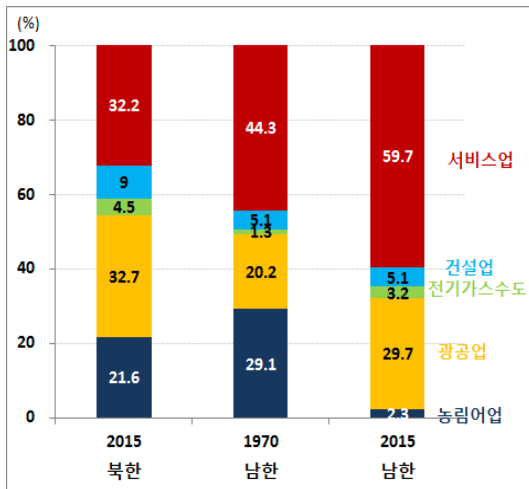
- 비교방법 : 북한의 현재 사회상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 및 산업구조 등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남한의 1970년대와 현재를 비교
- 명목기준 : 북한의 현재 1인당 명목 GDP인 1,013달러는 남한의 1976년 명목 807달러와 유사
- 실질기준 : 남한의 1970년 1인당 명목 GDP는 277달러며, 이를 현재가치화 하면 1,285달러임⁷²⁾
- 북한의 현재 산업구조 역시 농림어업이 21.6%를 차지하고 있어 1차 산업 비중이 높았던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

71)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2016.9.28.

72) 북한의 1인당 GDP는 실질 기준으로 한국의 1960년대 후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IMF의 데이터가 1970년 이후부터 존재.

- 비교대상 : 남북한 사회상을 농업, 광공업, 대외거래, 에너지, 보건, 교육 분야로 나누어 살펴봄
 - 농업분야는 농가인구, 재배면적, 농업생산성, 광공업 분야는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자동차 생산량 및 조선 건조량
 - 대외거래는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발전량 및 소비량
 - 보건 분야는 기대수명, 1인당 영양공급, 교육 분야는 교육기관수,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구분	비교대상
① 농업	농가인구, 재배면적, 농업생산성
② 광공업	철강 생산량, 시멘트 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조선 건조량
③ 대외거래	수출, 수입, 무역수지
④ 에너지	에너지 발전량, 에너지 소비량
⑤ 보건	기대수명, 1인당 영양공급
⑥ 교육	교육기관수,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주 :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상은 데이터 여건에 따라 2008~14년 자료.

2. 남북한 경제상 비교

- (농업) 농업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과 유사
 - 현재 북한은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고 농업종사자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
 - 농가인구 1인당 연간 생산량은 북한이 현재 약 0.50톤으로 남한의 1970년 (0.48톤)과 유사하며 남한의 2012년의 1.75톤에 비해 28.6%에 불과
 - 북한의 현재 농가인구는 약 857.3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6.8%를 차지하며 남한의 1970년(44.7%)과 유사

〈 남북한 농업 비교 〉

구분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4년)	1970년	현재(2014년)
농가인구(만명)	603.6	857.3(2008년)	1,442.2	275.2
인구대비 비중(%)	40.5	36.8(2008년)	44.7	5.5
식량작물 재배면적(천ha)	2,499	1,862	2,699	1,013
국토대비 비중(%)	20.7	15.5	27.2	10.1
농가인구 1인당 연간 생산량(톤)	0.66	0.50(2008년)	0.48	1.75

자료 : 농촌진흥청, 통계청.

○ (광공업) 현재 북한의 광공업 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낙후

- 북한의 광공업 발전은 남한의 1970년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북한의 현재 시멘트 생산량과 화학비료 생산량은 각각 667.5만 톤과 50.1만 톤으로 남한의 1970년과 유사
- 현재 북한의 철강 생산량은 122.0만 톤으로 남한의 1970년(50.4만 톤) 보다 다소 많은 수준
- 현재 북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4천대로 남한의 1970년에도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조선 건조량은 21.4만 톤으로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

〈 남북한 광공업 비교 〉

구분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4년)	1970년	현재(2014년)
철강 생산량(천톤)	-	1,220	504	71,542
시멘트 생산량(천톤)	-	6,675	5,822	47,048
화학비료 생산량(천톤)	-	501	590	2,320
자동차 생산량(천대)	9.0	4.0	28.8	4,525
조선 건조량(천톤)	60	214	39	20,390

자료 :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통계청.

○ (대외거래) 현재 북한의 교역규모는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북한의 대외거래는 국제적인 고립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함
 - 현재 북한의 수출은 31.6억 달러, 수입은 44.5억 달러로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
 - 북한의 전체 교역액은 2012년 남한의 교역액의 0.7% 수준임
 - 남한은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남북한 대외거래 비교 〉

구분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4년)	1970년	현재(2014년)
수출(억 달러)	3.4	31.6	8.4	5,726.6
수입(억 달러)	4.0	44.5	19.8	5,255.1
무역수지(억 달러)	-0.6	-12.8	-11.4	471.5

자료 : 무역협회, 통계청.
주 : 남북 교역은 제외.

○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은 현재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

- 북한 에너지 수준은 1970년 부터 현재까지 거의 성장하지 못함
 - 2012년 북한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50TOE로서 남한의 1970년 에너지소비량인 0.61TOE에도 미치지 못하며 현재 남한의 에너지 소비량인 5.61TOE에 비해 8.9%에 불과
 - 북한의 에너지 발전량은 2014년 약 216억kWh로서 남한의 1975년과 유사하며 현재 남한 발전량인 5,220억kWh대비 4.1%에 불과

〈 남북한 에너지 비교 〉

구분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4년)	1970년	현재(2014년)
발전량	전체(억kWh)	140	216	92	5,220
	수력(억kWh)	90	130	12	78
	화력(억kWh)	50	86	79	3,427
	원자력(억kWh)	-	-	-	1,564
	대체(억kWh)	-	-	-	151
소비량	총소비량(만TOE)	1,810	1,228(2012년)	1,968	28,294
	1인당(TOE)	1.21	0.50(2012년)	0.61	5.61

자료 : 한국전력공사, 통계청.

3. 남북한 사회상 비교

○ (보건) 보건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 북한의 영양섭취는 남한의 197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임
 - 북한의 현재 1인 1일당 영양공급 섭취량은 약 2,094kcal로서 남한의 1970년 2,370kcal 보다 적으며 전체 영양 섭취량중 동물성 에너지가 6.4%로 남한의 2013년의 17.0%에 크게 미달
 - 북한 남성의 현재 기대수명은 65.6세, 여성은 72.4세로서 남한의 2013년 남성 77.8세 여성 84.7세 보다 각각 12.2세, 12.3세 적으며 남한의 1980년대 수준임

〈 남북한 보건 비교 〉

구분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3년)	1970년	현재(2013년)
영양섭취	식물성(kcal,%)	1,949 (92.9)	1,964 (93.8)	2,249 (94.9)	2,531 (82.8)
	동물성(kcal,%)	148 (7.1)	130 (6.2)	121 (5.1)	525 (17.2)
기대수명	남성(세)	53.9	65.6	58.7	77.8
	여성(세)	60.1	72.4	65.6	84.7

자료 : FAO, UN,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 주 1. 괄호안은 전체 영양공급 중 비중.
2. 영양공급은 1인 1일당 영양공급 기준.

○ (교육) 북한의 고학력자 비중은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

- 북한의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211명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
 - 현재 북한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211명으로 남한의 638명에 비해 1/3 수준
 - 남한의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1980년에 160.3명, 1985년 308.8명임
 - 타 분야에 비해 북한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남북 경제통합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남북한 교육기관 및 대학생수 비교 〉

구분		북한		남한	
		1970년	현재(2014년)	1970년	현재(2014년)
교육기관	초등(소)학교(개교)	4,320	4,800	5,961	5,934
	중등학교(개교)	3,568	4,600	2,497	5,512
	대학교(개교)	129	490	191	1,547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47.6	211.0	61.4	6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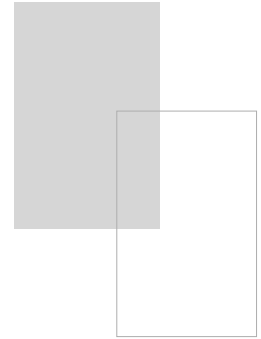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통계청.
 주 : 북한의 초등학교는 소학교임.

4. 시사점

- 북한은 경제 수준이 여전히 남한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
 - 북한은 경제 상황이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머물고 있음
 - 북한의 경제력 추정결과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3.7% 수준이며 이것은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수준으로 평가됨
 - 2015년 작황 부진으로 북한 내 전반적인 식량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과 영양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FAO는 최근 외부 지원이 필요한 36개 식량 부족 국가에 북한을 포함

-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
 -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도약을 위해서 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에너지, 자원개발, 물류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
 - 예컨대, 제철 및 정유 등 기간산업 개발, 전력시설,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공단 육성 등의 투자가 필요
 - 북한의 농가인구 1인당 생산량은 남한의 약 28.6%에 불과하여 북한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투자, 경작법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요구

-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향후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
 - 장기적으로 통일 이전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해 북한은 경제 희생 및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이 필요
 - 통일 이후 지출되는 통일비용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대북 투자 시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나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⁷³⁾

1. 개요

- 남북 경협 활성화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일비용 축소에 기여
 - 북한의 실질 GDP 규모는 1990년대 이후 정체상태가 지속
 - 북한의 실질 GDP는 1990년 35.0조원에서 1997년 24.9조원까지 하락한 이후 2014년 31.1조원까지 회복
 -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통일비용 확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⁷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바 있음
 - 2015년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남한 원 기준으로 약 1,290만원 (2006~2012년 평균 1,080만원)수준이며, 북한의 전체 노동생산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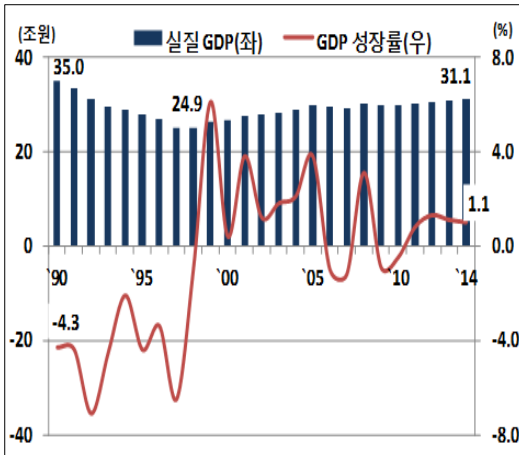
73)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2014. 10. 27 자료를 수정·보완.

74) 2016년 현재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된 상황임. 2015년 통계치는 11월까지 누계치임.

· 개성공단 사례를 볼 때 남북 경협 활성화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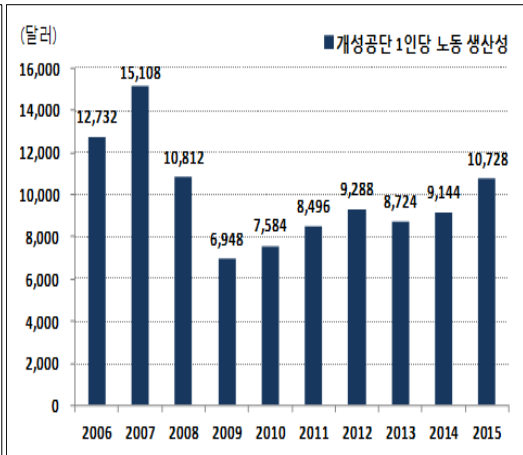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해보고, 북한 경제성장과 통일비용 절감차원에서 북한의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북한의 실질 GDP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가격 기준.

〈 개성공단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 〉



자료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통계자료.
주 : 연도별 월 평균 노동생산액 기준.

2.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① 북한의 노동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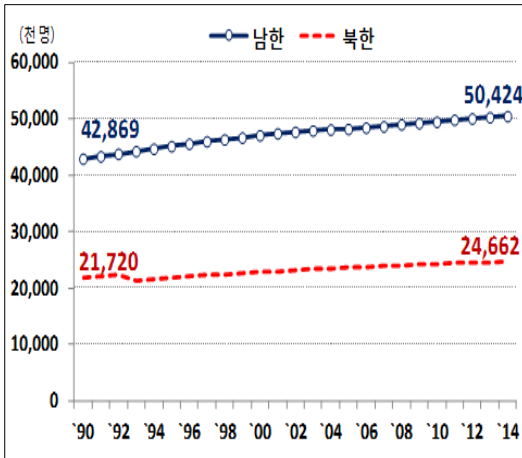
○ 인구구조 및 교육수준

- 1990년대 이후 북한 인구의 정체 현상이 지속

- 북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2천 460만 명으로 지난 20년 간 290만 명 증가에 불과한 반면, 남한은 같은 기간 약 750만 명 증가하였음
- 북한 인구의 정체는 1990년대 중·후반에 발생한 자연재해 및 이에 따른 식량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남북 인구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교육기관과 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음
 - 북한의 교육기관 수와 학생 수는 남한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의 경우 기관수는 남한 대비 3배 이상, 학생 수는 6배 이상 격차가 벌어짐
 - 하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적은 것을 고려하면 교육기관과 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는 편임
 - 특히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상⁷⁵⁾ 대비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향후 통일한국 실현 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남북한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

〈 남북한 교육수준 비교 (2014년 기준) 〉

(단위: 개, 천명)

구분	북한		남한		
	기관수	학생수	기관수	학생수	
교육기관	초등	4,800	1,500	5,934	2,729
	중고등	4,600	2,200	5,512	3,557
	대학	490	520	1,547	3,218
총 인구	50,424		24,662		

○ 산업구조 및 취업자 현황

-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⁷⁶⁾
 - 2014년 북한의 산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은 1차 산업 34.9%, 제조업 비중 21.3%(경공업 6.9%, 중공업 14.4%), SOC·건설 부문 12.5%, 서비스는 31.3% 수준임

75)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상은 전반적으로 남한의 1970년대 초 중반 수준이며, 교육의 경우 1980년대 수준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경제주평, 2014.04) 참조.

76) 1차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을 포함하며 SOC·건설 부문은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을 의미. 제조업 중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을 의미.

· 반면 남한은 2014년 서비스업이 59.4%, 중공업 24.9% 등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임

- 한편 북한의 취업자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큰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음
- 북한의 1차 산업 취업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361만 명(29.6%), 제조업 288만 명(23.6%) 순임
- 남한은 서비스업 취업자가 1,792만 명으로 전체의 7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433만 명(16.9%), 1차 산업 취업자는 147만 명(5.7%)에 불과

〈 남북한 산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북한		남한	
	1990	2014	1970	2014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6.4	34.9	30.7	2.5
제조업	31.8	21.3	18.5	30.3
경공업	6.9	6.9	11.2	5.4
중공업	25.6	14.4	7.4	24.9
SOC·건설	13.7	12.5	6.4	7.7
서비스업	18.0	31.3	44.3	59.4

〈 남북한 산업별 취업자수 현황 〉

(단위: 만명, %)

구분	북한		남한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산업	1,218	100.0	2,560	100.0
1차 산업	511	42.0	147	5.7
제조업	288	23.6	433	16.9
경공업	132	10.8	87	3.4
중공업	156	12.8	346	13.5
SOC·건설	58	4.8	188	7.3
서비스업	361	29.6	1,792	70.0

자료 : 한국은행.

주 : 북한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별 비중, 남한은 총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1) 북한 2008년, 남한 2014년 기준
2) 북한은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를 산업에 맞게 재조정함.

②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 남북한 노동생산성 추정 방법 및 가정

- 본 연구에서는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노동생산성을 평가하고자 함
 - 노동생산성은 일정 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 동안 산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냄
 - 노동생산성 지표 산출은 노동투입량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됨
 - 물적 노동생산성 추정에는 일반적으로 생산함수를 이용하나, 북한의 노동, 자본 스톡 등 관련 통계 자료 부족 등으로 생산함수 추정이 곤란함
 - 이에 본 총서에서는 국내총생산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통해 남북한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자 함

-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의 북한 GDP 결과를 활용하며, 산업별 취업자는 2008년 북한 인구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
 - 북한의 경제활동별 명목 국내총생산⁷⁷⁾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북한 GDP 추계결과를 활용하였음(2010년 가격 기준)
 - 산업별 취업자는 2008년 UNFPA(유엔인구기금)와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실시한 인구일제조사 결과⁷⁸⁾(취업자 비중)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취업률 불변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 또한 남북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노동생산성 추정 방식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 추정⁷⁹⁾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77) 참고로 2008년 기준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약 27조원(1차 산업 9.2조원, 제조업 6.1조원, SOC·건설 3.2조원, 서비스업 8.8조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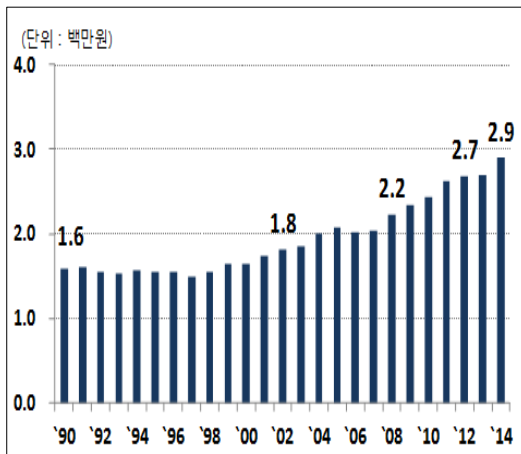
78) 2008년 기준 북한의 전체 인구는 2,400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740만명, 취업자는 1,218만명 수준임.

79) KPC(한국생산성본부)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현황과 비교했을 때 추정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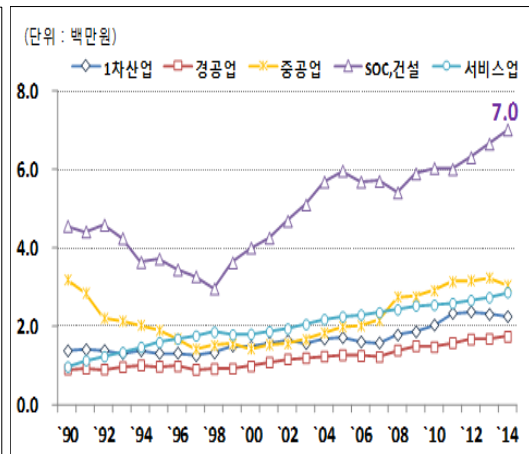
○ 북한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에서 2014년 290만원으로 지난 24년 간 약 130만원(남한 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전 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공산권 붕괴에 따른 경제협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정체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⁸⁰⁾ 이후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약 29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는 SOC·건설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산업은 상승률이 미미한 수준
 - SOC·건설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460만원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300만원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4년 기준 700만원을 기록
 - 반면 나머지 산업들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 이후 정체 중이며, 특히 2014년 기준 경공업(170만원)과 1차 산업(230만원)이 가장 낮은 수준

〈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 〉



〈 북한의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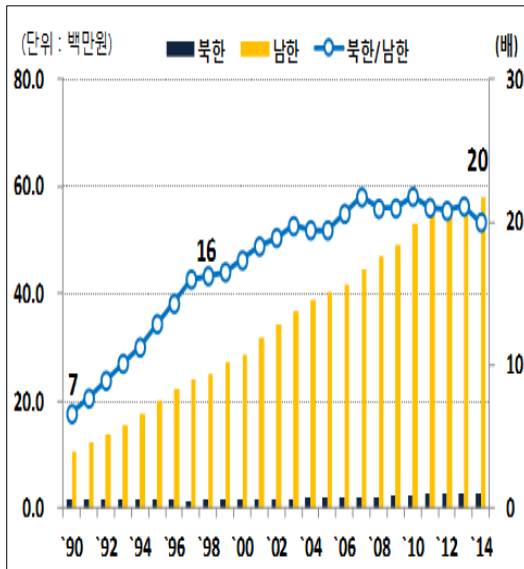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통계청, 한국은행 통계 이용).
 주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80)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난 해소, 2중 경제 개선, 국가 재정부담 경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격 및 임금의 인상, 노동생산성 향상, 배급제 개선,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임.

○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결과

- 북한의 전 산업 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은 남한의⁸¹⁾ 1980년 수준과 비슷
 - 2014년 기준 북한의 노동생산성 약 290만원은 남한의 1980년 1인당 노동생산성 약 285만원⁸²⁾ 수준과 유사함
 - 1990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 대비 1/7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는 1/16 수준으로, 2014년에는 1/20 수준까지 격차가 크게 확대됨
- 산업별로 보면 2014년 기준 SOC·건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경공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북한의 SOC·건설은 남한 대비 1/8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1차 산업(1/10 수준) 순임
 - 제조업의 경우 남한 대비 1/38 수준으로 매우 낮고, 특히 경공업이 중화학 공업에 비해 격차가 큰 편으로 분석됨

〈 남북한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 〉



〈 남북한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비교 〉

(단위 : 남한 백만원, 배)

구분	2014		
	북한	남한	남한/북한
전 산업	2.9	58.0	20.0
1차 산업	2.3	23.4	10.2
제조업	2.5	94.7	37.9
경공업	1.7	64.2	37.8
중공업	3.1	102.4	33.0
SOC·건설	7.0	55.9	8.0
서비스업	2.9	44.9	1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통계청, 한국은행 통계 이용).

주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81) 남한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약 5,800만원을 기록함. 산업별로는 중공업의 노동생산성이 약 1억원으로 가장 높고, 1차 산업은 2,340만원으로 가장 낮음.

82) 1970~1989년 사이의 남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GNP와 취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3.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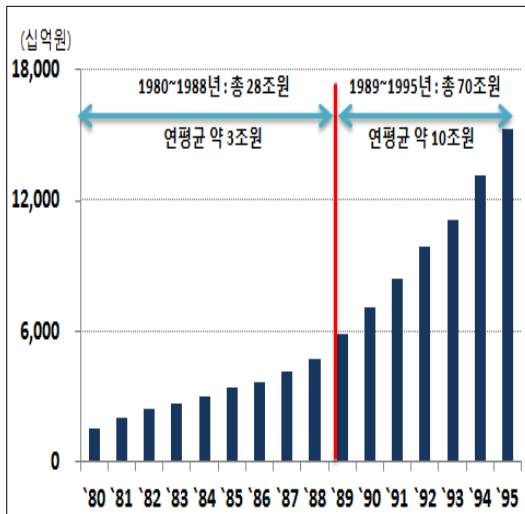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 방법 및 가정

-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재 투입(설비투자 등) 규모를 증가시키는 한편 인적자본의 육성이 중요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R&D)투자, 설비투자에 따른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증가, 인적자본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됨
- 본 연구에서는 자본재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자본의 육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추정
 - 자본재 투입에 비해 인적자본 육성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일 이전 북한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인적자본 육성은 공교육 투자, 직업훈련 재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추정 편의상 공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제한함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은 과거 남한 정부의 교육비(공교육비+직업훈련 교육비) 지출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을 위해선 북한의 교육비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부재로 과거 남한의 인적자본육성 과정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 남한 정부의 인적자본육성 비용은 일반정부의 교육비 총지출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명목기준)를 합산한 결과를 사용함
 - 또한 현재 가치로 추정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북한의 현재 인구(약 25,000명)를 고려하여 반영함
-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남한의 1980년 수준과 비슷한 상황에서, 남한이 1980년 이후 투입한 인적자본육성 비용을 계산하여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으로 추산
 - 첫째, 남한의 1980년 1인당 노동생산성 285만원에서 1988년 1,000만원까지 9년간 투입한 인적자본육성 비용을 추정(참고 1988년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
 - 둘째, 남한의 1989년 1인당 노동생산성 1,500만원에서 1995년 2,500만원까지 7년간 투입한 인적자본 육성 비용을 추정(1995년 1인당 GDP 10,000달러)하여 북한에 적용함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

- 남한은 1980년부터 1988년(1인당 노동생산성 1,000만원)까지 약 28조원, 1989년부터 1995년(1인당 노동생산성 2,500만원)까지 약 70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가 소요
 - 남한은 1980년 1인당 노동생산성 285만원에서 1988년 1,000만원 달성까지 9년간 약 28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연평균 약 3조원, 1인당 68만원)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
 - 또한 1989년 1인당 노동생산성 1,500만원에서 1995년 2,500만원 달성까지 7년간 약 70조원에 달하는 인적자본육성비(연평균 약 10조원, 1인당 164만원)가 추가로 투입
- 북한은 1인당 노동생산성 1,000만원 달성까지 약 55조원, 1인당 노동생산성 2,500만원 달성까지 약 85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가 필요
 - 물가상승률 및 인구추계를 감안하여 남한의 경로를 대입해 볼 때, 북한이 노동생산성 29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9년간 약 55조원(연평균 약 6조원, 1인당 220만원)의 인적자본육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그 이후 1인당 노동생산성 2,500만원 달성까지는 7년간 약 85조원(연평균 약 12조원, 1인당 340만원)의 인적자본육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남한의 인적자본육성비용 지출 현황 〉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고용노동부 세출세입 결산.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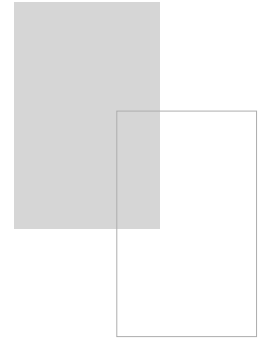
(단위 : 남한 십억원)

구분	소요기간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1인당 노동생산성 1,000만원 달성까지	9년	·약 55조원 소요 ·연평균 약 6조원 ·1인당 220만원
1인당 노동생산성 2,500만원 달성까지	7년	·약 85조원 소요 ·연평균 약 12조원 ·1인당 340만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4. 시사점

-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 정도로 추정되나,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 인력은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습득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북한 경제 발전 지원, 교육 교류 사업 확대, 다자간 협력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잠재력이 높은 북한 인적자본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통일비용의 축소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첫째,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여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 토대 마련 노력이 필요
 - 북한 경제의 성장 도약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경제 회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경협 확대 노력이 필요함
 -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 회생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둘째,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북 산업 기술 및 교육 교류 사업 확대 추진 노력을 모색
 - 통일 대비 대북 산업 기술 및 교육 교류 사업 확대는 140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축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경우 남한 대비 1/38 수준으로 기술 교육 확대를 통한 제조업 자활 능력 확대는 북한 주민 생활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셋째, 다자 간 협력 확대로 북한 인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모
 - 남북 협력뿐 아니라 통일 대비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 고취를 위해 남·북·중·러 등 다자간 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노동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원해야 함
 - 남·북·중·러 등이 합작기업을 진행할 때 북한 인력의 우선 고용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해야 함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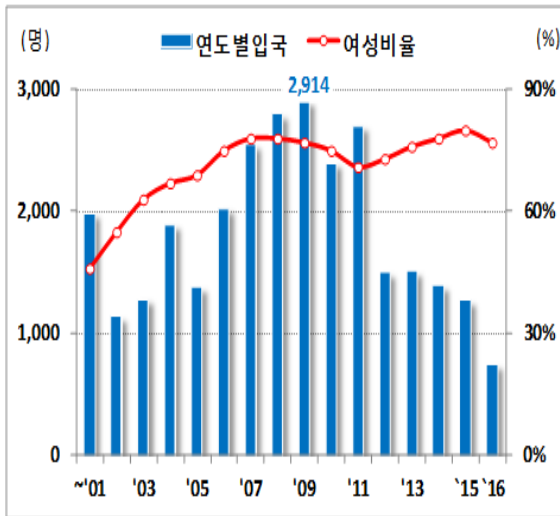
- (연구 목적) 북한이탈주민 입국 3만 명을 맞은 현 시점에, 통일의 마중물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을 면밀히 알아볼 필요성이 대두
- 2016년 6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9,543명으로 3만 여명에 달함
 - 북한이탈주민은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맞물려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한해 2,914명이 입국했으나, 최근에는 하락 추세
 - 최근 입국 하락 요인은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자 검열 강화, 탈북자 증가에 따른 도강비 상승, 남한 거주 중인 가족의 송금 등임

·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해 왔고, 최근에는 통일부 주도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의 마중물로서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적 정착이 필수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 과정에 있어 안정적인 남북한 사회통합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됨
-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안정적 정착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정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 이에 본 총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 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변화 〉

시기	관할	주요특징
1953~1989 (냉전시기)	국방부	- 귀순용사 - 소수 입국
1990~1997 (탈냉전시기)	보건복지부	- 귀순동포 -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1997~현재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법률

자료 : 통일부 자료 참조.

○ (연구방법)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활동 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 경제 활동 현황을 점검

- 본 연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⁸³의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83) 2003년 개소한 NKDB(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는 지난 13년 간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NGO 기관임.

-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 경제 동향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남북하나재단 (정부, 통일부 위탁 사업), 한국소비자원, 북한인권정보센터(민간 자체 사업)가 대표적임
 - 남북하나재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5년부터 10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조사를 실시
 - 정부와 민간차원의 조사는 대상자의 규모, 특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조사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유 자료가 다양한 민간의 자료를 활용
- 분석 방법은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소득의 특징을 비롯해, 필요에 따라 일반국민과의 비교를 병행하여 분석
 - 분석 시기는 2010년부터 2014년으로 최근 5년으로 한정했고, 자료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과 통계청의 경제활동동향임

〈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분석 방법 〉

구분	주요 분석 내용
분석 방법	①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인구 현황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현황(일반국민과 비교 포함) - 북한이탈주민 비경제활동의 주요 원인 등
	②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황 - 취업자 평균 근속기간, 직종별 및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액 분석 -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취업경험 등 분석
	③ 북한이탈주민 소득 현황 - 총 가계소득 현황, 생활비 지출 수준 등 분석
	④ 북한이탈주민 기타 경제 활동 현황 - 저축 유무 및 저축 수준, 부채 유무 및 사유 등 분석
자료 출처	-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통계청 자료 활용)
	- 2010~2014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북한인권정보센터 자료 활용) · 실업률 등 특정 사안은 2005년부터 분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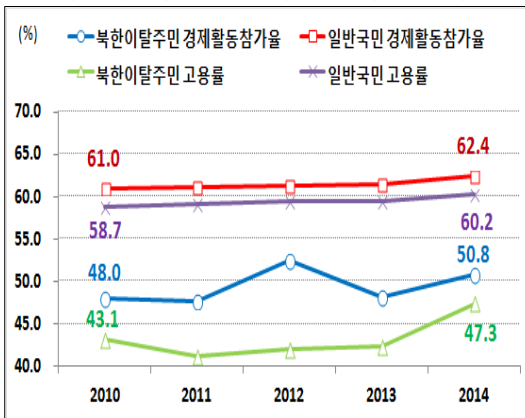
① 경제활동인구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일반 국민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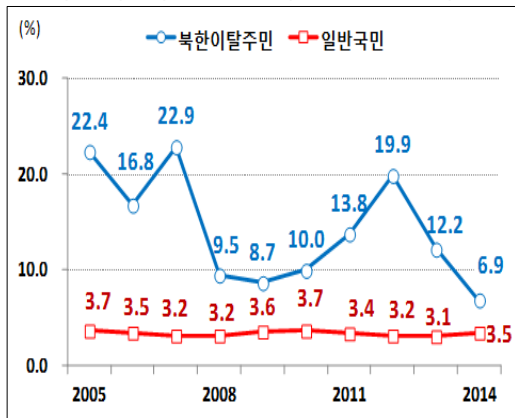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수준을 개선 중이나 여전히 일반국민에 비해선 열위
 -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⁸⁴⁾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으로 국내 입국 탈북주민들을 적극 지원
 -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8.0%에서 2014년 50.8%로 2.8%p 증가했고, 고용률도 동기간 43.1%에서 47.3%로 3.8%p 증가
 - 하지만 여전히 일반국민들의 수준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10.0%p, 고용률은 약 13.0%p 낮은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도 개선되는 추세이나 일반국민과의 격차는 여전
 - 2005년 22.4%에 달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정부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개선세가 지속됐고,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6.9%로 개선
 - 하지만 여전히 일반국민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

〈 북한이탈주민/일반국민 경제활동 비교 〉



〈 북한이탈주민/일반국민 실업률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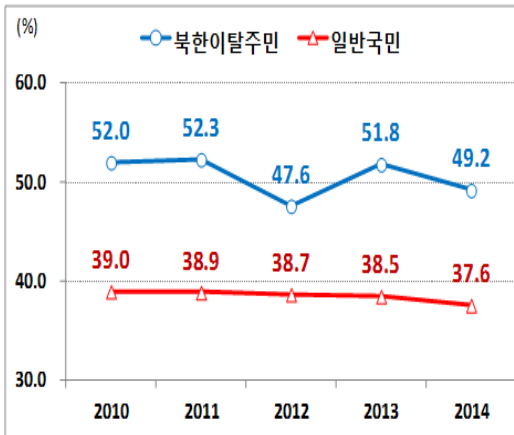
자료 : NKDB,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8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1월 최초로 실시되기 시작해 2014년 5월까지 지속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바람직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취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2010년 개정(취업지원 강화방안), 2014년 개정(취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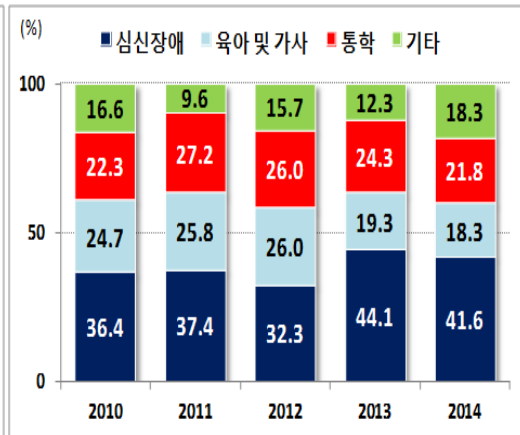
○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비경제활동 주요 원인은 심신장애에 기인

-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⁸⁵⁾ 수준도 일반국민에 비해 높은 수준
 - 15세 이상의 근로 가능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⁸⁶⁾은 2010년 52.0%에서 2012년 47.6%로 감소했다가 2014년 49.2%로 재차 증가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평균으로 볼 때 50.6%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일반국민들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약 38.0% 수준이 지속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
- 북한이탈주민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심신장애가 주요 원인임
 - 북한이탈주민 비경제활동 인구의 주요 이유는 심신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학, 육아 및 가사 순임
 - 심신장애의 경우 2010년 36.4%에서 2012년 32.3%로 소폭 감소했다가 재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1.6%에 달함
- 북한이탈주민의 심신장애는 북한 생활에서 얻은 질병 악화⁸⁷⁾,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에 있어 어려움 등에 기인

〈 북한이탈주민/일반국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 북한이탈주민 비경제활동 이유 〉



자료 : NKDB,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85)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조사대상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대상자임. 이들의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심신장애 등으로 구분됨.

86)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비경제활동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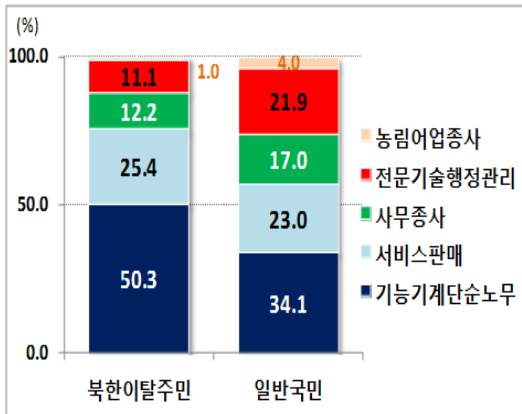
87)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의료체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진료소 등의 의료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이에 주민들은 감기 등 작은 질병은 민간요법으로 치료했으나, 중병의 경우는 치료 시점을 놓치게 된 경우가 많음.

②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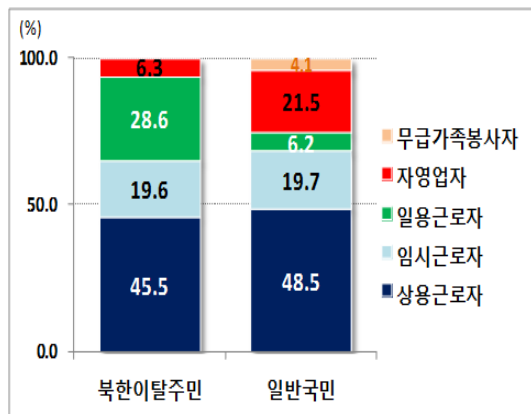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은 기능기계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근로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기능기계단순노무직에 집중
 -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기능기계단순노무직이 50.3%로 가장 높고, 서비스 판매(25.4%), 사무종사(12.2%), 전문기술행정관리(11.1%) 순임
 - 일반국민의 직업 분포도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순위는 유사하나, 북한이탈주민의 기능기계단순노무직 비중이 일반국민에 비해 약 20.0% 이상 높음
 - 이는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취업경력은 한국사회에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노무직에 취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
-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반국민에 비해 일용근로자 비율이 5배 이상 높은 수준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4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용근로자(28.6%), 임시근로자(19.6%), 자영업자(6.3%) 순임
 - 일반국민과 비교해 볼 때, 상용근로자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일용근로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약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근로는 여성의 경우 주로 음식점 서비스이며, 남성은 건설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결과적으로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취업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일반국민 직업별 취업자 비교 〉



〈 북한이탈주민/일반국민 종사상 지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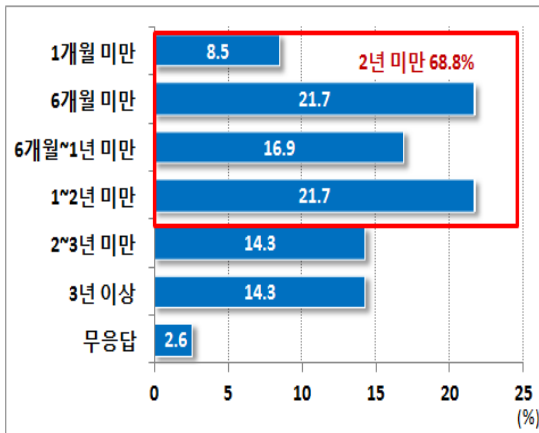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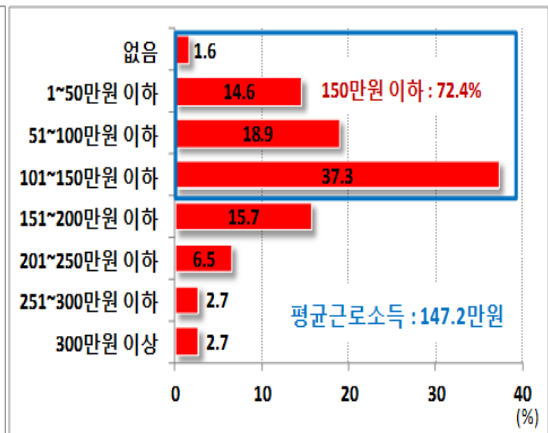
○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미만이 68.8%에 달하고, 평균 근로소득액은 150만원 이하가 72.4%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대부분 2년 미만임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과 1~2년 미만이 각각 2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개월~1년 미만(16.9%), 2~3년 미만 및 3년 이상(각각 14.3%), 1개월 미만(8.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 단위 구분으로 볼 때, 1년 미만(47.1%), 2년 미만(68.8%)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들은 직장 내 장기근속이 지속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일반국민과 비교해 볼 때, 일반국민의 평균 근속기간이 67개월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근로소득액⁸⁸⁾도 평균 147만원 수준에 불과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101~150만원 이하가 3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100만원 이하(18.9%), 151~200만원 이하(15.7%), 1~50만원 이하(14.6%)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구간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150만원 이하 구간은 72.4%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151만원 이상은 27.6%에 불과함⁸⁹⁾
 - 특히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액 147.2만원은 2014년 일반국민의 평균임금 223.1만원(통계청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비하면 약 76만원이나 낮음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 〉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근로소득액 〉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88) NKDB의 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의 응답(45.8%)보다 불만족(54.0%)의 응답 비중이 높음.

89) 구간별 특징은 2016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162.5만원을 기준, 조사결과인 150만원과 동일함을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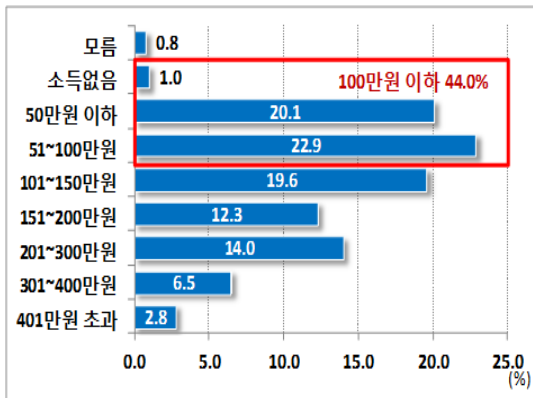
③ 가계소득

○ 북한이탈주민 가계 총 소득 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과반에 가깝고, 생활비 수준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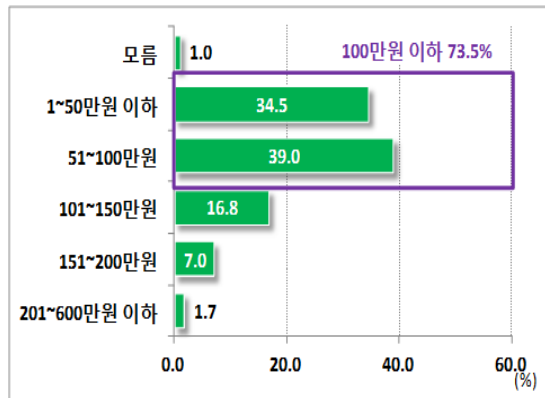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의 가계 총 소득(본인 포함 가족)은 100만원 이하가 44.0%에 달함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포함 가족의 1개월 수입 총액은 51~100만원이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 이하(20.1%), 101~150만원(19.6%) 순임
 - 구간별로 봤을 때, 100만원 이하 수준은 총 44.0%에 달해 과반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의 총 가계소득 수준은 열악한 편으로 분석
 - 특히 2인 이상 가구⁹⁰⁾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100만원 이하 수입이 있는 가족들은 법정 최저생계비⁹¹⁾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⁹²⁾

- 이에 따라 가계 생활비 지출 수준도 대부분 100만원 이하에 집중
 -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월 생활비 지출은 51~100만원 이하가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0만원 이하(34.5%), 101~150만원(16.8%) 순임
 - 특히 과반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의 가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큼, 생활비도 100만원 이하가 73.5%(1~50만원 이하 34.5%+ 51~100만원 39.0%) 수준에 달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보장에 대한 노력이 모색될 필요

〈 북한이탈주민 가계 총 소득 수준 〉



〈 북한이탈주민 가계 생활비 수준 〉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90) NKDB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응답자 400명 가운데 1인 가족은 32.5% 수준이었고, 2인 가족 이상(2인 31.5%+3인 22.3%+4인 11.2%+5인 2.5%)은 67.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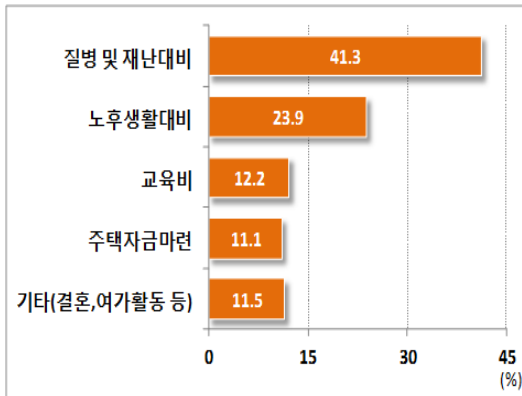
91) 2014년 2인 가구 기준 법정 최저생계비는 102만원 수준임.

92) NKDB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 수급 비중이 지난 4년간 약 45.4%에 달함.(2011년 45.4%→2012년 48.0%→2013년 43.1%→2014년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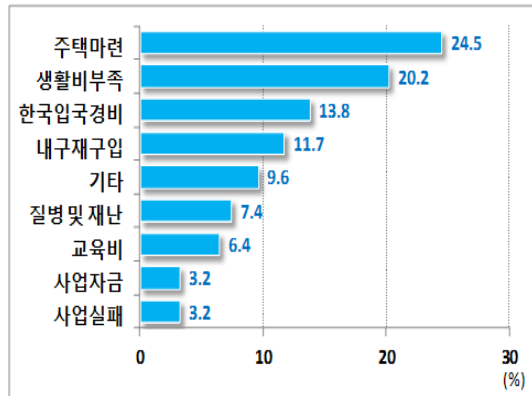
④ 기타 경제활동

-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질병과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고 있고, 부채가 있는 경우는 주로 주택마련 및 생활비 부족에 기인
 - 북한이탈주민의 61.2%는 저축을 하고 있으며, 주로 질병과 노후에 대비하기 위함
 -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저축 비중 (2010년 55.8%→2012년 51.9%→2014년 61.2%)은 증가세를 유지
 -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저축액은 소득을 고려하여 1~25만원이 53.3%로 가장 많았고, 26~50만원(23.4%), 51~100만원(14.3%) 순으로 응답
 - 저축의 주요 이유는 질병 및 재난 대비가 4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후생활대비 23.9%, 교육비 12.2%, 주택자금 마련 11.1% 순으로 응답
 - 한편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비 부족 등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부채가 있는 대상자 비율은 19.8% 수준임
 - 부채의 이유는 주택마련이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비 부족(20.2%), 한국입국경비⁹³⁾(13.8%), 내구재구입(11.7%), 기타(對북송금⁹⁴⁾등, 9.6%) 순임
 -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북한이탈주민 저축을 하는 이유 〉



〈 북한이탈주민 부채 사유 〉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93) 절대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 입국 과정에 브로커를 통해 후불제 방식으로 입국하는 추세이며, 한국에 입국한 이후 정착지원금 등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음.

94) 북한이탈주민의 對북 송금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

⑤ 종합 평가

- 평가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전반은 지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불안정한 취업구조, 낮은 소득 수준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임
- 경제활동인구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일반 국민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
 - 2014년 기준 일반국민들과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10.0%p, 고용률은 약 13.0%p 낮고, 실업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3.4%p 높음
 - 북한이탈주민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지난 5년 간 50.6% 수준이 지속 중
- 취업 :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은 기능기계단순노무직(직업별)과 일용근로자(종사상지위별)에 집중되어 있고, 평균 근로소득액은 150만원 이하가 72.4% 수준임
 - 북한에서의 취득한 학력이나 취업경력은 한국사회에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노무직에 취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액 147.2만원은 2014년 일반국민의 평균임금 223.1만원(통계청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비해 약 76만원이나 낮음
- 가계소득 : 북한이탈주민 가계 총 소득 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과반에 가깝고, 생활비 수준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상황

〈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평가 〉

구분	내용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개선되는 추세이나 일반국민에 비해선 열위 · 일반국민 대비 경제활동참가율(11.6%p ↓), 실업률(3.4%p ↑)
취업	- 취업 수준 및 근로소득 모두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수준 · 일반국민 대비 단순노무직 비율(16.2%p ↑), 일용근로자 비율(22.4%p ↑) · 일반국민 대비 취업자 근로소득액 76만원 낮은 수준
가계소득	- 가계 총 소득(본인 포함 가족) 수준, 100만원 이하가 44.0%에 달함 - 이에 따라 가계 생활비 지출 수준도 대부분 100만원 이하에 집중
기타 경제활동	- 북한이탈주민의 61.2%, 질병과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 - 부채가 있는 경우는 주로 주택마련 및 생활비 부족에 기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3.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활동 조사 확대, 취업구조 개선 등으로 안정적 경제 정착을 지원할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 노력 확대
 - 현재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조사는 정부는 남북하나재단이, 민간은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실시 중이며, 그 동안 지속적인 조사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둠
 - 하지만 일각⁹⁵⁾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가 집중되어 있고, 소득 부문은 개인에만 집중되다보니 가족집단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
 - 이에, 보다 정확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 부문에 있어서의 통계청 기법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모색할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난 개선을 위해 기 실시 중인 정부 차원의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비경제활동의 주요 원인인 심신장애 해결을 위한 노력도 모색
 -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난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중견기업 협력체제 강화 사업 등을 운영 중
 - 기 실행 중인 정부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직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1:1 멘토링⁹⁶⁾ 사업 구축 등 다양한 교육 및 직업경험을 지원할 필요
 - 또한 북한이탈주민 비경제활동의 주요인인 심신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
 - 이러한 복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지속 활성화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 개선 뿐 아니라 소득 증대 효과도 확대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지원
 - 기 추진 중인 미래행복통장(근로 소득의 일정액 저축 시 정부가 같은 금액 적립)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 사업도 필요

95) 박주선 의원(국민의 당, 국회 부의장)은 2016년 8월 22일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가구소득 조사 및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발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발의한 바 있음.

96) 멘토링(mentoring)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멘티(mentee: 멘토링을 받는 사람)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임. 특히 북한이탈주민 취업난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 전문가, 기업 전문가들이 대상자와의 1:1 연계를 통해 직업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은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개선에 효율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

〈 참고 〉 북한이탈주민 對북 송금 현황 추정

-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對북 송금 경험이 있고, 한국·중국·북한의 브로커들을 통해 송금을 실시 중
 -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약 70%가 송금 경험이 있고, 금액은 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
 - 송금인원 : 2014년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59%가, 2016년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는 71%가 송금 경험이 있다고 밝혀, 전체 2만 9,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만 9,000명 정도가 송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송금 횟수 및 송금액 : 평균 1.5회 수준이며, 금액은 회당 100~200만원 수준임
 - 송금 방식 : 3차 브로커(한국, 중국, 북한)를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금액을 송금하고 있으며, 브로커비용은 각각 10% 수준이며, 위안화와 달러로 전달
 - 연간 송금액 : 송금 인원을 1만 9,000명으로 1회 송금을 가정할 경우, 최소 190억 원(100만원 가정)에서 최대 380억 원(200만원 가정)으로 추산
- 북한이탈주민 對북 송금은 주로 장마당에서 활용되어 북한 사경제 활성화에 도움
 -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은 송금 받은 달러나 위안화로 장마당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장사 밀친(Seed money)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송금액 중 일부는 담당 보위원, 안전원에게 뇌물로 지급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對북송금 실태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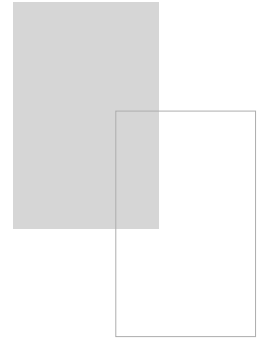
	✓ 송금인원 : 약 19,000명 수준 추정 - NKDB : 59% 송금 경험(2014년 기준) - 조선일보 : 71% 송금 경험(2016년 기준)
	✓ 개인 송금횟수 : 평균 1.5회 수준
	✓ 개인 송금액 : 100~200만원 수준
	✓ 브로커 수수료 : 송금액의 30% 수준 - 1,2,3차 브로커 각각 10%씩 차지
	✓ 연간 송금액 규모 : 年 100억원 이상 - 19,000명 X 100만원 가정 : 190억 원 - 19,000명 X 200만원 가정 : 380억 원

〈 북한이탈주민 송금 방식 〉

 한국 - 탈북자, 1차 브로커 은행(국내)에 입금 - 1차 브로커 : 같은 탈북자(보위부 출신 등)
↓
 중국 - 1차 브로커, 2차 브로커 은행(중국) 송금 - 2차 브로커 : 화교 혹은 조선족
↓
 북한 - 3차 브로커, 위안화, 달러 출금후 전달 - 3차 브로커 : 화교 혹은 북한주민(무역) - 확인 여부는 주로 음성통화를 활용

제2장 통일경제의 미래

-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 모색
- 통일경제의 미래상
- 통일한국의 유망산업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 모색

1.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 모색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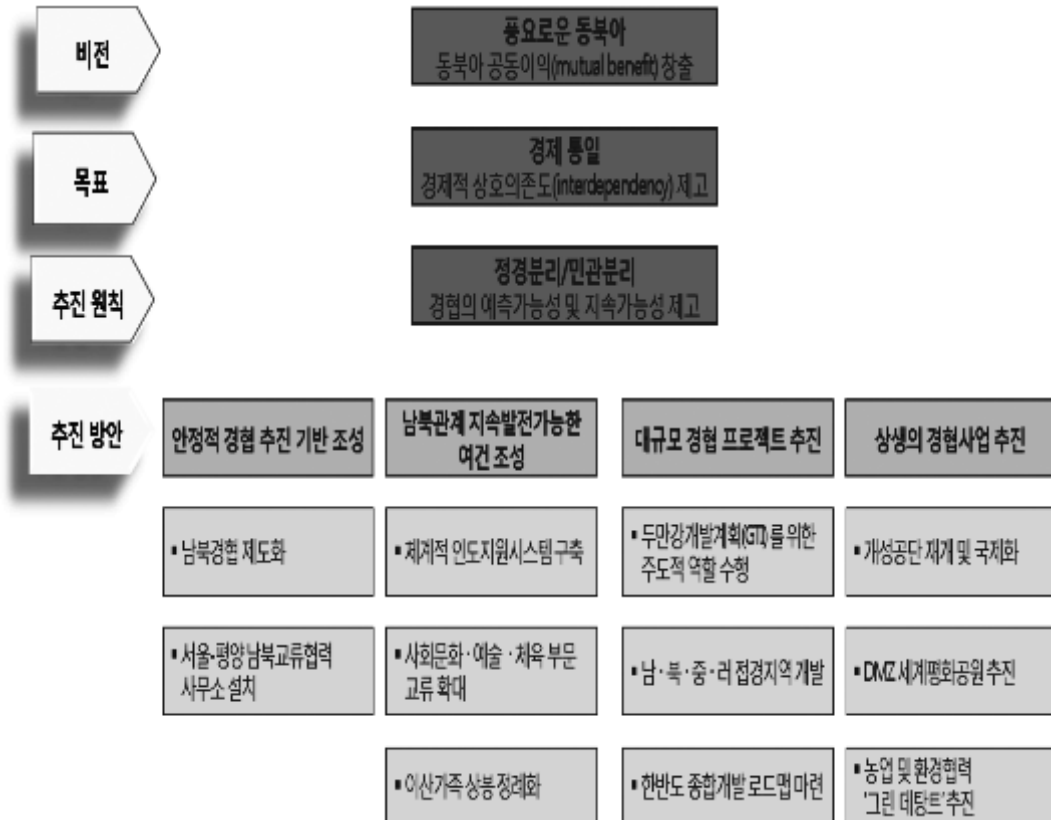
- (의미) 남북 경협은 지난 28년 동안 도입기와 성장기를 지나 현재는 정체기 상황으로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
-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 : 남북 경협이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탄탄한 제도화에 기반한 질적 변화를 도모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질적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새로운 남북 경험의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정책 과제

(1) 남북 경험의 새로운 비전

- (필요로운 동북아) 남북 경험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공동 이익 (mutual benefit) 창출
- 동북아 경제권 구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부활, 일본의 재기, 미국의 아시아 회귀 등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각⁹⁷⁾

〈 새로운 남북 경험의 패러다임 개념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97) 조동호, “새 정부의 대북정책 : 전환적 접근과 비전”, 『새 정부 대북정책 제안토론 : 전환적 접근과 비전 - 2013년 북한연구학회 신년기획 학술회의』, 북한연구학회, 2013. p. 21.

- (한반도 생활권 확대) 북한을 경유한 북방대륙 진출은 물론, 남·북·중·러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로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 등지로 한반도 생활권 확대
-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 북미 경제권과 EU경제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
- 현재 관련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이나,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될 경우, 경제적 비중이 훨씬 커질 전망

(2) 남북 경제협치의 새로운 목표

- (경제통일) 다양한 경제 협치 사업을 통해 남북한 경제의 상호 의존도 (interdependency) 제고
 - 남북간 경제적 연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남북한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동반성장가능한 환경을 조성

〈 동북아국가들의 GDP와 구매력 지수 전망치 〉

(단위 : 십억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국	GDP	10,431	10,983	11,383	12,263	13,338	14,605	16,144	17,762
	PPP	16.5	17.1	17.6	18.1	18.5	18.9	19.4	19.8
일본	GDP	4,596	4,123	4,413	4,514	4,562	4,676	4,800	4,895
	PPP	4.4	4.3	4.1	4.0	3.9	3.8	3.7	3.5
러시아	GDP	2,030	1,325	1,133	1,268	1,355	1,447	1,531	1,608
	PPP	3.5	3.3	3.1	3.0	3.0	2.9	2.8	2.8
한국	GDP	1,410	1,377	1,321	1,379	1,435	1,499	1,566	1,629
	PPP	1.6	1.6	1.6	1.6	1.6	1.6	1.6	1.6
합계	GDP	18,467	17,808	18,250	19,424	20,691	22,227	24,041	25,894
	PPP	26.0	26.2	26.5	26.8	27.0	27.2	27.4	27.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6 Database.

주 : 구매력 지수(Power Purchase Parity) 비중은 189개 국가의 총합에서의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3) 남북 경협을 위한 새로운 추진 원칙

- (정경분리·민관분리)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간 정치·군사적 현안이 민간의 경협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화해협력과 상호주의간 정책 균형의 유지가 필요
- 경협을 위한 예측가능성·지속가능성 제고 : 경협이 경제외적 상황에 의해 축소·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함
 - (예측가능성) 국내외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경협이 경제외적 상황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 (지속가능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지속성·연속성 유지가 중요

(4) 남북 경협을 위한 새로운 추진 방안

-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협 추진 기반 조성) 남북 경협을 위한 제도화,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
- 남북 경협 제도화 추진 : 2003년 체결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청산결제의 4대경협합의서 시행세칙 마련 및 개성 및 금강산 관련 법제 개선
 -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작으로 3통 문제뿐 아니라, 노무·세무·보험제도 개선 및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화 노력 필요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 재발방지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은 물론, 투자재산의 보호,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이 해결되어야 함
-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남북 주민들의 출입·체류와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 관련 업무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할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함
- (남북관계의 지속발전가능한 여건 조성) 체계적 인도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등

- 체계적인 인도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방안 모색
 - 식량 취약 계층의 실태와 식량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춘궁기·시비기·파종기 등 적기에 식량 및 비료 지원을 통해 지원의 효과 제고
 - 단순한 지원에서 농업·보건의료·녹색사업 등 개발협력을 구체화하는 '그린 데탕트'를 통해 지원 효과 제고 및 교류 협력 활성화 도모

- 남북한 사회문화·예술·체육 부문의 교류협력 확대 : 지자체와 NGO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체육·교육학술·언론출판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 청소년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노력 및 지자체 자매 결연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주민통합 및 행정통합 준비
 -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 등을 통해 민족 화합을 과시 및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서신교환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수시 왕래를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자·국군포로 고향 방문을 우선 추진하고 점차 이산가족 상호 왕래 및 남북자·국군포로 송환 등을 추진에 NGO를 활용하는 방안 고려
 - 동서독간 프라이카우프와 같이 경제·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상력 제고 방안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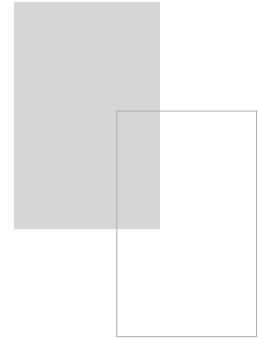
-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 추진) 두만강개발계획(GTI)의 주도적 역할, 남·북·중·러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도로·항만 인프라 및 가스관연결사업 등 新 북방사업 추진
 - GTI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동북아국가간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두만강지역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현황)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설립되어 한국, 중국, 러시아,

- 몽골, 북한(2009년 탈퇴) 등이 참여
 -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로 개칭하였으나, 별다른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과제) ASEAN, APEC 등 타 경제협력체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된 개발 계획을 통해 다자간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
 - 회원국 공동 FTA 구상 및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 협력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연구와 개발 계획을 지원
- 남·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북중·북러간 철도·도로·항만 사업과 TSR~TCR~TKR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북중·북러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 협력 사업에 참여
 - (북중·북러간 철도·도로·항만 사업) 러시아, 일본, 한국과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운송망 건설 사업에 적극 동참
 - (TSR~TCR~TKR 연결하여 복합물류망 구축)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해당사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북한 철도의 현대화 사업 추진
 -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남북의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개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남북러 3국을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한반도종합개발로드맵 마련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남북한 인프라 연계를 위한 종합개발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경험 프로젝트 시행 필요
 - 전력, 통신,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 전역의 주요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남북한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한반도종합개발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상생의 경험사업 추진) 개성공단 재개 및 국제화,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산림녹화,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경험 사업 추진
- 개성공단 재개 및 국제화 : 1단계의 안정적 마무리와 2단계 조기 착공으로 고부가가치 특화업종 유치, 수출 중심기지로 개발로 개성공단의 내외연적 확대·발전 도모와 제도화를 통한 국제화 추진

-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 DMZ는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와 같이 역사적·생태적 의미가 매우 큰 공간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특히, 북한의 마식령~원산 특구와 연계한 복합 개발계획을 통해 상생의 경협모델 구축이 필요
-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산림녹화,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경협 사업 추진

3. 시사점

- (시사점) 남북대화와 북핵 논의 진전을 위한 북한의 변화 유도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가시적인 협력 제안 필요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분리 접근 : 3자-4자-6자 등 다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방안 모색과 함께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와 분리하여 실리적 접근 필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동력 확보 :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전향적인 대북 정책 추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의 기반 조성
 -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상호 신뢰와 남북관계 복원 필요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으로 북한 변화 분위기 유도 :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화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남북 경협 확대 필요



통일경제의 미래상⁹⁸⁾

1. 개요

- (남북한 경제 현황) 2013년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약 3.6%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 실질 GDP : 2012년 북한의 실질 GDP는 30.5조원으로 남한의 2.3% 수준에 불과
 - 1인당 명목 GDP : 2013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 3,838달러로 세계 33위, 북한은 854달러로 세계 162위⁹⁹⁾
- (남북한의 산업구조) 2012년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 산업 구조와 유사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¹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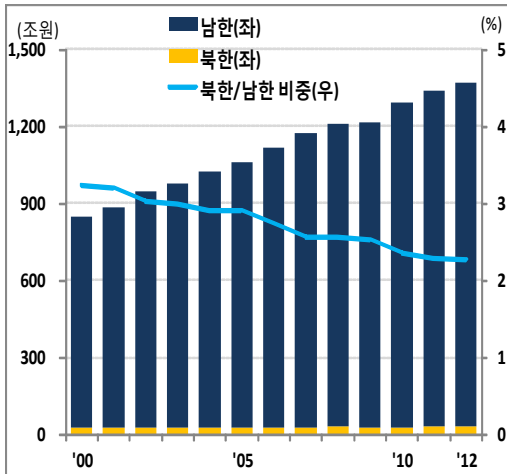
98)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2014. 4. 21 자료임.

99)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참고.

100) 1차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을 포함하며 SOC 부문은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을 의미. 제조업 중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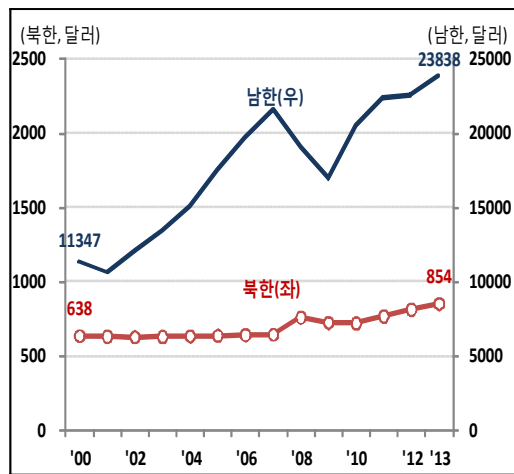
- 2012년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은 1차 산업 37.4%, 제조업 비중 21.9%(경공업 6.7%, 중공업 15.2%), SOC 산업 11.3%, 서비스부문 29.4%
 - 반면, 남한은 2012년 서비스업 비중이 58.9%, 중공업 27.2% 등 산업구조가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 남한 및 북한의 실질 GDP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가격 기준.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IMF.

- 북한의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
 - 북한의 1차 산업 노동인구는 511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1.9%를 차지하며, 서비스업이 361만 명으로 29.6%, 제조업이 288만 명으로 23.7%를 차지
 -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1,718만 명으로 69.6%를 차지하며 제조업 410만 명으로 16.6%를 차지하나 1차 산업 종사자는 154만 명으로 6.3%에 불과

○ (연구의 목적) 남북한 양측은 모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통일한국의 잠재력 추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 위상을 살피고자 함

- 남북한 양측은 모두 새로운 성장 모멘텀 필요
 - 남한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계 경제 부진 속 경쟁 심화에 따르는 외수 부진, 가계부채 급증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의한 내수 기반 약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 북한도 19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별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 남북한 통합은 양측 모두에게 획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
 - 노동력 및 내수 시장 확대, 광물자원 활용도 증대, 산업 재배치에 따르는 시너지 극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력 제고, 한반도 경제권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에 의한 외부효과 극대화와 같은 기회를 제공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

(단위 : %)

구분	북한		남한	
	1990	2012	1970	201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6.4	37.4	30.7	2.8
제조업	31.8	21.9	18.5	31.1
경공업	6.2	6.7	11.2	3.9
중공업	25.6	15.2	7.4	27.2
SOC	13.7	11.3	6.4	7.9
서비스업	18.0	29.4	44.3	58.2

자료 : 한국은행.

주 : 북한은 명목GDP 대비 비중, 남한은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을 의미.

〈 남북한 산업별 취업자 비중 비교 〉

(단위: 만명, %)

구분	북한		남한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산업	1,218	100.0	2,468	100.0
1차 산업	511	41.9	154	6.3
제조업	288	23.7	410	16.6
경공업	132	10.9	78	3.1
중공업	156	12.8	333	13.5
SOC	58	1.8	185	7.5
서비스업	361	29.6	1,718	69.6

자료 : 통계청.

주 : 1) 북한 2008년, 남한 2012년 기준.

2) 북한은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를 산업에 맞게 재조정함.

2. 통일 한국 경제력 추정의 주요 가정

(1) 선행연구¹⁰¹⁾

- 남북 통합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골드만삭스와 통일부 등에서 발표한 문헌이 있음

101) 추정을 위한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도 매우 간단함.

- 골드만삭스(2009)¹⁰²⁾
 - 통일 경제의 장기 전망은 크게 전환 단계(2013~2027), 공고화 단계(2028~2037), 성숙 단계(2038~2050)의 3단계로 구성
 - 북한의 실질 GDP는 통일 초기 1~7%대로 성장하고, 이후에는 단계별로 2%씩 하락, 남한은 통일 이후 실질 GDP가 5년간 2% 증가하고 5~10년간 4% 성장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 성장률에 수렴
 - 남한의 실질GDP는 2010년 1,062조원에서 2050년 2,812조원으로 증가, 북한의 실질GDP는 2010년 28조원에서 2050년 215조원으로 증가
 -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13,000달러에서 2050년 86,000달러로 증가

- 통일부(2011)¹⁰³⁾
 - 통일 시나리오를 단기형(1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 중기형(2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 장기형(3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으로 구분
 - 통일 후 10년 간 남한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단기형(2020~2030년) 4.7%, 중기형(2030~2040년) 3.2%, 장기형(2040~2050년) 2.3%로 추정
 - 통일 후 10년 간 북한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단기형(2020~2030년) 18%, 중기형(2030~2040년) 16%, 장기형(2040~2050년) 11.5%로 추정

(2) 추정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가정

- ① (시나리오 1 :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남북한 통합으로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나, 동북아 주요 지역 등지로의 통합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

- 남한경제는 자본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투자 증대, 인구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효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증가. 단, 초기 통일비용 부담으로 단기적인 경제 성장세 약화를 경험

- 북한의 도시화, SOC, 산업기반 정비 등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 증가와 함께 관련 부문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내수 부문이 확대

102) A united korea? –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2009, Goldman Sachs).

103)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2011, 통일부).

- 특히, 북한 가계 부문의 내구재 수요 증가로 남한 내구재 산업 활성화 기대는 물론 남북한 통합으로 자원 및 에너지 안보 증대
- 남한의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노동 투입 규모 다소 상승
- 통일을 계기로 남한의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가 더욱 촉진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 단, 통합초기에는 통일비용 부담으로 일시적인 투자 감소 현상을 경험

〈 시나리오 1 :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의 부문별 주요 가정 〉

구분	남한	북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효과로 인구구조 개선 ■ 북한개발 수요 부문 중심 고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대규모 노동시장 유입 ■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극적인 전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개발 관련 자본재 부문 투자 증가 ■ 북한 가계 내구재 수요 증가 대응형 생산 및 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고용 증대로 소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소득 수준 상승으로 소비 급증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효과로 법제도 및 규제의 선진화 촉진 ■ 통일에 의한 규모의 경제 확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 운영체계 전반의 시장경제화 및 민주화에 의한 장기 고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 향유
외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미래 불안감 상존 ■ 대외 투자 유입 효과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미래 불안감 상존 ■ 대외 투자 및 노동 유입 효과 미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효과가 발생하면서 고도 성장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고수준으로의 노동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
-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효과가 발생하여 고도성장
 - 노동 투입 부문에서는 전체 인구의 대규모 노동 시장 유입이 촉진될 뿐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 매우 빠르게 상승

- 북한은 통일과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을 통해 도시화, SOC, 경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 등 경제 전반의 개혁이 동시 진행
 - 북한의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 추진, 시장경제 도입에 따르는 전환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의 상승이 시작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의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유지
 - 초기 유입된 대규모 노동력의 생산성이 남한 수준으로 상승
 - 산업구조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고도화가 진전
 -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 달성, 시장경제 안정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고수준에 도달
- 제한적인 외부효과
- 해외 투자 및 노동력 유입, 북한의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와 같은 역내 경제권 확대 효과 등은 다소 제한적
 -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제한적 유입
 - 북한의 중국, 러시아 등 접경지역 및 몽골 등지로부터의 노동 유입 효과도 미미한 수준
- ② (시나리오 2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한반도 단일 경제권 효과 및 북한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지역으로의 SOC 연결 등 한반도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통합한국의 시너지 극대화
- 남한은 북한의 장기 고성장 뿐 아니라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 등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 증대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상승

-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 형성
 - TSR, TCR, 아시아하이웨이 등의 교통·물류 분야 SOC 확장 등에 의해 유라시아까지 경제권 확장
 - 가스파이프라인 등 자원·에너지 분야 SOC연결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리스크 상쇄 등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노동력의 유입과 같은 외부효과 극대화
-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에 필요한 수요 부문별 투자와 고용이 증대하는 한편 소비도 동반 증가
- 통일한국 경제는 리스크 소멸로 북한 접경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접경지역을 둘러싼 동북아 역내 시장 확대로 수출 부문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
 - 남북한 통합으로 동북아 역내 물류 효율성 증대 등의 시너지도 발생
- 통합초기 통일비용 부담으로 일시적인 투자 감소 현상을 경험하나, 경제 리스크 해소와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 등에 따르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가로 이를 상쇄

〈 시나리오 2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의 부문별 주요 가정 〉

구분	남한	북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 파급영향에 따른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급팽창에 의한 현재 및 미래 노동 투입 규모 증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에 필요한 수요 부문별 투자 증대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관련 SOC 등 투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 고성장 지속에 의한 투자 여력 증대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고용 증대로 소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소득 수준 상승으로 소비 급증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효과 및 경제권 확대에 따른 법제도 및 규제의 선진화 촉진, 규모의 경제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화 및 민주화에 의한 장기 고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 향유 ■ 경제권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극대화
외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한국의 경제 리스크 소멸 ■ 해외직접투자 유입 가속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노동 유입 증가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시장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본 가정에는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의 주요 가정이 포함됨.

- 북한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통일한국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면서 빠른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 투입 증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유입 가속 등에 의해 경제 규모가 장기간 빠르게 확대
 - 북한 경제의 개방화 시장화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개발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등 역내 경제권 통합 효과가 극대화
 - 북한의 접경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접경지역의 산업기지화는 물론 주변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
 - 이로 인해, 동북아 주요국들 뿐 아니라 주변국들로부터의 투자와 노동 유입은 물론 시장 확대 효과 발생
 - 남북한 교통·물류·에너지망 연결 등에 따르는 자원 및 에너지 보안은 관련 SOC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유발
 - 북한의 산업구조도 경공업 중심의 완만한 산업 구조 전환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인 형태로 빠르게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 규모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발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에 따르는 외부효과 극대화
 - 통일 한국의 안정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북한 접경지역 개발 가속화, 동북아 및 동남아 한민족 경제권 형성 등으로 한반도 경제권이 확대
 - 유라시아 전체로 연결되는 교통·물류·에너지망의 구축 등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경제 통합 효과 발생
 - 유라시아 전체가 하나의 역내 경제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투자와 노동 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임
 - 북한은 남북한 통합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광물자원 등 부존자원 보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몽골과 유럽 등 대규모 배후 소비 시장 보유 등의 이점 뿐 아니라 남한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는 물론 노동 유입이 활발해질 것임

3. 통일 한국의 경제력 추정 결과

(1) 시나리오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추정

○ 경제성장률

- 남한의 성장률은 통합 초기에 통일비용 부담 증가로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은 정체기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약 1.0~1.5%p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0%까지 하락한 후 2021~30년 4.5%, 2031~40년 3.7%, 2041~50년 2.8%씩 성장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5%까지 하락한 후 2021~30년 5.0%, 2031~40년 4.2%, 2041~50년 3.3%씩 성장
- 북한은 풍부한 투자자금 유입과 산업 재건으로 인한 상승효과 등으로 고도성장이 상당기간 지속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10.1%, 2021~30년 9.7%, 2031~40년 7.9%, 2041~50년 6.2%씩 성장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14.8%, 2021~30년 12.1%, 2031~40년 9.8%, 2041~50년 8.2%씩 성장
- 통일 한국은 남한의 중장기적인 통합 시너지와 북한의 고도성장으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2%, 2021~30년 4.7%, 2031~40년 4.0%, 2041~50년 3.1%씩 성장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8%, 2021~30년 5.4%, 2031~40년 4.7%, 2041~50년 4.0%씩 성장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20년	3.0%	10.1%	3.2%	3.5%	14.8%	3.8%
2021~30년	4.5%	9.7%	4.7%	5.0%	12.1%	5.4%
2031~40년	3.7%	7.9%	4.0%	4.2%	9.8%	4.7%
2041~50년	2.8%	6.2%	3.1%	3.3%	8.2%	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기간평균.

○ 실질GDP

- 남한 경제는 초기 부진을 만회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질GDP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실질GDP는 2015년 1,469조원에서 2020년까지 성장이 다소 정체되었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 5,114조원을 기록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실질GDP는 2050년에 6,082조원까지 증가
- 북한의 실질GDP는 남한의 과거와 체제전환국의 사례처럼 급격하게 증가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실질GDP는 2015년 35조원에서 통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 549조원을 기록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실질GDP는 2050년에 1,276조원까지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호주에는 조금 못 미치나 멕시코보다 높은 규모로 성장 전망
- 통일 한국은 남한의 통합 시너지와 북한의 빠른 성장으로 거대 경제권 형성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실질GDP는 2015년 1,504조원에서 2050년 5,663조원으로 증가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실질GDP는 2015년 1,513조원에서 2050년 7,358조원으로 증가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실질GDP 전망 〉

(단위 : 조원)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년	1,469	35	1,504	1,476	36	1,513
2020년	1,722	56	1,778	1,773	72	1,845
2030년	2,679	141	2,819	2,892	227	3,119
2040년	3,862	301	4,163	4,376	581	4,957
2050년	5,114	549	5,663	6,082	1,276	7,35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2010년 가격 기준.

○ 1인당 실질 GDP

- 남한의 소득 수준은 초기에 증가속도가 지연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향상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27,227달러에서 2050년 94,792달러로 증가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27,360달러에서 2050년 112,734달러로 증가

- 세계 최빈국중 하나인 북한은 소득 수준이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50년 20,785달러로 증가하여 남한의 2012년 수준까지 증가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50년 48,353달러로 증가하여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

- 통일 한국의 소득 수준은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에 진입
 -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18,715달러에서 2050년 70,484달러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18,826달러에서 2050년 91,588달러로 증가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전망 〉

(단위 : 달러)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년	27,227	1,311	18,715	27,360	1,376	18,826
2020년	31,916	2,118	22,128	32,856	2,729	22,961
2030년	49,649	5,326	35,091	53,610	8,602	38,827
2040년	71,588	11,405	51,821	81,108	22,010	61,697
2050년	94,792	20,785	70,484	112,734	48,353	91,58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1) 인구는 남한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북한은 통계청의 북한 인구추계(1993~2055년)를 이용.

2) 2010년 가격 기준.

(2) 통일 한국 경제의 세계 위상

-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 보유
 - 통일 한국의 경제가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할 경우, 달러화 기준 실질GDP는 2050년에 5조 2,925억 달러를 기록
-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한이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수준에 도달할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세계 7위의 높은 경제력을 보유
 - 통일 한국의 경제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할 경우, 달러화 기준 실질GDP는 2050년에 6조 8,767억 달러를 기록

〈 2050년 세계 경제력 순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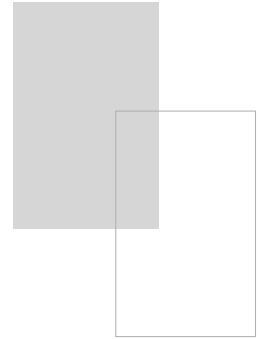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50년			
	국가	실질 GDP (십억 달러)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국가	실질 GDP (십억 달러)	국가	실질 GDP (십억 달러)
1	미국	15,094	중국	48,477	중국	48,477
2	중국	7,298	미국	37,998	미국	37,998
3	일본	5,867	인도	26,895	인도	26,895
4	독일	3,571	브라질	8,950	브라질	8,950
5	프랑스	2,773	일본	8,065	일본	8,065
6	브라질	2,477	러시아	7,115	러시아	7,115
7	영국	2,432	멕시코	6,706	통일 한국	6,877
8	이탈리아	2,195	인도네시아	5,947	멕시코	6,706
9	러시아	1,858	독일	5,822	인도네시아	5,947
10	인도	1,848	프랑스	5,714	독일	5,822
11	캐나다	1,736	영국	5,598	프랑스	5,714
12	스페인	1,491	통일 한국	5,293	영국	5,598
13	호주	1,372	터키	4,486	터키	4,486
14	멕시코	1,155	이탈리아	3,867	이탈리아	3,867
15	남한	1,116	스페인	3,612	스페인	3,612
16	인도네시아	847	캐나다	3,549	캐나다	3,549
17	터키	773	나이지리아	3,451	나이지리아	3,451
18	사우디 아라비아	577	사우디 아라비아	2,977	사우디 아라비아	2,977
19	폴란드	514	호주	2,603	호주	2,603
20	아르헨티나	446	아르헨티나	2,333	아르헨티나	2,333

자료 : 2011년 국가별 GDP는 World Bank, 2050년 국가별 GDP 전망은 PWC¹⁰⁴⁾ 자료 인용, 2050년 통일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임.

104) World in 2050—The BRICs and beyond : prospe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2013. 1, PWC).

4. 시사점

-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전략적인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등 다양한 통일 준비 작업이 필요
 -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자금을 받거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
 -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및 통일비용 절감 도모
 -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을 고려한 남북 경협 추진
 -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으로 북한 변화 분위기 유도
 -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필요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통일은 북한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적 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제고
 - 통일이 주변국에 주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하고 통일 우호적인 국제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



통일한국의 유망 산업¹⁰⁵⁾

1.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 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
 - 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경제 국가로 변신
 -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사실상의 섬나라 처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육상 교역이 가능한 대륙 경제 국가로 변신
 - 생산 및 소비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산업의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고 성장의 여유를 확보하여 동북아 경제권 동반 성장을 주도

105)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2014. 5. 12 자료임.

②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 확보

- 국내 인구가 단숨에 8,000만명에 근접하면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인구 강국으로 부상
- 나아가 인접해 있는 동북 3성, 1억 1,000만 인구를 포괄하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제2의 고속성장 달성이 가능

③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 토지, 지하자원, 산림, 해양, 수자원 등 다양한 국가 자원의 증가로 경제성장의 토대가 강화
- 특히 첨단 산업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하락하고 자원 자주개발률이 향상되어 국가적 차원의 부가가치 생산이 증가

④ 첨단 기술과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

-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등 남북한의 생산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어 본격적인 시너지가 창출
- 선진 기술과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의 결합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동남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 지위를 확보

⑤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 연장

-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들이 수명주기를 거슬러 올라가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됨
-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되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기업들의 유턴 현상이 확산

⑥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Quantum Leap)적 성장

-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성장경로가 아니라 단숨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특별한 성장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
- 국가 주도로 질서 있는 계획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자본의 축적 과정이 생략된 채 대규모 자본이 즉시 투입 가능하여 예산 제약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고속 성장기에 진입
- 전 산업분야에서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 21세기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적 도약이 가능하여 단숨에 고효율 친환경 산업구조를 형성

⑦ 국방예산 절감 및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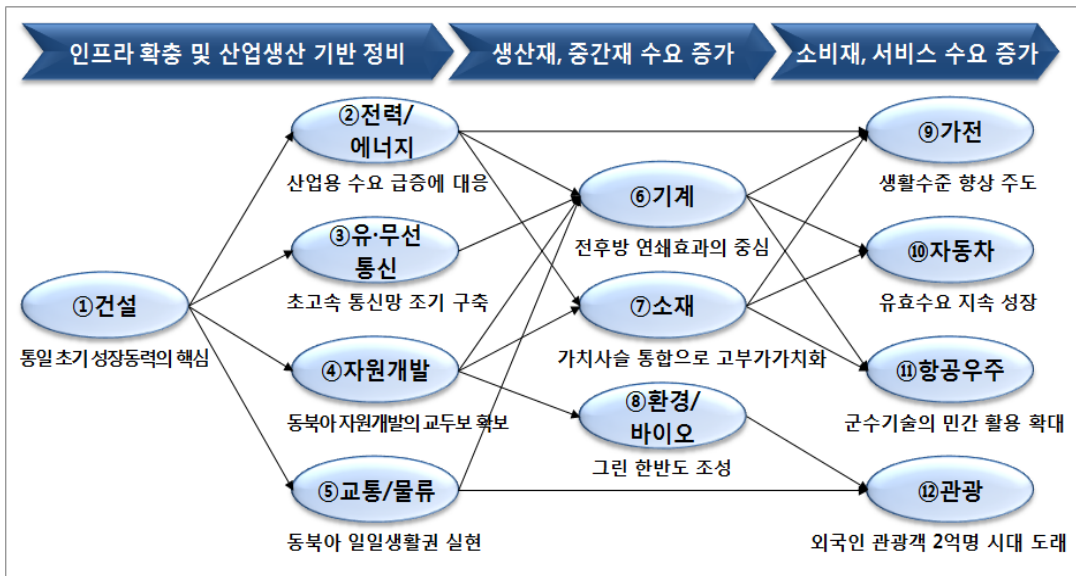
- 과도한 국방비 지출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비군사적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증가
- 군수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물이 민간 부문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면서 첨단 산업의 고속 성장을 추동

2.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 통일 이후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
- (인프라 확충 및 산업생산 기반 정비) 정부 주도의 계획개발 초기 단계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
 - (건설) 교통, 통신, 전력 등 SOC가 확충되고 도시화 및 산업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건설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전망

- (전력/에너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현대화 및 신규 발전설비 구축이 빠르게 진행
- (유·무선 통신)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이라는 이 점을 살려 최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단기간 내 가능
- (자원개발)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
- (교통/물류) 도로 정비와 함께 철도 현대화 및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도 1일 생활권으로 연결

〈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및 12대 유망 산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생산재 수요 증가) 인프라 및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 이후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며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
- (기계) 건설기계, 발전설비 등 전방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가전 등 후방산업 성장과 함께 '산업의 어머니'인 기계 산업이 빠르게 발전
- (소재) 철강, 희소금속, 희토류 등 광물자원에 자본과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쌀'인 소재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
- (환경/바이오) 친환경 청정기술을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업·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

- (소비재, 서비스 수요 증가) 고용 증가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되어 내수 소비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
 - (가전)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의 생산 및 판매가 빠르게 증가
 - (자동차) 북한 지역 내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3성을 타겟으로 하는 생산기지 구축도 가능
 - (항공우주)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이 빠르게 발전
 - (관광) 통일 후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 시장 확대에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 구주 관광객까지로 급격히 확대

-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 동반 성장, 서비스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12대 유망 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성장의 기회가 확산
 - 한반도 북부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경제권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며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변화
 -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및 소득수준 향상,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전문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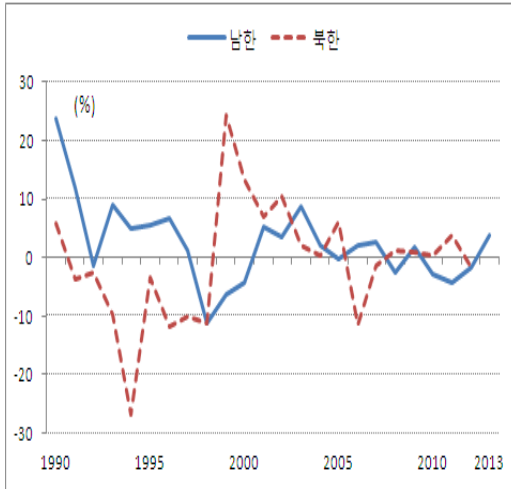
3.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① 건설: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

- (현황) 남한은 고속성장기를 지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은 만성화된 경제침체로 건설업 성장이 제약
 - 남북한 건설업은 성장세가 약화되며 최근 침체를 나타내고 있음
 - 남한의 건설업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침체되며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2013년 플러스로 전환되며 소폭 회복
 - 북한의 건설업은 2000~2005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성장세가 약화되며 침체되어 있음
 - 북한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8%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7.9%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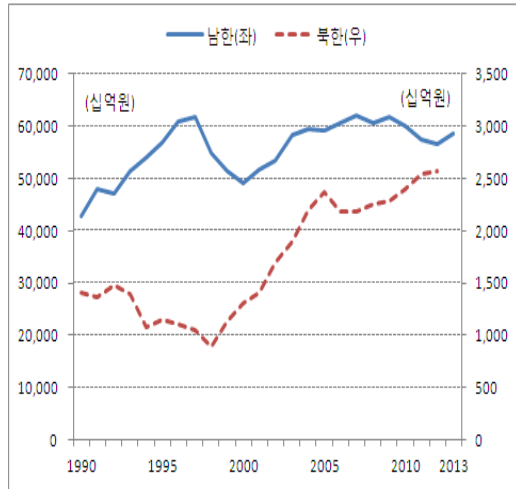
- 남한의 건설업 규모는 북한보다 22배 크지만 성장이 한계 수준에 도달
 - 남한의 건설업 규모는 2012년 기준 56조 5,577억 원으로 북한 2조 5,794억 원보다 22배 크게 나타남
 - 2012년 북한의 SOC·건설 부문이 전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이고 남한은 7.9%를 나타냄

〈 남북한 건설업 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실질기준.

〈 남북한 건설업 생산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부가가치기준, 실질기준.

- (전망) 계획개발 초기 단계부터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은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

-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구축, 교통·전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건설 사업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남북한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
 - 독일 통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철도, 수로,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건설업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며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임¹⁰⁶⁾

106) 구동독 지역의 주택 및 비주택 등 건물의 건축허가 건수의 증감률 추이를 보면 통일 직후인 1992년에 전년 대비 383.7%, 1993년에 211.1% 증가하였고, 건축허가 건수도 1991년 5,484건에서 1996년에 18만 6,155건으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통일 이전에는 높았으나 통일 이후에는 1995년에는 건설에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한 경제 및 건설 시장에 관한 기초 연구', 2012).

- 통일 초기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SOC·건설투자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타 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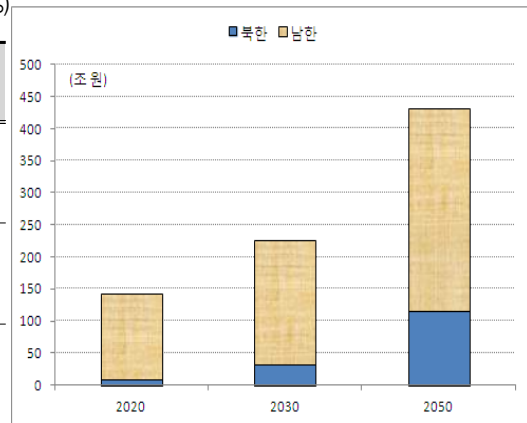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건설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계획개발 단계(2015~2020) 및 고속성장 단계(2021~2030)에 북한 지역의 건설업 성장률은 10.2%,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후 안정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한 지역의 건설업 성장률은 4.6%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단위: %)

	2015~2020년	2021~2030년	2031~2050년
통일 한국	2.5	3.5	2.3
남한	2.3	3.0	1.5
북한	10.2	12.0	4.6

〈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규모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2010년 가격 기준.

② 전력/에너지 : 산업용 수요 급증에 대응

○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지만 이후 화력과 원자력발전을 크게 늘린 남한에 추월당함

- 남한이 1980년대 이후 화력과 원자력 발전설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으며, 2012년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 규모는 남한의 1/11 수준
- 남한이 화력발전 설비를 1965년 55만kW에서 2012년 5,231만kW로 94배 늘릴 동안 북한은 28만kW에서 296만kW로 10.5배 증설하는 데 그침

- 또한 남한은 2,072만kW 규모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확보했지만 북한은 상용 원전을 확보하는 데 실패
- 이에 따라 남한의 발전설비는 1965년 77만kW에서 2012년 8,181만kW로 증가한 데 비해 북한의 발전설비는 같은 기간 239만kW에서 722만kW로 증가
- 북한의 발전설비는 노후화 및 부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효율성이 하락하여 실제 발전량은 남한의 1/25 수준으로 추정
- 북한의 발전량은 1970년 140억kWh로 남한(92억kWh)의 1.5배 이상이었지만 2012년에는 215억 kWh로 남한(5,096억kWh)의 4.2%수준
- 2012년 북한의 발전설비 규모가 남한의 8.8% 수준인데 비해 전력생산량이 4.2%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은 설비운영에서 커다란 차질이 발생했음을 시사

〈 남북한 발전설비 규모 비교 〉

(단위: 천 kW)

	남한					북한			
	수력	화력	원자력	기타	합계	수력	화력	원자력	합계
1965	215	554	-	-	769	2,105	280	-	2,385
1970	329	2,179	-	-	2,508	2,550	1,000	-	3,550
1975	621	4,099	-	-	4,720	2,730	1,800	-	4,530
1980	1,157	7,647	587	-	9,391	2,910	2,100	-	5,010
1990	2,340	11,065	7,616	-	21,021	4,292	2,850	-	7,142
2000	3,149	31,586	13,716	-	48,451	4,592	2,960	-	7,552
2010	5,525	52,837	17,716	-	76,078	3,958	3,010	-	6,968
2012	6,446	52,306	20,716	2,338	81,806	4,260	2,960	-	7,220

자료 : (남)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북)통계청.

-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설비 확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
-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경문제 우려가 높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보다 최신 청정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적 화력발전 설비 구축이 유리
- 수력발전은 추가적인 댐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의 설비 개선 및 부분적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원전 건설은 환경, 안보 측면의 우려가 존재

-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석탄 자원을 활용한 화력발전을 위주로 전력설비 확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단기적으로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개보수를 통해 효율성이 개선되지만 해도 전력량은 50%이상 증가
 - 북한 화력발전 설비의 효율성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발전량은 5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2050년까지 북한 지역의 발전설비는 2012년 대비 8배, 발전량은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남한이 화력발전설비를 가장 많이 늘린 1990~2000년 기간의 증가율인 300% 수준으로 북한의 화력발전설비가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증가한다고 가정
 - 고속성장 단계(2021~2030)에 북한의 발전설비는 1,314만kW, 발전량은 716억 kWh 수준에 도달
 - 2050년에는 발전설비 5,848만kW, 발전량 3,637억kWh로 2015년 대비 각각 8 배와 11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통일한국의 전력량과 발전설비 추정 〉

	계획개발 단계 (2015~ 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발전설비 (천 kW)	발전량 (억 kWh)	발전설비 (천 kW)	발전량 (억 kWh)	발전설비 (천 kW)	발전량 (억 kWh)
남한	97,600	6,100	121,920	7,620	130,560	8,160
북한	7,220	328	13,140	716	58,482	3,637
전체	104,820	6,428	135,060	8,336	189,042	11,79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남측 전망은 2014년 1월에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에 의거).

③ 유·무선통신: 초고속 통신망 조기 구축

- (현황) 남한은 높은 수준의 유·무선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북한은 2008년 이후 이동전화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짐
 - 남한의 이동전화 누적 가입자 수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5,400만 명을 넘어서며 포화상태에 직면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누적 가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3.4%로 나타남
- 북한은 2008년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이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
 - 오라스콤은 전체 지분의 75%, 북한 체신성이 전체 지분의 25%를 투자하여 고려링크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
 - 이에 따라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8년 1,694명에서 2013년 약 200만 명으로 5년 만에 1,000배 이상 증가
- 한편, 유선전화의 경우 2011년 기준 남한의 가입자 수는 2,846만명, 북한의 가입자 수는 회선 기준으로 113만 회선으로 남한의 4.1% 수준
 - 북한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00년 50만 회선에서 2010년 118만 회선으로 증가한 후 성장이 정체

〈 남북한 이동전화 누적가입자 수 비교 〉

(단위: 명)

	남한	북한
2008	45,606,000	1,694
2009	47,944,000	91,704
2010	50,767,000	431,919
2011	52,507,000	900,000
2012	53,625,000	1,500,000
2013	54,009,000	2,000,000

자료 : (남) e-나라지표, (북) 오라스콤社 실적보고서(2008~2013).

주 : 2013년은 5월 기준.

- (전망)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이라는 이점을 살려 최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이 단기간 내에 구축
- 유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으로 통신 인프라가 점프
 - 북한은 경제적인 후발주자로서 최신기술에 의거한 통신수단의 도입에 유리

- 한국의 세계최고 경쟁력의 무선통신 인프라가 이식될 경우 짧은 기간에 전 주민에 무선전화 보급
-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통일 후 6~7년 내에 전 주민의 휴대전화 소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북한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2000년대 들어와 폭발적인 무선전화가입자 수 증가를 경험
 - ※ 북한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코트디부아르,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잠비아의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각각 31.1배, 173.5배, 32.9배, 178배, 76.3배 증가
-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 고속성장 단계, 안정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점차 하향 안정화
 - 북한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에 12.5%, 고속성장 단계에 8.3%, 안정성장 단계에 7.2%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전망
 -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 3.8%에서 고속성장 단계 3.4%, 안정성장 단계 2.9%를 기록할 전망

〈 통일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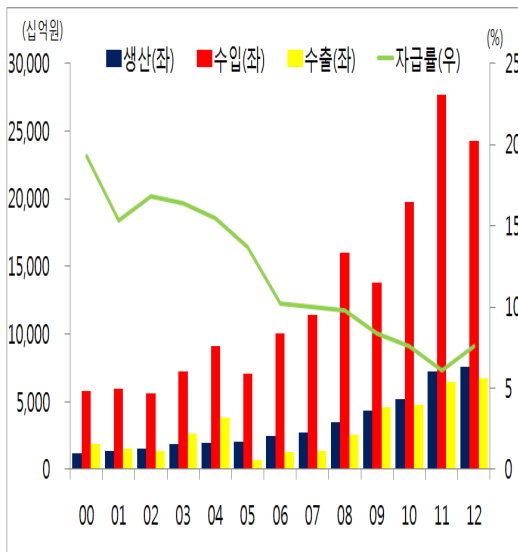
	계획개발 단계 (2015~ 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통일 한국	3.8%	3.4%	2.9%
남한	3.4%	3.0%	2.8%
북한	12.5%	8.3%	7.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 ④ 자원개발 : 동북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 (현황)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유용광물 200여종)되어 있으며, 남한은 광물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음
 - 북한 자원 개발 : 매장량 기준 북한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는 마그네사이트 3위, 흑연 4위, 금 6위, 아연 7위이나,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개발 정체

- (개발 유망 광종) 북한 매장량이 풍부하고, 국내 자급도가 낮으며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으로는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이 있음¹⁰⁷⁾
 - (생산 정체) 북한 신규 광산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전력 부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정체
- 남한의 높은 수입의존도 : 2012년 남한의 광산물 자급률은 7.6%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자원시장의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남한의 광산물 수급은 2000년 이후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음

〈 남한의 광물 수급 동향 〉



자료 : 지식경제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 : 경상가격 기준.

〈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량 추이 〉

(단위: 톤)

	1990	2000	2007
금	5	2	2
은	50	40	20
동	15,000	13,000	12,000
철광석	8,430,000	3,793,000	5,130,000
텅스텐	1,000	500	600
마그네사이트	1,500,000	1,000,000	1,000,000
흑연	35,000	30,000	30,000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 (전망)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107) 방경진, “북한 광물자원 현황 및 개발 실태”, 『북한 광물자원산업의 진출 전략과 전망 포럼』, 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 남한의 광물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북한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비축기지 역할 가능
 - 국제 광물 가격 상승 등 공급 불안에도 광물 도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남한의 수입대체효과 :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 조달 시 연간 약 124억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
 - 특히,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내수 규모는 231.6억 달러에 달하지만, 자급률이 1%에 불과한데, 북한의 철 보유 규모는 8,775억 달러에 달해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15.8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 기대¹⁰⁸⁾
- 첨단산업 등 관련 산업 동반 성장 : 북한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희유금속의 개발·가공과 연계한 산업 성장도 기대
 - 광산 개발 사업 추진시 장비산업, 토목건설 및 운송산업 등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
- 자원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 한반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산업을 추진하고,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개발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비교 및 가용 연한 〉

구분	남한			북한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 조달 시 가용 연한
	보유규모 (억 달러)	내수규모 (억 달러)	자급률 (%)	보유규모 (억 달러)	
금	18	14.1	4	857	122년
철	7	231.6	1	8,775	76년
마그네사이트	-	0.8	0	24,048	60,120년
인상흑연	2	0.2	0	30	300년
인회석	-	1.5	0	270	360년
합계	27	248.2		33,980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보유 규모 및 내수 규모는 2011년 수입단가 기준.

108) 북한 철광석의 품질이 다소 낮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철광석 국제가격의 폭등 등 가격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은 큰 의미가 있음.

⑤ 교통/물류: 동북아 일일생활권 실현

○ (현황)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 육상물류가 완전히 봉쇄됨에 따라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본격 물류국가로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음

- 남한의 육상물류는 국내 여객 수송의 97.7%, 국내 화물 운송의 86.6%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제 육상물류는 전무한 실정
 - 특히, 제1의 교역 상대국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의 육상 교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남한의 물류산업은 70~80년대의 고성장기를 지난 이후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하락세가 지속
 - 이에 따라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까지 하락
- 북한은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對중국 교역은 단둥을 통한 교역이 70%를 차지해 육상 물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
 - 북한은 전력이 풍부하던 시절에 철도의 전철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남한에 비해 높은 전철화율을 조기에 달성
 - 북한의 철도는 수송분담률(86%), 총연장(5,299km), 전철화율(80%)이 모두 남한보다 높지만 대부분 단선이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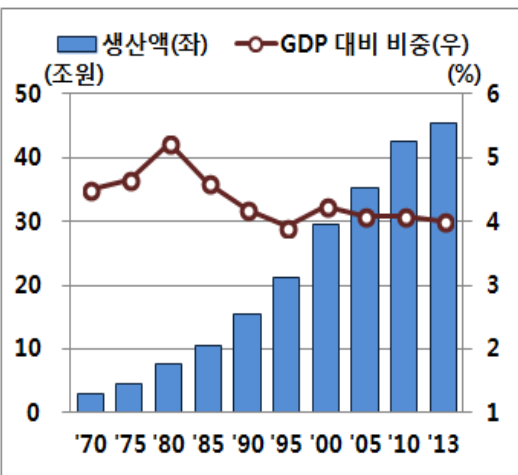
〈 남한의 수송수단별 물류 분담률 〉

(단위: %)

구분	국내		국제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육상	97.7	86.6	0.0	0.0
해운	0.2	13.3	5.9	99.7
항공	2.0	0.0	94.1	0.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국토교통부(2012).
주 : 여객은 인-km, 화물은 무게(톤) 기준.

〈 남한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



자료 : 통계청.
주 : 실질 GDP 대비 운수 및 보관업 비중.

- (전망) 고속철도가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유럽 철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동쪽 관문을 지키는 물류중심국가로 부상
 - 부산~서울~신의주를 잇는 고속철도와 북경~선양~단둥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뿐만 중국 동북지방까지 1일 생활권으로 연결
 -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5시간대 연결로 한반도 1일 생활권 실현되고, 서울에서 금강산까지는 1시간대 이동이 가능
 - 중국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북경~선양~단둥 고속철도와 연결 되면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동북지방을 아우르는 1일 생활권이 실현
 - 장기적으로 유럽철도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 종단철도(TKR)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
 - 동해선은 TSR과 연결되고 경의선은 TCR과 연결되어 유라시아 차원의 통합적 물류망 구축 및 경제통합을 촉진
 - 표준궤(한반도)와 광궤(대륙)를 연결하는 궤간변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어 상용화 수준에 도달
 -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10%에 육박하며 국가 중추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물류산업의 생산액은 2015년 61조원에서 2050년 677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4.0%에서 2050년 9.2%까지 상승
 - 특히, 지금까지 전혀 성장하지 못했던 육상물류가 빠르게 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5.5%에 달할 전망

〈 통일 이후 물류 산업 전망 〉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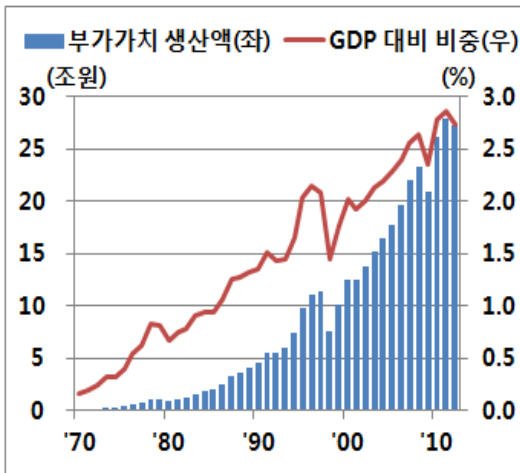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전체 물류산업 생산액	61	89	175	344	677
(GDP 대비 비중)	(4.0%)	(4.8%)	(5.6%)	(6.9%)	(9.2%)
육상물류 생산액	24	36	87	206	474
(GDP 대비 비중)	(1.6%)	(1.9%)	(2.8%)	(4.2%)	(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⑥ 기계: 전후방 연쇄효과의 중심

- (현황) 남한은 세계 6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북한은 국내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생산체계를 구축
 - 남한의 기계산업은 1990년대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및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
 - 기계산업은 모든 산업의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 산업 간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고 장기간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임
 - 광의의 기계산업은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제품을 포괄하며, 협의의 기계산업은 일반기계산업(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의미
 - 국내 일반기계 수요는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자, 일반기계 산업자체 등 4대 산업이 85% 이상을 차지
 - 남한의 일반기계산업은 1970년대에 연평균 24.7%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 17.6%, 1990년대 10.6%, 2000년대 7.7%로 성장률이 하락
 - 북한은 기계공업을 중공업의 핵심으로 중점 육성해왔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공작기계 산업은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발전된 산업으로 평가
 - 기계공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공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북한은 무기, 대형기계류 및 설비생산 부문에서 자립적 기술기반을 보유
 - 2000년대부터 CNC 공작기계에 의한 생산체계 도입을 적극 추진 중

〈 남한의 일반기계 산업 성장 추이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북한의 주요 공작기계공장 현황 〉

공장명	연간 생산능력(대)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15,000
구성공작기계공장	10,000
만경대공작기계공장	3,000
청진공작기계공장	2,000
평양공작기계공장	1,000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 (전망) 통일 이후 전 산업에서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산업은 고성장기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
 - (내수) 국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로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건설기계) 계획개발 초기 단계부터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가 빠르게 증가
 - (공작기계) 제조업 설비투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공작기계산업은 산업 전반의 경기 상승에 따라 수요가 확대
 - (수송기계 중간수요)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계산업의 생산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동 부문의 중간수요가 증가
 - (수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한편, 가격경쟁력 우위 요소가 결합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남한의 기계산업 수출은 범용 기계류 중심에서 NC선반 및 머시닝센터 등 고기능 기계류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가 지속
 - 최근 선진국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좁혀져 왔으나, 통일 이후 노동력, 원자재 등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일반기계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050년 287조원, GDP 대비 비중은 3.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 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하고 이후 2050년까지 성장률은 단계적으로 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통일 이후 일반기계 산업의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부가가치 생산액	34	50	98	176	287
GDP 대비 비중	2.2	2.7	3.2	3.6	3.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주 : 2010년 가격 기준 실질 생산액.

⑦ 소재 : 가치사슬 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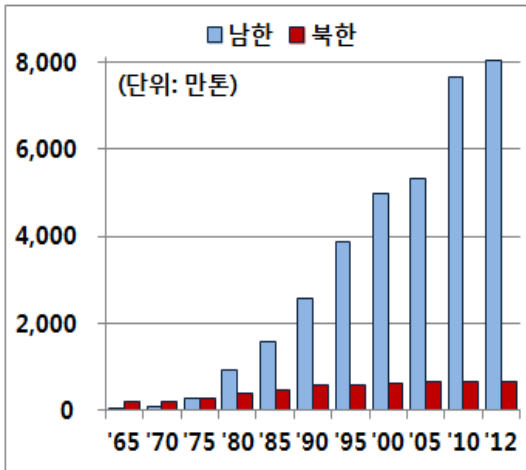
○ (현황) 남한은 세계 6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북한은 국내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생산체계를 구축

- 남한의 소재 산업은 경제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으며 최근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위협에 직면
 - 소재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능력이 평준화됨에 따라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남한의 소재 수출액은 2000년 세계 28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에서 2011년 931억 달러, 세계 6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9%에서 2011년 4.2%로 약 0.3%p 상승
 - 한편, 중국의 소재 수출액은 2000년 27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7%로 급격히 증가해 2011년 2,176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
- 북한은 철광석, 비철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속공업 및 석탄화학공업 생산체계를 구축해왔음
 - 북한에는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중석, 니켈, 코발트, 크롬 등의 합금용 광물과 마그네사이트, 규소 등의 광물자원 매장량도 풍부
 -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생산능력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 남한의 소재 수출액 및 점유율 변화 〉

2000년		2011년	
(단위: 억달러)			
세계수출시장 7,317억		세계수출시장 2조2,265억	
1위 미국	958억(13.1%)	1위 독일	2,340억(10.5%)
2위 독일	852억(11.6%)	2위 중국	2,176억(9.8%)
3위 일본	590억(8.1%)	3위 미국	2,160억(9.7%)
4위 프랑스	417억(5.7%)	4위 일본	1,444억(6.5%)
5위 벨기에	390억(5.3%)	5위 벨기에	1,159억(5.2%)
⋮		⋮	
8위 한국	287억(3.9%)	6위 한국	931억(4.2%)
9위 중국	274억(3.7%)	⋮	

〈 남북 철강공업 생산능력 〉



자료 : UNcomtrade 자료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 (남)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북)통계청.

○ (전망)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으로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소재 수출 대국으로 도약

- 가격경쟁력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재 품목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향상됨에 따라 소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
 - 현재 남한의 소재 산업은 기술경쟁력 중심의 독일·일본과 달리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격경쟁력 우위 유형의 소재 수출은 2011년 기준 전체 소재 수출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가격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전망
- 희유금속, 희토류 등을 원료로 하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술경쟁력도 높은 수준에 도달
 - 중국이 급속도로 세계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 산업은 국제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국내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일 이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통일 후 우리나라는 2050년 세계 4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도약할 전망
 - 세계 소재 수출시장 및 국내 소재 생산액은 2020년까지 10%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성장률이 7%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가정
 - 이 경우 통일 한국의 소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넘어서며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권 진입이 가능

〈 통일 이후 소재산업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액	351	566	1,340	2,892	5,690
내 수	215	346	770	1,415	1,859
수 출	136	220	569	1,477	3,8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⑧ 환경/바이오: 그린 한반도 조성

- (현황) 남한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지만 친환경 바이오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북한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으나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존재
 - 남한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농림어업의 비중이 2.8%에 불과하나 바이오(BT) 산업은 고성장을 지속
 - 남한의 식량 자급률은 2012년 23.6%까지 하락하였으며, 쌀을 제외한 기타 식량작물은 자급률이 5% 미만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최근에는 FTA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쌀 자급률은 2005년 102.0%에서 2012년 86.1%까지 하락¹⁰⁹⁾
 - 한편, 남한의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6.4조원으로 추정되며 5년간 연평균 15.0%의 고성장을 지속
 - 북한은 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농업 생산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
 - 북한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 달하며, 농가인구는 약 857만명으로 추정
 - 최근 북한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유기농법을 통해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

〈 남북한 농림수산업 현황 비교 〉

	남한	북한
농림어업 비중 (%)	2.8% (2012년)	23.4% (2012년)
농가인구 (만명)	291.2 (2012년)	857.3 (2008년)
인구대비 비중(%)	5.8 (2012년)	36.8 (2008년)
식량작물 재배면적(천ha)	1,052 (2012년)	1,614 (2009년)
국토대비 비중(%)	10.5 (2012년)	13.4 (2009년)
원목생산량(천m ³)	4,506 (2012년)	7,547 (2012년)
수산물 어획량 (천M/T)	3,183 (2012년)	737 (2012년)

자료 : 한국은행, 농촌진흥청, 통계청.

주 : 농림어업 비중은 명목 GDP 대비 비중(북) 및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남)을 의미.

10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바이오산업협회 등의 통계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전망)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
 - 통일 이후 한반도의 대기 및 수질 개선, 산림복원, 비무장지대(DMZ) 활용 협력 등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 산림복원, 수력발전 등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
 -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청정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녹색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조성
 -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환경 및 식량안보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북한 지역의 농업생산력 향상, 친환경 유기농법 확대, 전국적 차원의 쌀 수급구조 재편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 및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
 - 남북한 농림어업과 생명공학 기술의 상호보완적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생명자원,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
 - 농업 관련 '그린 바이오', 의약 관련 '레드 바이오', 산업 관련 '화이트 바이오'는 바이오 산업의 3대 축을 형성
 - 특히, 농업유전자원 확보, 우수품종 육성, 소재식물 대량생산, 기능성 신물질 추출 등을 위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되는 그린 바이오 부문이 유망
 -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15년 약 10조원 수준에서 2050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열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통일 이후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액	9.9	14.8	30.8	60.0	109.4
내 수	5.6	8.4	17.4	33.9	61.8
수 출	4.3	6.4	13.3	26.1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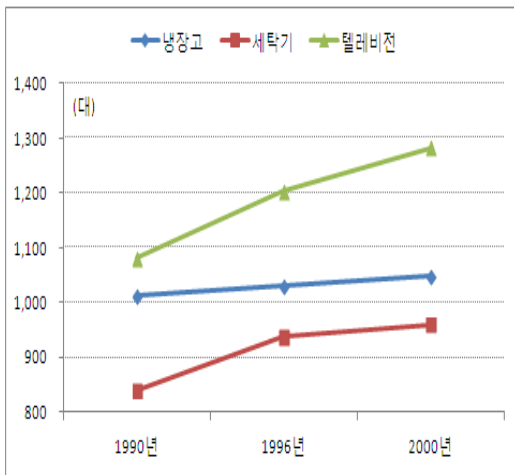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⑨ 가전: 생활수준 향상 주도

○ (현황) 남한의 가전제품은 생활 및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본 생활을 위한 가전제품 보급에 주력

- (남한) 1980~1990년대 가전제품 보유가 급격히 증가하며 가전제품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해외 생산이 확대됨
 -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보유가 1980~1990년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최근에는 가전제품의 고급화와 대형화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정되어 있는 내수 시장으로 인해서 가전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또한 해외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 에너지, 원자재의 부족으로 가전제품 생산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며 중국산 제품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2000대 후반 보급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
 - 음향 및 영상기기 산업 역시 낙후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VCR, 디지털 카메라 등의 유통이 확대

〈 남한의 주요 가전제품 보급 추이 〉



자료 :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주 : 1,000가구(2인 이상)당 가구내구재 보유수량.

〈 북한의 주요 가전제품 생산 공장 〉

	공장명	주요 생산 제품
평양	평양소형전동기 공장	세탁기, 냉장고용 전동기
	새날전기공장	전동기, 선풍기, 분쇄기
함경남도	함흥전기기구 공장	전기개폐기, 전기다리미, 전열기구, 등
함경북도	주을전기공장	전기다리미, 차단기, 배전함 등

자료 : 정책금융공사(2010) '북한의 산업'.

- (전망)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남북한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 분업으로 가전제품 생산이 확대
 - 통일 이후 남북한 산업 발전은 효율적인 생산 구조의 재배치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고 내수 시장 확대로 인해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
 - 북한은 보급형 위주의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남한은 고급품 위주의 제품 생산으로 차별화된 생산 분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북한 주민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가전제품 생산이 급증할 전망
 - 통일이후 북한의 가전제품 보급률이 급등하면서 보급형 가전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점차 고급화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통합 후에 북한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남·북한 생산 분업 시스템 확립으로 생산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초기 계획개발 단계(2015~ 2020)의 가전제품 생산은 18%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점차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 통일 한국 가전제품 생산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단위 : %)

	계획개발 단계 (2015~ 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통일 한국	7.3	5.6	4.3
남한	5.2	4.7	3.2
북한	18.0	11.5	5.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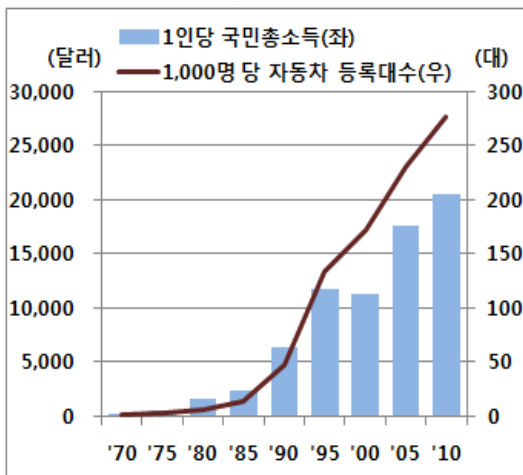
주: 각 단계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⑩ 자동차: 유효수요 지속 성장

○ (현황) 남한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하였으며, 북한은 최근 남북합작기업인 평화자동차를 통해 완성차 조립, 생산 기술을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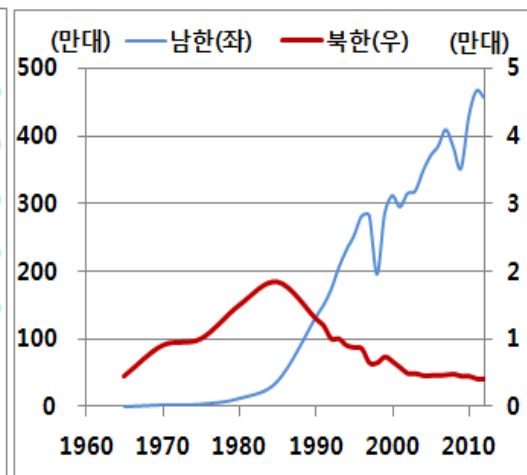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은 생산 유발 및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1970년대 이후 남한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
 - 자동차는 수많은 자재와 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중간투입률이 높고 철강, 기계, 전자, 소재 등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
 - 1962년 '자동차공업 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산업의 기반 형성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급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300대를 돌파
 - 2013년 자동차 생산량은 452만대로 세계 5위권이며,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0.6%, 제조업 부가가치의 10.3%, 전산업 수출액의 10.2%를 차지
- 북한은 산업용 화물차 생산에 치중해왔으나 최근 승용차, SUV, 승합차 등을 조립,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1965년 4,400대에서 1985년 18,500대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3년 4,000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2008년 이후 평화자동차에서는 휘파람(소형 승용차), 준마(대형 승용차), 뼈꾸기(SUV), 삼천리(승합차) 등의 모델을 조립, 생산 중

〈 남한의 자동차 보급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주: 국민총소득은 명목 기준.

〈 남북한 자동차 생산량 추이 〉



자료: (남)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북)통계청.

- (전망) 통일 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1,000만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2,500만 명의 내수시장 및 1억 1,000만 명의 동북3성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생산 거점을 구축
 - 1인당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내수시장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동북 3성은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 투자로 전체 물류량 중 고속도로 비중이 80% 이상까지 증대되어 향후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남한의 내수시장의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나 북한 내수시장 및 인접 수출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
 - 남한 내 국산차 판매량은 연평균 1% 증가, 북한 내 국산차 판매량은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 간 남한의 성장경로를 따른다고 가정(인구 차이 고려)
 - 수출은 중국의 성장률 및 국산차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연평균 3% 성장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연평균 2% 성장한다고 가정
 -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500만대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거의 1,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0년대 2.9%, 2030년대 1.8%, 2040년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자동차 산업 성장 전망 〉

(단위: 만 대)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470	532	709	832	974
내 수	150	161	211	225	233
남한	148	156	172	172	172
북한	2	5	39	53	61
수 출	320	371	499	608	74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⑪ 항공우주: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확대

○ (현황) 남한은 위성활용, 지상장비, 위성체 분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은 군수산업 및 발사체 기술이 발전

- 남한은 우주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수립, 추진 중
 - 우주 분야에 참여한 산업체 매출, 연구기관 예산, 대학 연구비를 모두 합산한 우주 분야 활동금액은 1조 4,408억원 규모
 -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2001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3,475억원으로 세계 20위 수준¹¹⁰⁾
 -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및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 성공에 힘입어 우주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고조
- 북한은 군수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기술의 자체 개발을 추진
 - 2012년 12월에 발사된 우주발사체 ‘은하3호’는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남한의 우주산업 규모 〉

구분		금액(억원)	비중(%)
우주기기 제작	위성체	1,984	13.9
	발사체	787	5.5
	지상장비	2,076	14.4
우주활용	위성활용	9,376	65.1
	과학연구	185	1.3
합계		14,408	100.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 : 2012년 기준.

〈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 현황 〉

명칭	발사일시	중량(kg)
백두산호 (대포동1호)	1998년 8월	33,406
은하2호 (대포동2호)	2009년 4월	79,189
은하3호(1차)	2012년 4월	90,000
은하3호(2차)	2012년 12월	90,000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110)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추경 예산 반영금액).

- (전망)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이 빠르게 발전
 - 항공우주 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로 국가적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주도
 - 세계 우주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일 한국은 2020년 달탐사선 및 달궤도선 발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
 - 군수산업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spill-over)되면서 항공우주 산업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비생산적인 분야에 소모되었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이 민간 부문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면서 산업의 고속 성장을 추동
 - 남한의 위성제작 및 우주활용 기술과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며 통일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2050년 약 24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 우주기기 제작 부문의 활동금액은 2015년 0.6조원에서 2050년 9.1조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할 전망¹¹¹⁾
 - 우주 활용 부문의 활동 금액은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14.9조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우주산업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우주기기 제작 (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	0.6	0.9	2.1	4.6	9.1
우주 활용 (위성활용, 과학연구)	1.3	2.0	4.2	8.3	14.9
합 계	1.8	2.9	6.4	12.9	2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주 : 산업체 매출, 연구기관 예산, 대학 연구비 등 합산.

111) 우주 분야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매출, 연구기관의 예산, 대학의 연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

⑫ 관광: 외국인 관광객 2억명 시대 도래

○ (현황) 최근 남북한 전체 관광객수는 1,140명, 관광산업 240억 달러로 추정

- 최근 북한의 외래관광객은 한국의 2~3% 수준인 20만명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2년 남북한을 합친 외래 관광객은 1,140명 정도로 추정
 - 북한의 적극적인 관광 진흥책 실시에다가 중국의 對북한 관광객이 최근 급증(2009년 9.6만명 → 2012년 23.7만명)¹¹²⁾하면서 북한의 외래 관광객수는 2012년에 26만명~30만명에 추정되며
 - 남한과 합쳤을 경우, 남북한 외래 관광객은 2012년 1,140만명에 달함
- 남북한을 합친 관광산업 규모는 약 240억 달러로 추정되어 세계 17위 수준
 - WTTC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의 관광산업의 GDP기여도(직접 효과 기준) 결과를 기초로 산출¹¹³⁾
 - 북한의 관광산업 규모는 GDP기여도를 기여도하위국가의 평균수준인 1.5%로 적용해 보면 3억~4억 달러로 추정
 - 여기에 남한의 236억달러(2012년)와 더하면 남북한을 합친 관광산업 규모는 약 240억 달러로 세계 17위 수준

〈남북한의 외래 관광객 (추정)〉

(단위: 만 명)

연도	남한 (C)	북한 (D)	합계 (C+D)	D/C	중국의 대북한 관광객
'09	782	11~12	793~794	2%	9.6
'10	880	15~16	894~896	2%	13.1
'11	980	22~24	1001~1004	2%	19.4
'12	1,114	26~30	1140~1143	3%	23.7

〈남북한 관광산업 순위 (추정)〉

(단위: 억 달러)

구분	관광산업	순위
미 국	4,330	1
중 국	2,200	2
일 본	1,280	3
프랑스	1,010	4
영 국	860	5
남북한 합계	240	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국 國家旅游局, UNWTO(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 WTTC(세계여행산업회의).

주 : 1) 중국 國家旅游局에서는 입국목적 구분없이 전부 관광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
 2) 북한 외래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중 중국인 관광객을 80%~90%로 가정하고 추정.

112) ① 2009년 중국과 북한 양국간에 관광협력의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중국의 對북한 관광이 활성화,
 ② 『중국 관광업 통계 공보』(중국 國家旅游局, 각년도)에서는 전부 관광객으로 계상.

113)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Economic Impact Research, 각년도.

- (전망)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시장 확대로 인근 국가와 동남아, 구주 관광객까지로 급격히 확대되어, 2050년 외래관광객 수는 최대 2억 명, 관광산업 규모는 최대 2,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한반도~중국 동북 3성~러시아 연해주 간의 극동 지역 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본을 비롯, 동남아 국가와 유럽 및 미주 국가의 관광객이 증대
 - 단기적으로 북한 지역의 자유로운 관광, 사업 목적의 관광 입국이 증가하고, 이에 대응한 관광 시설 및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이 진행
 -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륙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한편, 자연 관광 중심에서 레저 목적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산업이 본격 성장
- (외래 관광객 수) 통일한국의 외래 관광객 수는 2020년 최대 3천만 명에 달하고, 지속적인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2050년에는 2억 명으로 확대
 - UNWTO는 '10~30년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을 동북아시아 4.9%, 전세계 3.3%로 전망¹¹⁴⁾
- (관광산업 규모) 통일한국의 관광산업 규모는 2020년 최대 450억 달러에 달하고, 이후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객 수요 확대로 2050년에는 2,500억 달러로 성장
 - WTTC는 2024년 관광산업의 GDP기여도를 전세계 3.1%, 남한 2.1%로 전망¹¹⁵⁾

〈 통일 후 한반도 관광객 수 및 관광산업 규모 추정 〉

구 분	계획개발 단계 (2015~ 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외래 관광객 수 (만 명)	2,500~3,000	7,000~7,700	18,000~20,000
관광산업 규모 (억 달러)	350~450	800~900	1,600~2,5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각 단계별 최종 년도의 추정치를 의미.

114) UNWTO, UNWTO Tourism Highlights 2013 Edition, 2013.10.
 115) WTTC,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Research 2014, 2014.

4. 시사점

- 통일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구축,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공유, 정치·경제적 추진력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남과 북의 민·관 모두가 통일과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 노력을 지속
 -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소득격차 축소, 당국자 간 신뢰 회복, 긴장 완화 및 화해 무드 전환의 계기를 마련
 - 통일 이후 성장이 주목되는 12대 산업에 대한 발전 로드맵 및 시나리오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극대화
 -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
 - 12대 중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추진력을 확보
 -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남북협력기금 확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등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추진력을 강화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

2016년 10월 초판 발행

발행인 강인수
편집인 이부형
필진 이해정, 이용화 외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대표전화 : (02)2072-6305

인쇄처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 02-2636-0555

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전화 02-2072-6222, 6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